

# 국민통합의식에 관한 연구

2013.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김미곤 김문길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국민대통합위원회



## 제출문 <<

본 보고서를 「국민통합의식에 관한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 머리말 <<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 ‘압축 민주화’, ‘압축 복지’를 달성한 세계에서 유래 없는 나라인 동시에 단 하나 남은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압축’과 ‘분단’이 최근 ‘국민통합’이라는 숙제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200여년 이상 걸려 달성해온 경제적 풍요와 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를 단 몇 십 년 만에 따라잡으려다 보니 어찌 무리가 오지 않겠는가. 게다가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제약이 또 한 번의 도약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다.

전근대와 근대, 여기에 탈근대를 넘나드는 통시적 공간에 살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아노미현상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무서운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이 대외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무엇을 준거로 삼고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최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통합’을 향후 10년의 화두로 꼽고 있는 것도, 전경련이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3대 전제 중 하나로 ‘국민통합’을 꼽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2013년 7월 이 같은 국민통합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열망을 안고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국민통합의 여망이 절실한 만큼 국민대통합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민이 인식하는 통합과 갈등의 수준, 원인과 대응책 등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이 느끼는 통합의 ‘온도’를 계측하고 아울러 향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여유진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미곤 연구위원, 김문길 연구위원, 정해식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김성아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조사를 성심껏 수행해 주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보고서는 소통과 공감에 바탕을 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한 시도으로써 의미 깊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전략과 과제 수

---

립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 목 차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13</b>
제1절 연구 목적 및 본 조사연구의 특징 .....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제3절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23
<b>제2장 주관적 계층의식 및 이념성향의 분포 .....</b>	<b>27</b>
제1절 분석 배경 .....	29
제2절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	30
제3절 이념성향의 분포 .....	36
제4절 소결 .....	43
<b>제3장 국민대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인식 .....</b>	<b>45</b>
제1절 분석 배경 .....	47
제2절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인식 .....	49
제3절 국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6
제4절 소결 .....	73
<b>제4장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b>	<b>75</b>
제1절 분석 배경 .....	77
제2절 주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78
제3절 소결 .....	112

---

<b>제5장 국민통합관련 현 쟁점에 대한 인식 .....</b>	<b>117</b>
제1절 복지지출 확대 및 자원 마련 방법 .....	119
제2절 공공정책 갈등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 .....	132
제3절 소결 .....	139
 <b>제6장 정책적 제언 .....</b>	<b>143</b>
 <b>참고문헌 .....</b>	<b>149</b>
 <b>부록 .....</b>	<b>151</b>

## 표 목차

〈표 1-1〉 주요 설문 항목 및 설문 의도 .....	23
〈표 1-2〉 응답자 특성 .....	24
〈표 2-1〉 집단별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	31
〈표 2-2〉 집단별 이념적 성향의 분포 .....	38
〈표 3-1〉 집단별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	51
〈표 3-2〉 통계청 사회조사의 다른 사람의 준법수준 평가와의 비교 .....	55
〈표 3-3〉 집단별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	56
〈표 3-4〉 집단별 국민통합의 의미에 대한 인식 차이 .....	61
〈표 3-5〉 집단별 국민통합 전제조건의 인식 차이 .....	64
〈표 3-6〉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와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	67
〈표 3-7〉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와 인구집단별 상관관계 .....	68
〈표 3-8〉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의 설명요인(회귀분석 결과) .....	69
〈표 3-9〉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의 설명요인(회귀분석 결과) .....	72
〈표 4-1〉 사회집단 간 갈등의 정도 .....	79
〈표 4-2〉 연도별 사회갈등 영역별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평균점수) .....	80
〈표 4-3〉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회귀분석 결과) .....	100
〈표 4-4〉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회귀분석 결과) .....	102
〈표 4-5〉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	104
〈표 4-6〉 연도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	106
〈표 5-1〉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	121
〈표 5-2〉 학력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	128
〈표 5-3〉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	128
〈표 5-4〉 최근 갈등의 유형과 해결방식 .....	132
〈표 5-5〉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처방식 .....	134
〈표 5-6〉 정부정책 갈등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37

## 그림 목차

[그림 2- 1]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 .....	30
[그림 2- 2] 성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	32
[그림 2- 3] 연령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	33
[그림 2- 4] 이념적 성향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	34
[그림 2- 5] 소득수준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	35
[그림 2- 6] 학력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	35
[그림 2- 7] 직업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	36
[그림 2- 8] 이념적 성향의 변화 .....	37
[그림 2- 9] 연령대별 이념 성향 .....	39
[그림 2-10] 지역별 이념 성향 .....	40
[그림 2-11] 소득계층별 이념 성향 .....	41
[그림 2-12] 학력별 이념 성향 .....	42
[그림 2-13] 직업별 이념 성향 .....	42
[그림 3- 1]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	49
[그림 3- 2] 집단별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연령, 지역, 이념성향) .....	53
[그림 3- 3]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	54
[그림 3- 4] 집단별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성, 연령, 주관적 소득계층) .....	58
[그림 3- 5] 집단별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학력, 직업) .....	58
[그림 3- 6] 국민통합의 의미 .....	59
[그림 3- 7] 이념성향별 국민통합의 의미 .....	62
[그림 3- 8] 국민통합의 조건 .....	63
[그림 3- 9] 이념성향별 국민통합의 전제조건 .....	65
[그림 4- 1] 사회집단 간 갈등의 정도 평가 .....	79
[그림 4- 2] 주요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추이(평균점수) .....	80
[그림 4- 3] 빈곤과 불평등의 추이 .....	82
[그림 4- 4] 연령별·학력별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	83
[그림 4- 5] 주관적 소득계층별·이념 성향별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	84
[그림 4- 6] 2012년과 2013년 이념갈등에 대한 평가 .....	85
[그림 4- 7] 연령별·성별·학력별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	86
[그림 4- 8] 이념 성향별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	86

[그림 4- 9]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	87
[그림 4-10]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 .....	88
[그림 4-11] 직업별·이념성향별 노사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	89
[그림 4-12] 지역별 지역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비율: %) .....	90
[그림 4-13] 연령별·성별·주부여부별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	92
[그림 4-14] 연령별·이념성향별 환경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심한편과 매우심한편:%) .....	94
[그림 4-15] 연령별·성별·학력별·소득별 다문화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	96
[그림 4-16] 지역별 다문화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과 인구 대비 외국인비율(%) .....	97
[그림 4-17] 연령별·성별 남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심한편과 매우심한편:%) .....	99
[그림 4-18]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1, 2순위 백분율) .....	105
[그림 4-19] 연도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의 우선순위 변화 추이 .....	107
[그림 4-20] 연령별·직업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의 우선순위(1순위) .....	108
[그림 4-21] 학력별·지역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의 우선순위(1순위) .....	108
[그림 4-22] 사회갈등 악화 요인 .....	111
[그림 4-23] 이념성향별 사회갈등 악화 요인에 대한 인식 .....	112
[그림 5-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2009년) .....	119
[그림 5- 2]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	122
[그림 5- 3] 연령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	123
[그림 5- 4] 주관적 소득계층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	123
[그림 5- 5] 월평균 소득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	124
[그림 5- 6] 학력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	126
[그림 5- 7] 이념성향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	127
[그림 5- 8]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	128
[그림 5- 9] 연령대별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	130
[그림 5-10] 학력별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	130
[그림 5-11] 이념성향별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	131
[그림 5-12] 연령·성별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처방식 .....	134
[그림 5-13] 주관적 소득계층 및 월소득별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처방식 .....	135
[그림 5-14] 이념성향별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처방식 .....	136
[그림 5-15] 연령별·학력별 정부정책 갈등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38
[그림 5-16] 월 소득 및 이념성향별 정부정책 갈등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39



## 1. 서론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사회는 최근 10여 년간 계층, 세대, 지역 갈등 분출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국민통합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민통합의 제고는 대내외적 급변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 발전의 안정적 기반과 국민 행복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긴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민통합 및 갈등해소 정책 추구의 선행 조건으로서 국민통합의식의 파악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 각 영역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 해소의 우선순위, 현재의 쟁점에 대한 국민의 의견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 □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동향 및 본 조사연구의 특징

- 사회통합이 국내외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최근 들어 관련 조사와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각 조사연구들은 연구수행의 목적과 주요 분석 내용 등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음.
- 본 연구는 대내외적 정세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에 맞추어 기존 조사연구들의 설문 내용 답습을 지양하고, 시의성 높은 통합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문항을 설계하여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2장에서 본격적인 국민통합에 대한 분석에 앞서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이념적 성향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 4장에서는 사회갈등 수준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5장에서는 국민통합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위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전화조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표 개발과 분석을 위해 기존 문헌 검토,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이 활용되었음.

-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RDD 방식이 적용된 CATI시스템을 활용함.

## 2. 주관적 계층의식과 이념성향의 분포

□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이념성향은 사회전반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본 조사를 통해 본 2013년 우리나라의 계층의식 분포는 중간층(40.6%)>중하층(27.5%)>저소득층(18.7%)>중상층(12.3%)>상위층(1.0%) 순으로 나타나며, 이념 성향은 중도와 보수의 응답 비율이 37.4%로 같고,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다소 낮은 25.2%로 나타남.

- 한편, 이념성향에 있어 매우보수와 매우진보라고 응답한 양 극단의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의 5.7%로 극소수만을 차지하고 있음.

- 대체로 계층의식 분포는 예년 조사와 유사하지만, 2010년, 2012년에 비해 중상층 및 상위층 응답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념적 성향은 2010년 조사에 비해 보수적 성향이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계층의식은 성, 연령, 이념,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 이념 성향은 연령,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주관적 계층의식은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 하층(중하층 및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념적 성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영남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 국민대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인식

#### □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는 37.5%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 21.9%보다 많았으며, 나머지 40.7%는 보통이라고 평가하였음.
  - 5점 척도로 계산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3.2(표준편차, 0.22)로 응답자들은 자유와 권리의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함.
-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확인됨.
  - 20~40대는 낮다는 평가를, 50대 이상은 높다는 평가를 함.
  - 영남지역의 응답자가 높다는 평가를 함.
  - 이념성향이 보수적인 응답자가 높다는 평가를 함.

#### □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 우리 국민들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가 36.9%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평가 32.6%보다 많았으며, 나머지 30.6%는 보통이라고 평가함.
- 5점 척도로 계산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3.04(표준편차, 0.93)로 응답자들은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이 보통이라고 평가함.
-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는 여성이, 30대가,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간층인 집단이, 대학이상 학력자가 높게 나타났음.
  -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집단 구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국민들은 ‘국민통합’을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32.2%),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28.6%),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28.0%)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20대부터 40대까지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50대 이상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로 선택하였음.

○ 이념성향에 따라, 중도는 사회갈등의 해소를, 보수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진보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더 강조하였음.

□ 국민들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부패와 특권의 타파(30.2%), 정치안정(23.9%), 시민의식 제고(16.4%), 경제성장(11.5%), 기회균등(10.9%), 법치확립(7.3%)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60대는 정치 안정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부패와 특권의 타파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인식에서 집단별 차이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연령이었음.

○ 이것은 세대별로 현 사회에 대한 평가와 지향하는 사회의 모델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

○ 사회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직접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설정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4.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사회 각 영역에 걸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계층갈등(74.0%)과 이념갈등(72.7%)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이념갈등과 다문화갈등은 최근 심각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념갈등의 경우 2011년 3.48점에서 2012년 3.82점으로, 다시

2013년에는 3.99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계층갈등 인식과 관련하여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연령 제곱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역U’자형을 보인다는 의미.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층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다가 다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계층갈등을 덜 심각하게 여기는 형태임.
  - 주관적 소득계층은 일관되게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계층갈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념적 성향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만이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에 비해 계층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노사갈등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 중간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노사갈등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또, 매우 진보적인 사람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에 비해 노사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이념갈등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이념성향이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갈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은 ‘역U자형’으로 이념갈등에 영향을 미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념갈등을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념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또한 분명하게 드러남.
- 지역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지역별로 편차를 드러냄.
  - 영남인들은 서울 사람들에 비해 지역갈등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호남인들은 서울 사람들에 비해 지역갈등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연령과 성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
  - 연령과 연령제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며, 이는 앞서 계층 및 세대갈등과 유사하게 ‘역U자형’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세대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남녀갈등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문화갈등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경기·인천 지역이 서울 지역에 비해 다문화갈등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갈등과 관련해서도 계층·이념·세대갈등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역U자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간계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환경갈등을 약간 덜 심각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에 비해 환경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갈등해결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순위 갈등으로 계층갈등(28.1%)을 지목하고 있음. 이어서 이념갈등(26.%), 지역갈등(16.6%), 노사갈등(14.7%) 순이었음.
- 2순위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갈등은 계층갈등(19.7%)이었으나, 2위는 노사갈등(19.8%)이 차지했음. 이어서 이념갈등(16.8%), 지역갈등(15.9%)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이래의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갈등의 부동의 1순위는 ‘계층갈등’이었지만, 최근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신 이념갈등을 꼽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1순위)은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연령대별로는 20-40대의 경우 계층갈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30%를 넘었으나, 50대의 경우 26.2%, 60대의 경우 17.7%만이 계층갈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로 볼 때, 사무직 근로자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계층갈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자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이념갈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계층갈등(31.8%)과 이념갈등(23.7%)을, 중졸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지역갈등(25.8%)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꼽고 있다는 것임.
- 지역별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호남 응답자의 경우 지역갈등(33.8%)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는 것임.

#### □ 사회갈등 악화 요인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28.9%의 응답자가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꼽고 있음.
  - 이어서 23.7%는 ‘개개인의 이기주의와 강한 권리 주장’을 17.4%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경향’을, 13.8%는 ‘과도한 경쟁’을, 8.6%는 ‘서로간의 불신’을, 그리고 7.7%는 ‘토론문화의 미성숙’을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고 있음.
-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상당히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사회갈등 악화 요인으로 지적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반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26.3%가 과도한 경쟁을 사회갈등 악화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29.3%는 개개인의 이기주의를 사회갈등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5. 국민통합관련 현 쟁점에 대한 인식

### 가. 복지지출 확대 및 복지지출 자원 마련에 대한 인식

#### □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 의식

- 응답자의 72.1%가 복지지출 확대에 찬성하며, 이는 연령, 소득, 학력, 이념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복지욕구가 높은 50대 이상에서는 복지확대에 소극적이고, 세금부담 세대인 30, 40대에서 복지확대에 적극적인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남.
  -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적극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소극적임.
  - 학력별로 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적극적이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소극적임. 이 결과도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역설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념적으로는 진보적일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적극적이고, 보수적일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소극적임.
- 성별과 학력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음.
  - 연령과 소득은 복지지출 확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념성향은 복지지출 확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양이면 복지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

#### □ 복지지출 자원마련에 대한 국민 인식

- 전체적으로 1순위로 법인세 인상(42.3%), 이어서 세출조정(32.6%), 이용요금 인상(13.0%), 소득세 인상(12.2%) 순임.
  - 2순위에서도 소득세 인상이 가장 덜 선호됨.
  - 연령대별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30, 40대의 법인세 인상(42.3%)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50, 6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용요금 인상(13.0%)에 대한 선호가 큼.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법인세 인상을 선호하고, 소득세 인상과 이용요금 인상을 덜 선호함.
-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조달방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법인세 인상을 선호하고, 소득세 인상을 덜 선호함.

## 나. 공공정책갈등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

### □ 정부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반응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주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반응 양식을 조사한 결과,
  - 응답자의 35.5%는 ‘정부와 지역대표 간의 협상 결과에 따르겠다’는, 즉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식의 대응 양식을 선호하였음.
  - ‘어딘가에 들어서야 한다면 감내하겠다’는 수용적 반응(29.3%), ‘반대하지만 물리적 충돌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소극적 저항(23.8%)이 뒤를 이었음.
  - 한편, ‘이사가겠다’는 회피의 반응(7.8%)과 ‘무조건 반대하며,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적극적 저항의 반응(3.7%)도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응 방식은 인구학적 특징(연령, 성별)과 소득계층(주관적 소득계층, 월소득), 이념 성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20대와 30대의 경우 소극적 저항의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수용의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소극적 저항의 의사가 더 강할 뿐 아니라, 회피의 경향 또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소득계층별 대처 방식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상위층 응답자의 경우 저항보다는 회피, 즉 이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 이는 가용한 자원을 가진 경우 저항보다는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됨.
- 이념성향별 차이에서 두드러진 점은, 스스로를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적극적 저항과 수용 모두 다른 이념집단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
-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응방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 정부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결책

- 정부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울여야 할 가장 필요한 노력에 대한 조사 결과, 41.2%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달을 꼽았음.
  - 응답자의 33.3%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해결 문화 확산을 꼽았으며, 이어서 13.4%는 보상·이주 대책 등 갈등관련 법률 정비, 12.2%는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을 꼽았음.
- 정부의 갈등 해결 노력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 소득별, 이념성향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음.
  -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갈등해결 문화 확산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갈등법률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학력별 차이에서도 뚜렷했는데,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정보 공개 필요성을 좀 더 중시한 반면, 중졸 이하 학력자들의 절반 이상은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정부 갈등 해결 노력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문하고 있음.
  -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 공개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월소득 400만원대 응답자의 50%, 500만원 초과 이상 응답자의 45.5%가 투명한 정보공개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6. 정책적 제언

- 현 정부와 국민들의 국민통합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안고 2013년 7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하였음.
- 본 조사연구는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추어 본격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에 앞서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사업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되었음.
- 본 조사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이들의 의견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은 5% 내외의 극소수를 차지함.
- 둘째,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만큼 응답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낮추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표면적으로 세대갈등이 계층, 이념, 노사, 지역갈등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주요한 갈등 영역에서 연령은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향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함.
- 넷째,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자정, 부정부패의 타파,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실천 등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집단에 대한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본 조사를 통해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확인된 바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자질 요구와 법적·제도적 사회지도층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장치 보완에 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됨.

- 다섯째, 공공갈등 해소를 제도적 영역으로 담아내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해소를 위해 거버넌스 형성이 절실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본 조사연구의 특징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 제1절 연구 목적 및 본 조사연구의 특징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국민통합 제고의 필요성

○ 한국 사회는 압축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최근 10여 년간 계층, 세대, 지역 갈등의 분출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등 반복적인 경제위기의 여파가 사회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인과 가구경제의 불안정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불안과 국론 분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노인빈곤 문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 또한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기적인 선거(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와 정치적 동원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보다 오히려 지역갈등과 이념적 대립을 극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이 같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통해 유추해 볼 때 국민통합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 실제로 OECD 국가들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사회통합정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노대명, 2013).

• 주관적 의식 및 행동(선거참여, 정치적 관심, 사회참여, 일반적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 관용) 등을 통해 파악한 사

회적 결속력의 정도는 2010년 현재 OECD 29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1위

- 사회적 위험 및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국민소득 수준,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오염물질 배출량, 기대수명, 건강상태 등) 측면에서 본 한국의 사회적 안정성의 정도는 2010년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29위
- 경제사회적 기회의 형평성 및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조건의 상태(소득불평등, 빈곤율, 고용률, 고용보호, 사회지출 수준 등)의 측면에서 본 한국의 사회적 형평성 상태는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에 해당
- 삼성경제연구소(2013)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 고 주장(연합뉴스, 2013. 08. 21일자)
- 이는 27개국 중 4번째로 심각했던 2009년 연구 결과보다 더 악화된 것

○ 국민통합은 대내외적 급변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 발전의 안정적 기반과 국민 행복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통합도 제고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

- 대외적으로는 경쟁과 갈등의 격화, 세계경제의 침체, 중국, 인도 등 새로운 강국의 부상, 대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분배지표의 악화, 대북 문제 등은 한국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들
-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통합도의 제고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선결 과제
- 위 삼성경제연구소(2013)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21세기 중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들 역시 '다시' 사회통합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 즉, 국가 간 경제 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한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21세기 국민통합 문제의 특징은 현재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충격과 그로 인한 국가적 명운의 불확실성 앞에서 경제사회적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적 결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민통합 및 갈등해소 정책 추구의 선행 조건으로서 국민통합의식 파악의 필요성

- 국민통합도 제고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함은 이미 밝힌 바와 같으며,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국민들이 국민통합의 현 수준, 갈등의 원인과 요소,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매년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여러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지만,
  - 정치·경제·사회가 시시각각 급변해가는 상황 속에서는 기존의 국민의식 항목과 더불어 시의성과 대응성을 갖춘 2013년 현재 시점에서의 국민통합의식 조사 수행 필요
  - 이를 통해 개인·지역 특성별, 영역별 국민통합의식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민통합도 제고 노력의 타겟팅과 우선순위 선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민통합의식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이 왜 분열되고 갈등하는지,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 내지 의식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근거중심-evidence-based-접근).
  - 국민의 생각과 무관한 사회통합정책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음.
  - 특히, 사회통합은 국민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중심의 정책추진이 필수적임.
- 특히, 급변하는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에서 시의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국민의식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정치적 상황과 국민의식이 얼마나 조응하는지 혹은 어떠한 측면에서 일관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민통합정책의 역량 집중과 분산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 각 영역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 해소의 우선순위, 현재의 쟁점에 대한 국민의 의견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얻는데 조사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함.

## 2.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동향 및 본 조사연구의 특징

□ 사회통합이 국내외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최근 들어 관련 조사와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먼저,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꼽을 수 있음.

- 이 조사는 전화조사 2회(2010, 2012년), 면접조사 1회(2011년)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전화조사의 경우 전국 성인 남녀 2,000명, 면접조사의 경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 설문문항은 사회통합의 영역(계층·이념·지역·세대·노사·다문화갈등 등), 사회통합의 전제조건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조사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 사업수행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 바 있음.

- 사회통합과 관련한 조사연구로서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정성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 실태조사>(2011~)는 좀 더 대규모로 매년 진행되고 있음.

- 2011년에는 <공정성·사회갈등·사회통합 실태조사>를 8000명 대상의 면접조사로 실시함.
- 2012년에는 2011년도 관련 문항을 보완 및 재구성하여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4001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는 4000명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하였음.
- 2013년에는 다시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분리되었으며, 동 조사는 통계청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매년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주요 설문문항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의 정도, 우리사회에 대한 가치관, 사회통합의 실태 등이 포함됨.

○ 사회통합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지속성 조사연구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2003~)를 들 수 있음.

-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1972년 최초로 창안되어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국제비교를 위한 종합사회조사(GSS)의 한국판으로 2003년 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 11차 조사까지 수행되었음.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방식으로, 표본의 크기는 제1,2,3차 조사에서는 2,000명이었으나 표본오차를 줄이고 유효 표본을 늘리고자 제3차부터 2,500명으로 확대(제11차 유효표본수는 1,535)
- 설문 문항으로 정치성향,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투표행위, 한국 정치에 대한 전망, 주변국에 대한 선호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북한에 대한 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등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조사연구들은 연구 수행의 목적과 주요 분석 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첫째, 대내외적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은 사회통합위원회와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의식조사>의 핵심 내용 중 일부를 준용함으로써 기존 조사결과와의 일관성을 통한 종단 연구의 이점을 취하되,
- <국민통합의식조사>가 가지는 정체성 내지 독자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문 문항과 보고서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고자 함.

- 둘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정체성과 향후 과제, 그리고 시의성 높은 통합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문항을 설계하고자 함.
  - 올해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출범 원년으로서 향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어떠한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임.
  - 따라서 국민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 현재의 갈등 이슈 등을 중심으로 설문문항을 설계함으로써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셋째, 조사 문항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결정 요인 분석 등을 통해 함의를 얻고자 함.
  - 본 연구는 국민통합의 전제 조건, 현황 및 최근 이슈, 목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개인특성별(성별·연령별·소득계층별·교육수준별·직업별), 성향별(계층의식별·이념성향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기존의 동일 혹은 유사 문항과의 종단적 비교 분석하고,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국민통합의식의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함.
  - 이러한 다차원적 비교 분석과 결정요인 분석 등을 통해, 현시점에서의 변화상과 주요 쟁점을 좀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고자 함.
- 넷째, 정책적 시사점과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분석의 중심을 두고자 함.
  -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통합의 현황과 최근 이슈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민통합도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바의 주요 과제를 선별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음.
  - 따라서 본 조사연구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얻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제1장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국민통합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근거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민통합의식조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음.
  - 또한, 조사 연구의 추진 방법과 조사의 기초적인 결과를 제시하였음.
- 2장에서는 본격적인 국민통합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이념적 성향을 분석하는데 할애하였음.
  - 즉, 계층을 저소득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위층으로 분류할 때 응답자의 계층 분포를 살펴보고, 인구학적 특성과 이념성향별 계층분포를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이념적 성향을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매우 진보적의 5개 집단으로 분류할 때 응답자의 분포를 확인하고, 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분포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후 국민통합의식 분석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3장에서는 국민통합의 개념과 국민통합을 위한 조건에 대한 국민의식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수준과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이 ‘권리의 향유와 의무의 준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국민통합의 추진에 앞서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또,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전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조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국민통합의 추진 동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4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의 사회갈등 수준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는데 할애되었음.

- 먼저, 계층, 노사, 이념, 지역, 세대, 다문화, 남녀, 환경의 8가지 영역에서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인구학적 특성별·지역별·소득계층별·이념적 지향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하였음.
- 이러한 사회갈등 영역 중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갈등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식을 검토하였음.
- 마지막으로,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6가지 요인-과도한 경쟁, 선정적인 언론 보도, 개개인의 이기주의, 상호 불신, 미성숙한 토론문화, 사회지도층의 부도덕 -중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갈등 악화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제5장에서는 현(조사)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국민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현안, 즉 복지지출 확대 및 재원 마련 방법과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 방식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였음.

-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어떠한 조세의 인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하였음.
- 공공정책갈등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행동 양식과 정책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우선 순위 확인을 통해 공공갈등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국민통합의식 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음.

□ 본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화조사 기법이 활용되었으며, 조사표 개발과 분석을 위하여 기존 문헌 검토, 자문회의 등의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음.

- 전화조사 방법과 조사 개요에 대해서는 3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제3절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 2013년 국민통합의식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00명
- 조사방법: 전화조사
  -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이 적용된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
- 표본추출 :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지역, 성, 연령별로 추출한 다단계층화추출법(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 조사기간 : 2013. 10. 29. ~ 11. 08.
- 신뢰수준 : 95% ± 2.19%p
- 조사기관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 주요 조사 내용

- 주요 조사 내용과 설문 의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주요 설문 항목 및 설문 의도

영역	설문 항목	설문 의도
국민통합의 의미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수준과 의무수준 평가</li> <li>■ 국민통합의 의미</li> <li>■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li> </ul>	국민통합 정책 추진의 근거 및 방향
사회갈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계층·이념·지역·세대 등) 갈등의 심각성, 시급히 해결할 갈등</li> <li>■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li> </ul>	영역별 갈등수준 확인, 국민대통합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 및 부담의 우선순위</li> <li>■ 공공정책 갈등에 대한 대응방식 및 정부의 노력</li> </ul>	국민통합 관련 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확인 및 방향 설정

□ 조사결과의 시계열 비교시 연도별 조사방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 2010년 : 전화조사, 2,000명(유선)
- 2011년 : 면접조사, 1,000명(복지의식조사와 병행)
- 2012년 : 전화조사, 2,000명(RDD 방식 CATI 시스템)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1-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 체		(2,000)	100.0
성별	남성	(977)	48.9
	여성	(1,023)	51.2
연령별	20대	(356)	17.8
	30대	(424)	21.2
	40대	(448)	22.4
	50대	(359)	18.0
	60대 이상	(413)	20.7
지역별	서울	(414)	20.7
	부산	(146)	7.3
	대구	(101)	5.1
	인천	(108)	5.4
	광주	(60)	3.0
	대전	(61)	3.1
	울산	(43)	2.2
	경기	(450)	22.5
	강원	(62)	3.1
	충북	(64)	3.2
	충남	(84)	4.2
	전북	(74)	3.7
	전남	(73)	3.7
	경북	(109)	5.5
	경남	(129)	6.5
	제주	(22)	1.1

구분		빈도	백분율
주관적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374)	18.7
	중하층	(550)	27.5
	중간층	(812)	40.6
	중상층	(245)	12.3
	상위층	(19)	1.0
월평균 가구소득별	100만원 이하	(177)	8.9
	101-200만원 이하	(261)	13.1
	201-300만원 이하	(414)	20.7
	301-400만원 이하	(419)	21.0
	401-500만원 이하	(264)	13.2
	501-600만원 이하	(165)	8.3
	601만원 이상	(189)	9.5
	무응답	(111)	5.6
학력별	중졸이하	(186)	9.3
	고졸	(683)	34.2
	대졸이상	(1,113)	55.7
	무응답	(18)	0.9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8)	0.4
	자영자(경영자)	(296)	14.8
	생산직 근로자	(104)	5.2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725)	36.3
	가정주부	(535)	26.8
	학생	(130)	6.5
	무직/기타	(202)	10.1





## 제2장 주관적 계층의식 및 이념성향의 분포

제1절 분석 배경

제2절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제3절 이념성향의 분포

제4절 소결



# 2

## 주관적 계층의식과 이념성향의 분포 <<

### 제1절 분석 배경

□ 사회구성원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이념성향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못지않게 정치·사회·경제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통합 제고 방안 마련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 Veenhoven(2002)은 계층의식과 관련하여, 개인의 계층 인식이 그의 객관적 계층 위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층의식은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회계층뿐 아니라 주관적 계층의식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계층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계층의식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소득, 교육, 직업 등을 들고 있음(서광민, 2009; 이병훈·윤정향, 2006, 김병조, 2000; 장상수, 1996).

○ 또한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증가하고, 그것의 이념적 가치에 대한 보도가 잦아지는 등, 지역갈등과 노사갈등 만큼 이념적 균열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균열(cleavage)의 축으로 자리 잡았기(한준·설동훈, 2006) 때문에 이념적 성향의 분포가 집단 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념갈등의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심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계층갈등 74.0%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갈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우 심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이념갈등(30.5%)이 계층갈등(24.9%)보다 높게 나타남.

## 제2절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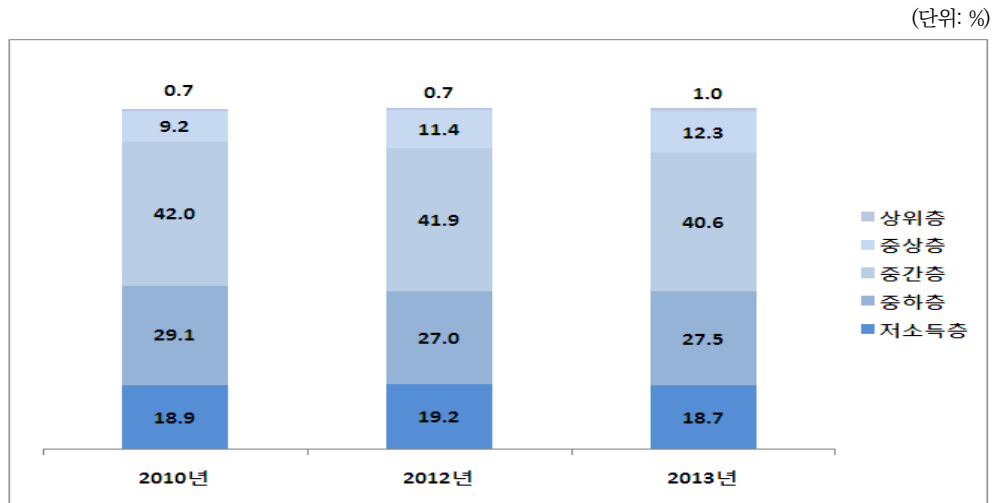
### 1.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2013년 현재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6% 가장 높으며, 중하층(27.5%), 저소득층(18.7%), 중상층(12.3%), 상위층(1.0%)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10년,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는 중간층>중하층>저소득층>중상층>상위층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2010년, 2012년에 비해 중상층 및 상위층 응답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



주: 2011년은 타 년도와 계층 구분 및 조사방식이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각년도

### 2. 집단별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집단별로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이념, 소득, 학력, 직업 집단 간 응답항목의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령,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 등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별은 0.05수준, 이념성향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역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표 2-1〉 집단별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단위: %)

구분		저소득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X <sup>2</sup>
전체		18.7	27.5	40.6	12.3	1.0	100.0	
성별	남성	20.4	29.5	37.0	12.3	0.9	100.0	11.848*
	여성	17.1	25.6	44.1	12.2	1.0	100.0	
연령	20대	12.9	27.5	43.0	15.2	1.4	100.0	58.079***
	30대	13.0	28.8	43.9	13.2	1.2	100.0	
	40대	17.0	29.7	41.5	10.7	1.1	100.0	
	50대	20.9	25.4	39.8	13.1	0.8	100.0	
	60대 이상	29.5	25.7	34.9	9.7	0.2	100.0	
지역	수도권	17.5	27.6	41.1	12.9	1.0	100.0	2.277
	비수도권	19.8	27.4	40.2	11.7	0.9	100.0	
	서울	16.2	26.3	43.7	12.3	1.5	100.0	13.773
	경기,인천	18.5	28.5	39.1	13.3	0.7	100.0	
	강원,충청	18.1	28.0	42.1	11.8	0.0	100.0	
	영남	19.3	28.6	38.8	12.1	1.1	100.0	
	호남	23.7	24.6	40.6	9.7	1.5	100.0	
이념	매우 보수적	31.6	25.0	36.8	4.0	2.6	100.0	32.368**
	보수적	19.8	28.0	40.0	11.6	0.6	100.0	
	중도적	19.3	27.7	40.0	12.2	0.9	100.0	
	진보적	14.2	27.3	43.6	14.2	0.9	100.0	
	매우 진보적	18.4	23.7	34.2	18.4	5.3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3.7	29.2	14.6	1.8	0.7	100.0	862.903***
	201~300만원 이하	16.7	44.7	34.3	4.1	0.2	100.0	
	301~400만원 이하	8.4	28.4	52.7	10.3	0.2	100.0	
	401~500만원 이하	3.0	19.7	62.5	14.8	0.0	100.0	
	500만원 초과	2.5	10.7	47.5	35.3	4.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50.5	22.0	23.1	3.8	0.5	100.0	275.225***
	고졸	26.7	31.8	36.3	4.6	0.7	100.0	
	대학이상	9.5	26.3	45.6	17.5	1.2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16.9	25.0	43.6	13.2	1.4	100.0	46.818***
	사무직/서비스직	16.1	28.0	41.1	13.8	1.0	100.0	
	근로자	38.5	34.6	24.0	1.9	1.0	100.0	
	주부/기타	19.1	27.1	41.1	11.9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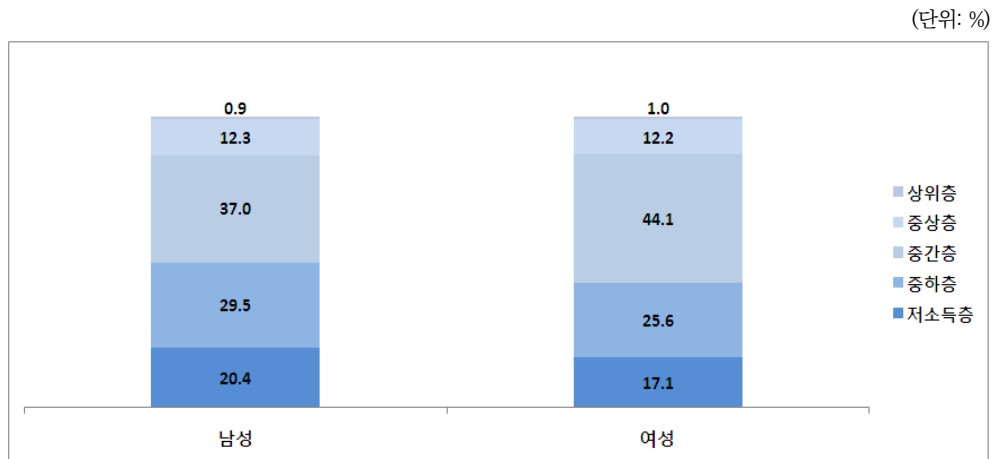
주: 1) 주부/기타는 무직, 농림어업, 가정주부, 학생 등 포함

2) \* p<0.05, \*\* p<0.01, \*\*\*: p<0.001

□ 먼저 주관적 계층의식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것에 비추어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계층 인식에 다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44.1%로 남성 37.0% 보다 다소 높은 반면, 하층(저소득층 및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49.9%로 여성 42.7%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그림 2-2] 성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주:  $X^2 = 11.848$  Pr = 0.0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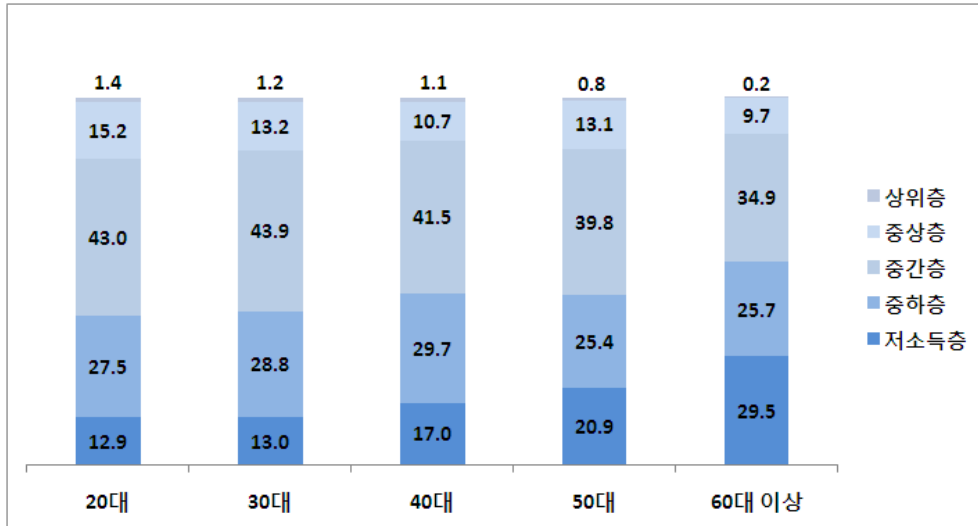
□ 연령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하층(중하층과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40대보다 50~60대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하층(중하층과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에서 40.4%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55.2%로 다소 높게 나타나며,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가 43.9%로 가장 높으며, 60대가 34.9%로 가장 낮음.

-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근로활동 및 소득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음. 즉,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는 연령에서는 계층의식이 다소 높고, 그렇지 않은 고연령층에서는 계층의식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그림 2-3] 연령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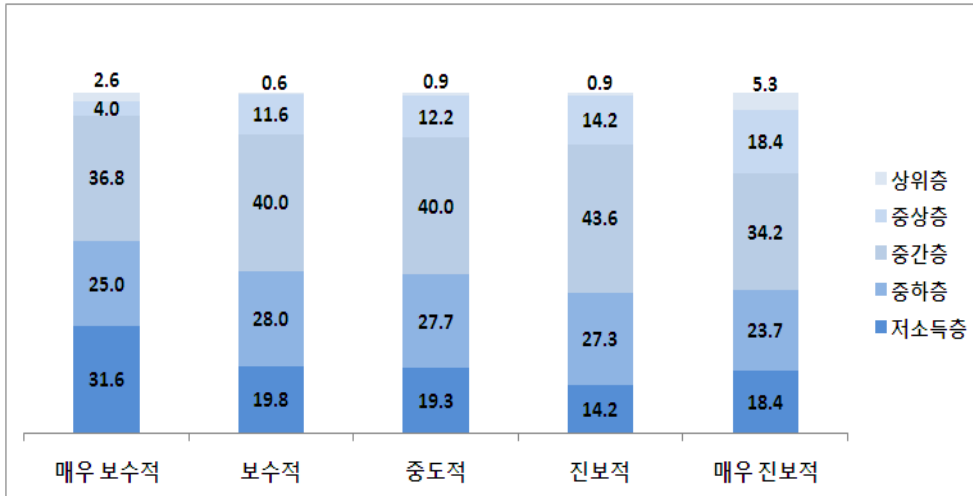
(단위: %)

주:  $\chi^2 = 58.079$   $Pr = <.0001$ 

- 주관적 소득계층 의식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중하층과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상층(상위층과 중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이념적 성향이 극단인 매우보수와 매우진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는 보수, 중도, 진보로 응답한 집단에서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매우 보수와 보수, 매우 진보와 진보 간의 중간층 인식 차이가 보수와 중도, 진보와 중도 사이의 중간층 인식 차이보다 크게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음.
    -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34.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진보적 이념성향의 정도에 따라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 이념적 성향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단위: %)



주:  $X^2 = 32.368$   $Pr = 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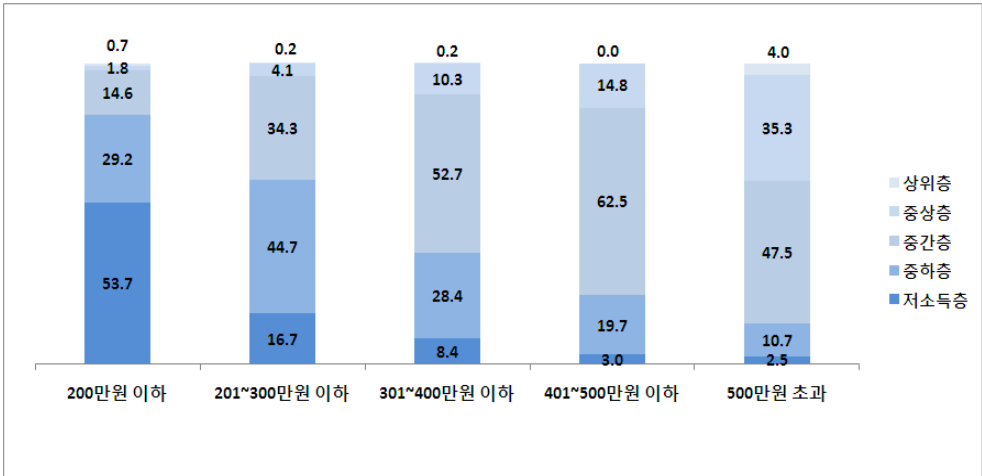
□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주관적 소득계층 의식을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하층(중하층과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층(상위층과 중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계층의식 사이에 대체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

○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스스로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응답 비율이 53.7%로 과반수가 넘고, 반대로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초과 집단에서는 중상층 및 상위층이라는 응답이 각각 35.3%, 4.0%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1~500만원 이하 집단에서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5] 소득수준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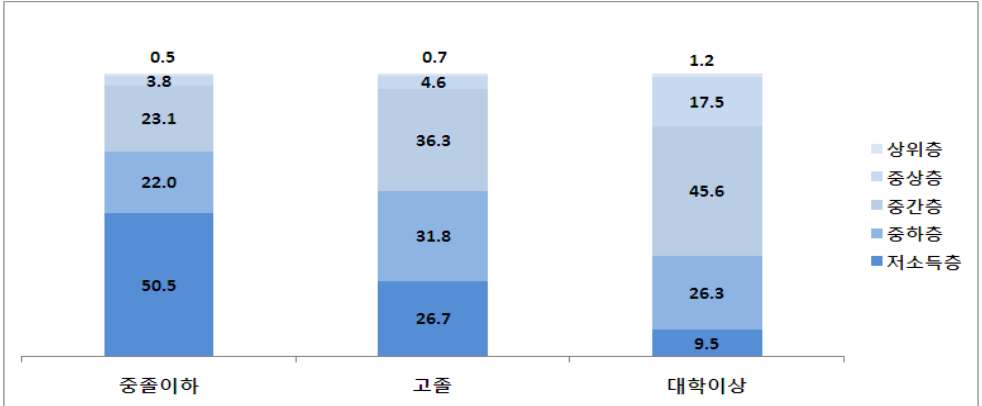


주: 1)  $X^2 = 862.903$  Pr =  $<.0001$   
2) 무응답 제외

- 학력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중간층 및 중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졸이하 집단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높으며,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대학이상 집단에서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6] 학력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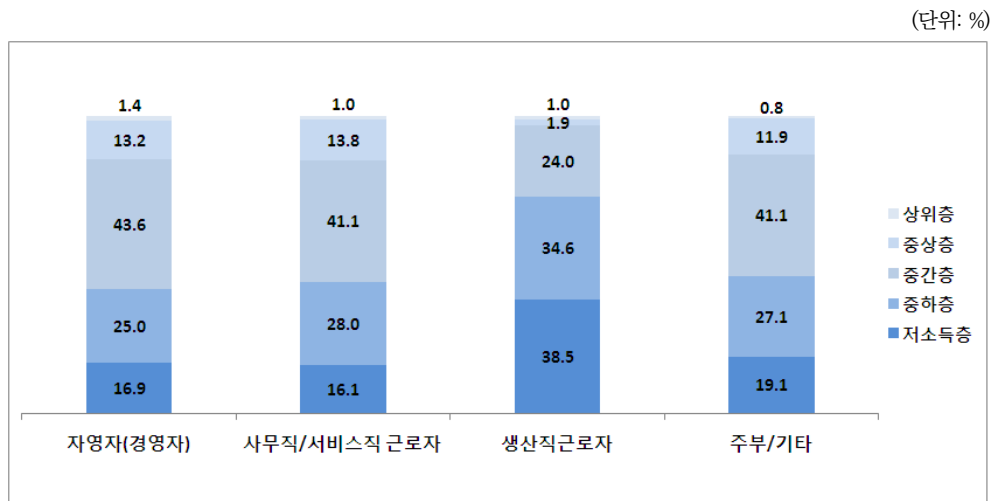
(단위: %)



주: 1)  $X^2 = 275.225$  Pr =  $<.0001$   
2) 무응답 제외

- 주관적 소득계층은 직업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생산직 근로자 집단은 중하층 및 저소득층 응답이 73.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자영자(경영자) 43.6%,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41.1%, 주부/기타 41.1%로 유사한 수준이나, 생산직 근로자는 24.0%만이 중간층이라고 응답함.
- 생산직근로자는 다른 직업 집단과 비교해 계층의식 분포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그림 2-7] 직업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주: 1)  $\chi^2 = 46.818$   $Pr = <.0001$

2) 주부/기타에는 주부, 무직, 농림어업, 학생 등이 포함됨.

## 제3절 이념성향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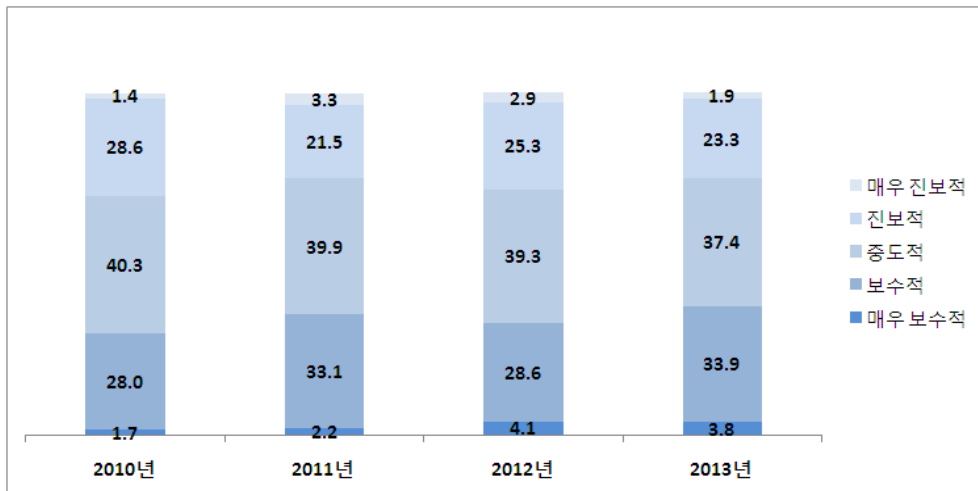
### 1. 이념성향의 분포

- 이념적 성향은 2013년 현재 진보적이라 응답한 비율이 25.2%, 중도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1.9%,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3.8%로 각각 진보 전체 응답의 7.5%, 보수 전체 응답의 10%에 해당함.
  - 또한 매우 진보와 매우 보수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7%에 해당하여 양 극단의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p 감소하였고, 중도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p 감소하였으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p 증가하였음.
- 2010년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성향의 응답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 다소 보수적 성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8] 이념적 성향의 변화

(단위: %)



주: 2010, 2012, 2013년은 전화조사, 2011년은 면접조사로 수행되어 2011년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자료: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각년도

## 2. 집단별 이념성향의 분포

- 이념적 성향에 대해 집단별로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연령, 지역, 주관적 소득 계층,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 집단 간 응답항목의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과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별 이념 성향 응답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2-2〉 집단별 이념적 성향의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보수적	다소 보수적	중도적	다소 진보적	매우 진보적	전체	X <sup>2</sup>
전체		3.8	33.9	37.4	23.3	1.9	100.0	
성별	남성	4.4	32.0	37.9	23.2	2.5	100.0	6.436
	여성	3.2	35.1	37.0	23.4	1.4	100.0	
연령	20대	2.3	23.6	43.8	29.2	1.1	100.0	173.635***
	30대	1.4	25.2	38.7	32.3	2.4	100.0	
	40대	3.1	27.5	38.4	27.7	3.4	100.0	
	50대	4.7	41.5	34.8	17.8	1.1	100.0	
	60대 이상	7.5	50.6	31.7	9.0	1.2	100.0	
지역	수도권	3.4	32.8	37.4	24.9	1.5	100.0	4.498
	비수도권	4.2	34.3	37.5	21.8	2.2	100.0	
	서울	3.1	34.8	37.7	22.5	1.9	100.0	27.412*
	경기, 인천	3.6	31.4	37.1	26.7	1.3	100.0	
	강원, 충청	5.5	34.7	37.6	19.6	2.6	100.0	
	영남	4.6	37.9	35.0	20.3	2.3	100.0	
	호남	1.9	25.6	41.6	29.5	1.5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6.4	35.6	38.5	17.7	1.9	100.0	32.368**
	중하층	3.5	34.2	37.6	23.1	1.6	100.0	
	중간층	3.5	33.1	36.8	25.0	1.6	100.0	
	중상층	1.2	31.8	37.1	26.9	2.9	100.0	
	상위층	10.5	21.1	36.8	21.1	10.5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8.5	40.6	34.3	14.8	1.8	100.0	69.134***
	201~300만원 이하	2.9	34.5	37.7	23.4	1.5	100.0	
	301~400만원 이하	2.9	33.4	36.5	26.0	1.2	100.0	
	401~500만원 이하	1.9	29.6	37.5	27.7	3.4	100.0	
	500만원 초과	2.3	28.3	37.9	29.1	2.5	100.0	
학력별	중졸이하	7.0	41.4	40.9	10.2	0.5	100.0	80.555***
	고졸	4.5	43.5	30.3	19.7	2.0	100.0	
	대학이상	2.9	27.5	40.3	27.3	2.0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3.7	30.4	34.1	28.4	3.4	100.0	61.864***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2.1	28.4	38.3	29.0	2.2	100.0	
	생산직 근로자	4.8	34.6	33.7	25.0	1.9	100.0	
	주부/기타	5.1	38.9	38.2	16.7	1.1	100.0	

주: 1) 기타는 무직, 농림어업, 가정주부, 학생 등 포함

2)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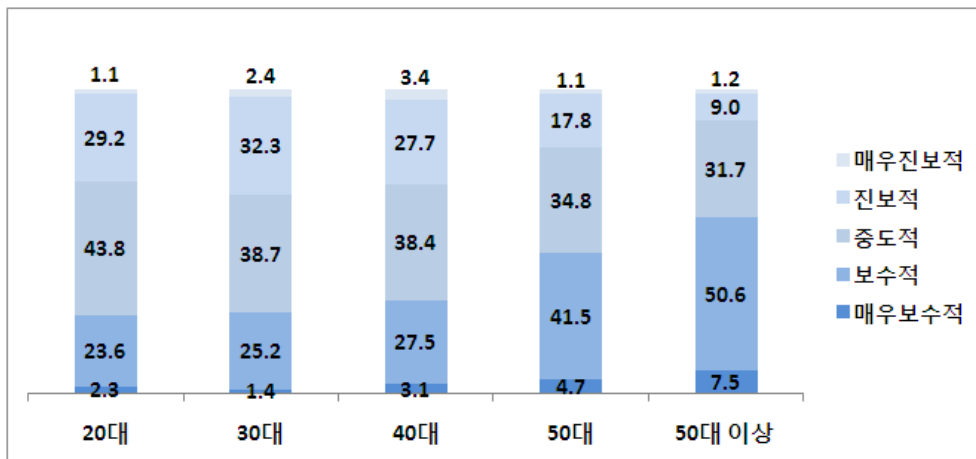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20대~40대는 중도>진보>보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50~60대 이상은 보수>중도>진보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25.9%, 30대 26.6%, 40대 30.6%, 50대 46.2%, 60대 58.1%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단, 20대는 중도 43.8%, 진보 30.3%, 보수 25.9%로 나타나 중도적 성향이 가장 강하며, 30대 보다 진보적 성향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연령대별 이념 성향

(단위: %)



주:  $X^2 = 173.635$   $Pr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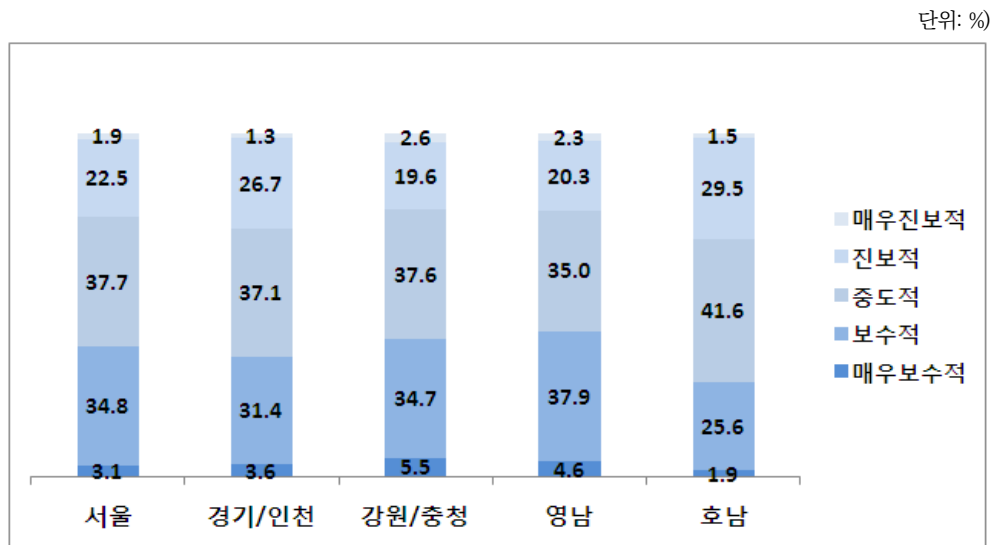
□ 지역별 이념 성향은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응답 분포가 달라짐.

○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념 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서울, 경기·인천, 강원·충청, 영남, 호남으로 지역을 구분하면 지역별 이념 성향의 차이가 나타남.

○ 진보적 성향은 호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보수적 성향은 영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진보적 성향은 호남>경기·인천>서울>영남>강원·충청 순이고, 보수적 성향은 영남>강원·충청>서울>경기·인천>호남 순이며, 중도 성향은 호남>서울>강원·충청>경기·인천>영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0] 지역별 이념 성향



주:  $\chi^2 = 27.412$  Pr = 0.0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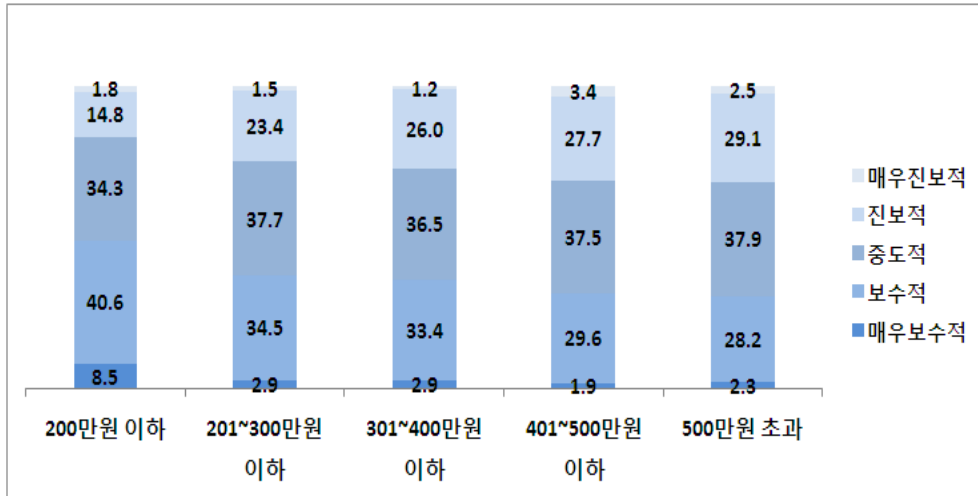
□ 소득계층별 이념 성향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감소하고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소득이 낮을수록 진보적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로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이념 성향의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음.

-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보수적(49.1%)>중도적(34.3%)>진보적(16.6%) 응답 순으로 나타나고, 500만원 초과 가구에서는 중도적(37.9%)>진보적(31.6%)>보수적(30.5%) 응답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1] 소득계층별 이념 성향

(단위: %)

주:  $X^2 = 69.1344$   $Pr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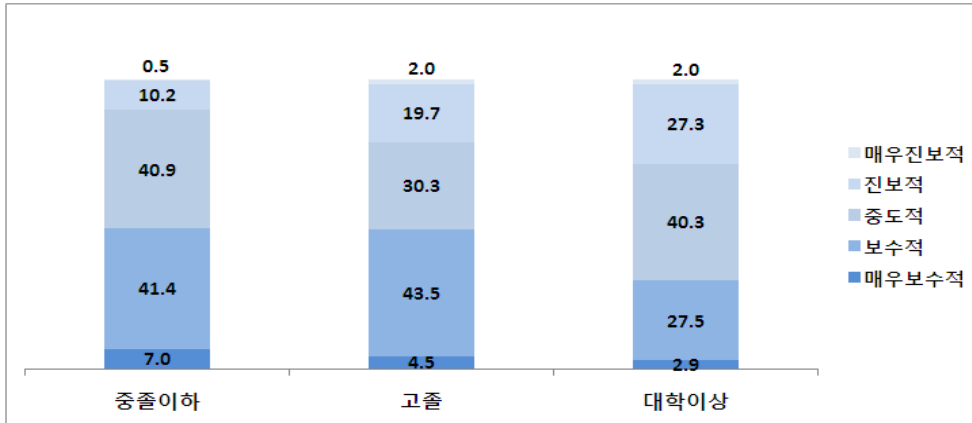
□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중도적,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보수적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졸이하 48.4%, 고졸 48%, 대학이상 30.4%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보적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졸이하 10.7%, 고졸 21.7%, 대학이상 29.3%로 나타나고 있음.

○ 중도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졸이하 40.9%, 대학이상 40.3%, 고졸 30.3%로 나타나고 있어, 고졸 집단의 이념성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림 2-12] 학력별 이념 성향

(단위: %)



주: 1)  $\chi^2 = 80.555$  Pr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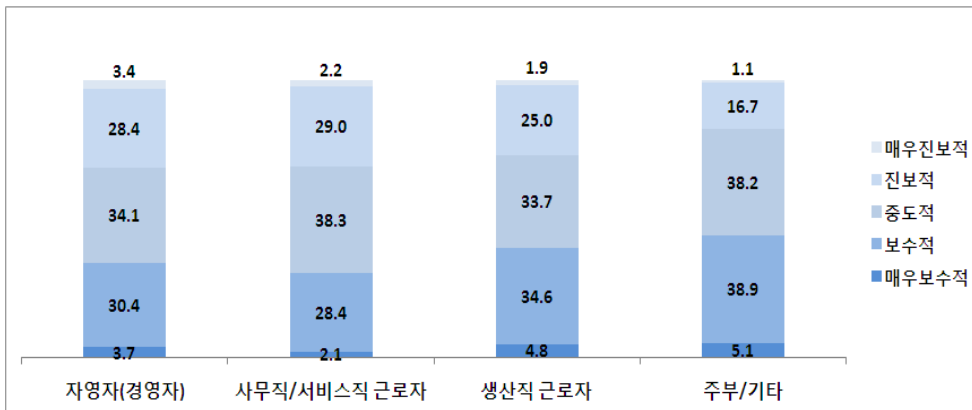
2) 무응답 제외

□ 직업 집단에 따른 이념성향을 살펴보면, 주부/기타의 집단에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직 근로자(39.4%), 자영자(34.1%),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30.5%) 순으로 나타남.

○ 주부/기타 집단은 다른 직업 집단에 비해 보수적 성향이 다소 강하고, 진보적 성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3] 직업별 이념 성향

(단위: %)



주: 1)  $\chi^2 = 61.864$  Pr = <.0001

2) 주부/기타에는 주부, 무직, 농림어업, 학생 등이 포함됨.

## 제4절 소결

-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이념성향은 사회전반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본 조사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계층의식 분포는 중간층>중하층>저소득층>중상층>상위층 순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 2012년 조사 결과와 유사 분포를 보이며, 중상층 및 상위층 응답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념 성향은 중도와 보수가 37.4%로 같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다소 낮은 25.2%로 나타나며, 보수와 진보의 이념 성향 응답이 유사하였던 2010년에 비해 다소 보수적 성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매우진보와 매우보수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7%에 해당하여 양극단의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만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음.
- 주관적 계층의식은 성, 연령, 이념,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 이념 성향은 연령,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성별에 따라 주관적 계층의식 차이는 나타나지만, 이념성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이념성향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주관적 계층의식은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 하층(중하층 및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념성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영남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부/기타의 직업 집단인 경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제3장 국민대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인식

제1절 분석 배경

제2절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인식

제3절 국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4절 소결



# 3

## 국민대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인식

### 제1절 분석 배경

#### 1. 국민통합의 개념

- 국민통합은 학술적 용어로서의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실천적 용어로 재규정한 것임.
- 사회통합은 소속감, 적극적 참여, 신뢰, 평등, 포용(inclusion)과 사회이동 등 여러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OECD, 2011)
  -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안녕을 위해 힘쓰고, 배제나 주변화를 방지하고, 소속감과 신뢰를 증진시키며, 사회 구성원에게 상향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통합적’ 사회라 부를 수 있을 것.
- 사회통합이란 “가치공유 및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갈등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상태”를 지칭하는 것임(노대명 외, 2010).
- 학술적·실천적 개념 규정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2. 국민통합의 조건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 ‘국민통합’의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문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음.
- 기존의 설문조사는 통합의 개념적 추상성으로 인하여 통합 개념을 직접 질문하기보다는 통합을 위한 정책기조를 묻는 방식을 선택하였음.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회균등, 법치주의의 정립, 시민의식의 제고 등 사회적 대응 방향 위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음.
- 한국 사회에 시급한 통합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개념 설정과 관련됨.
  - 사회통합을 엄밀하게 정의내리고, 그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사회통합이 부재하거나 퇴조된 조건을 지표로 하여 우회적 방법으로 정의하였음.
  -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의 충족 과정을 사회통합이라고 보았던 것임.
- 국민통합의식 설문조사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통합’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으로 설문방식을 변경함.
  -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의 네 문항 중 선택하도록 함.
- 사회통합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회갈등의 관리에 있으며, 갈등의 근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인정과 신뢰,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함.
  - 사회통합은 1) 소득·부의 불균형, 인종 간 긴장, 정치참여 격차 등과 같은 잠재적인 갈등요인 부재, 2) 신뢰, 호혜성과 규범, 네트워크에 기초하는 강한 사회적 연대와 다양한 갈등관리 제도의 존재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짐(Colletta & Cullen, 2000).
  - 국민들이 판단하는 자유와 권리,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의 제반 여건 속에서 각 개인들이 누리고 수행하고 있는 자유와 책임 수준에 대한 평가는 갈등의 근저라 할 수 있음.

○ 국민통합의식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국민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 기존의 설문조사들이 준법의식(통계청, 사회조사 2012), 시민의식(한국행정연구원, 사회갈등·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2012)을 묻는 것에 비해 본 조사는 대등하는 개념인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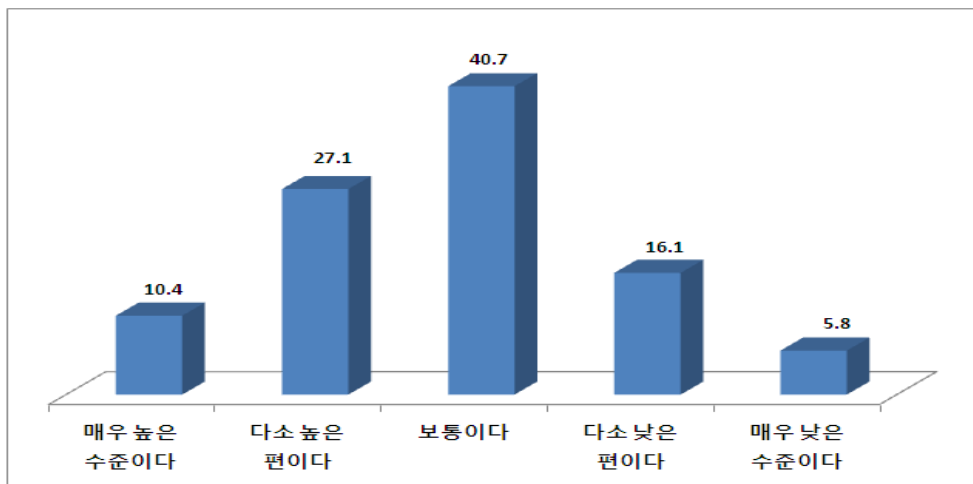
## 제2절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인식

### 1.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까지 5개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의 분포는 다음 [그림 3-1]과 같음.

[그림 3-1]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37.5%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 21.9%보다 많았으며, 나머지 40.7%는 보통이라고 평가하였음.

- ‘매우 높은 수준이다’는 평가의 응답률은 10.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는 평가의 응답률 5.8%보다 약 2배 가량 높음.

○ 이를 1점 ‘매우 낮은 수준’ ~ 5점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3.2(표준편차, 0.22)으로, 응답자들은 우리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집단별로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의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표 3-1>), 집단 간 응답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성,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이념성향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소득에 따른 구분(주관적 소득계층, 월평균소득)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 남성은 보통이라는 평가보다는 높다는 평가와 낮다는 평가로 크게 구분되는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보통이라는 평가의 응답률이 높음.

○ 연령대별로 구분할 때 고연령일수록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저연령일수록 낮다는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졌음.

- 50대와 60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는 평가가 각 16.2%, 19.9%로 평균의 약 2배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음.
- 일자리, 복지지출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같이 실질적 차원이 아닌 가치갈등과 같은 전통적 세대갈등의 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별로 구분할 때 영남지역 응답자들이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다는 응답률(48.1%)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의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의 비율이 높아짐.

-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다는 응답률은 집단별 차이가 크지 않았음.

〈표 3-1〉 집단별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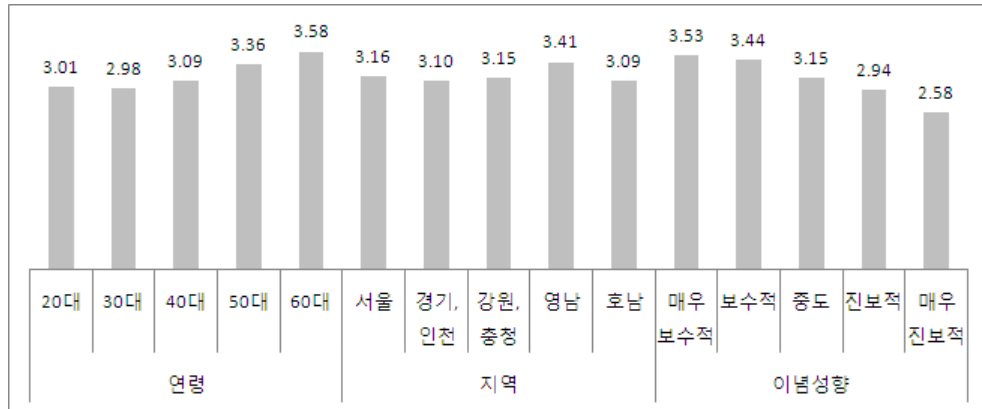
구분		높음			보통	낮음			$\chi^2$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성별	남	38.4	12.5	25.9	37.6	24.1	17.2	6.9	18.744**
	여	36.7	8.4	28.3	43.6	19.8	15.0	4.8	
연령	20대	31.7	4.8	27.0	40.2	28.1	20.2	7.9	123.819***
	30대	28.5	5.2	23.4	43.4	28.1	20.3	7.8	
	40대	33.5	6.5	27.0	42.6	23.9	17.2	6.7	
	50대	42.6	16.2	26.5	39.0	18.4	14.2	4.2	
	60대	51.6	19.9	31.7	37.5	10.9	8.5	2.4	
지역	서울	34.3	10.1	24.2	42.0	23.7	19.3	4.4	51.804***
	경기, 인천	34.6	9.9	24.7	38.9	26.5	18.8	7.7	
	강원, 충청	33.6	8.9	24.7	44.3	22.1	16.6	5.5	
	영남	48.1	12.5	35.6	36.9	15.0	10.2	4.7	
	호남	30.0	9.2	20.8	46.9	23.2	16.4	6.8	
학력	중졸이하	33.9	10.2	23.7	52.2	14.0	12.9	1.1	28.596**
	고졸	39.1	12.3	26.8	42.1	18.9	13.4	5.5	
	대학이상	37.4	9.6	27.9	38.2	24.4	17.8	6.6	
	무응답	27.8	5.6	22.2	38.9	33.3	22.2	11.1	
직업	자영자(경영자)	38.9	12.2	26.7	38.9	22.3	15.9	6.4	37.091***
	사무직/서비스 직 근로자	34.8	9.1	25.7	37.1	28.1	20.1	8.0	
	생산직근로자	31.7	11.5	20.2	50.0	18.3	14.4	3.9	
	주부/기타	40.0	10.7	29.3	43.1	16.9	12.9	4.0	
이념성향	매우 보수적	37.5	10.4	27.1	40.7	21.9	16.1	5.8	116.344***
	보수적	45.8	15.6	30.2	39.9	14.3	10.9	3.4	
	중도	35.0	8.6	26.5	41.7	23.3	18.3	5.0	
	진보적	29.6	4.3	25.3	39.9	30.5	21.0	9.4	
	매우 진보적	13.2	0.0	13.2	47.4	39.5	23.7	15.8	
계		37.5	10.4	27.1	40.7	21.9	16.1	5.8	N=2,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 직업별로는 사무직, 서비스직 근로자가 자유와 권리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이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고,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낮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자는 자유와 권리 수준이 매우 높다는 응답률이 25%로 전체평균보다 2배 이상,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자는 매우 낮다는 응답률이 전체평균보다 약 3배 가량 높았음.
- 집단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1점(매우 낮음) ~ 5점(매우 높음)으로 전환하고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였음.
- 연령대별, 지역별, 학력별, 직업분류별, 이념성향별로 유의한 집단 평균 차이가 확인됨(.05 유의수준 기준).
  - 성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월소득대별 집단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각 집단의 평균값은 [그림 3-2]와 같음.
- 20대~40대는 전체 평균(평균점수, 3.20)과 비교할 때,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세대 간 평가의 상이함이 발견됨.
- 지역별로는 영남지역의 응답자가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 경기·인천 지역 응답자는 3.10점, 호남지역 응답자는 3.09점으로 평가
- 이념성향별로는 매우 보수적, 보수적인 응답자가 각각 3.53, 3.44의 평균점수로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음.
  - 진보적,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4, 2.58의 평균점수를 보였음. 이는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상당함을 의미함.

[그림 3-2] 집단별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연령, 지역, 이념성향)

(단위: 점)



주: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5점 ~ 매우 낮은 수준이다 1점(보통이다 3점)으로 측정함.

2) 연령별  $F = 27.54$  ( $p < .001$ ), 지역별  $F = 7.82$  ( $p < .001$ ), 이념성향별  $F = 23.58$  ( $p < .001$ )

## 2.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 응답자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에 대한 평가를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에서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까지 5개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의 분포는 다음 [그림 3-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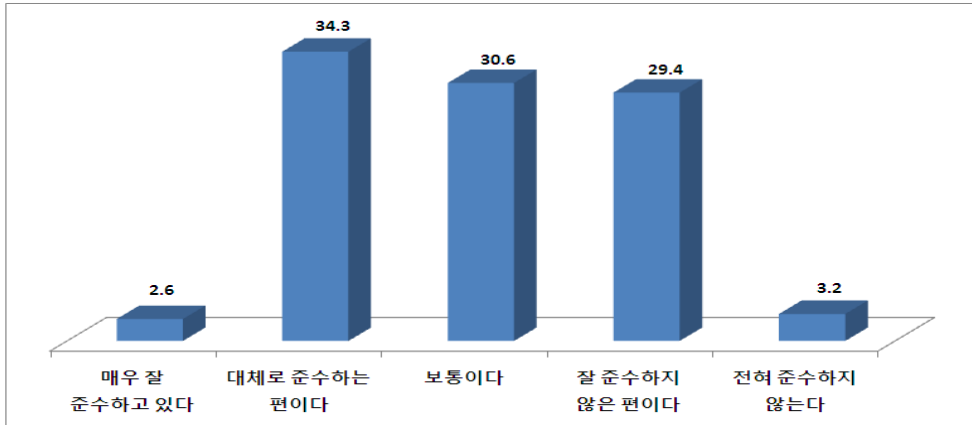
○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가 36.9%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평가 32.6%보다 많았으며, 나머지 30.6%는 보통이라고 평가하였음.

-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의 응답률은 2.6%,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3.2%의 응답을 보여서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양극단의 평가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이를 1점 ‘전혀 준수하지 않음’ ~ 5점 ‘매우 잘 준수함’으로 계산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3.04(표준편차, 0.93)으로, 응답자들은 우리 국민이 주어진 위치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보통수준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림 3-3]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 책임과 의무의 준수와 유사한 설문 문항과 국민통합의식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이번 조사에서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을 10점 척도로 전환(2 ‘전혀 준수하지 않음’ ~ 10 ‘매우 잘 준수함’)한 평균값은 6.07점으로 나타났음.

- 한국행정연구원(2012)의 시민 의식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시민의식의 정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평균 시민의식 점수는 6.48 점으로 나타났음.
- 국민통합 의식조사 결과는 권리와 책임의 의무 준수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두 차례의 통계청 사회조사의 타인의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면, ‘지킨다’ 또는 ‘준수한다’와 같은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지키지 않는다’ 또는 ‘준수하지 않음’과 같은 부정적 평가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정적 평가의 증가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평가가 점차적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쳐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평가가 양극단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사회적 준거나 규범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통합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표 3-2〉 통계청 사회조사의 다른 사람의 준법수준 평가와의 비교

(단위: %)

구분		지킨다			보통이다	지키지 않는다		
			아주	비교적			비교적	전혀
타인평가	2010년	31.2	2.0	29.2	47.3	21.5	20.6	0.9
	2012년	34.3	2.4	31.9	39.4	26.4	24.5	1.8
구분		준수함			보통	준수하지 않음		
			매우 잘 준수함	대체로 준수함			잘 준수하지 않음	전혀 준수하지 않음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	2013년	36.9	2.6	34.3	30.6	32.6	29.4	3.2

주: 2010년 조사는 15세 이상 인구, 2012년 조사는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집단별로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의 응답분포를 분석한 결과(〈표 3-3〉), 집단 간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월평균소득, 직업유형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유와 권리 수준에서 유의하였던 거주지역 특성 역시 유의하지 않았음.

○ 남성은 국민들이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고, 여성은 반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전체 평균 수준보다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음.

- 50대 이상 연령집단은 준수한다는 평가 역시 전체 평균 수준보다 낮아서, 부정적 평가의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양극단에 있는 저소득층과 상위층에서 준수한다는 응답은 낮고,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높은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많았음.

○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준수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고학력일수록 준수한다는 평가가 많았음.

〈표 3-3〉 집단별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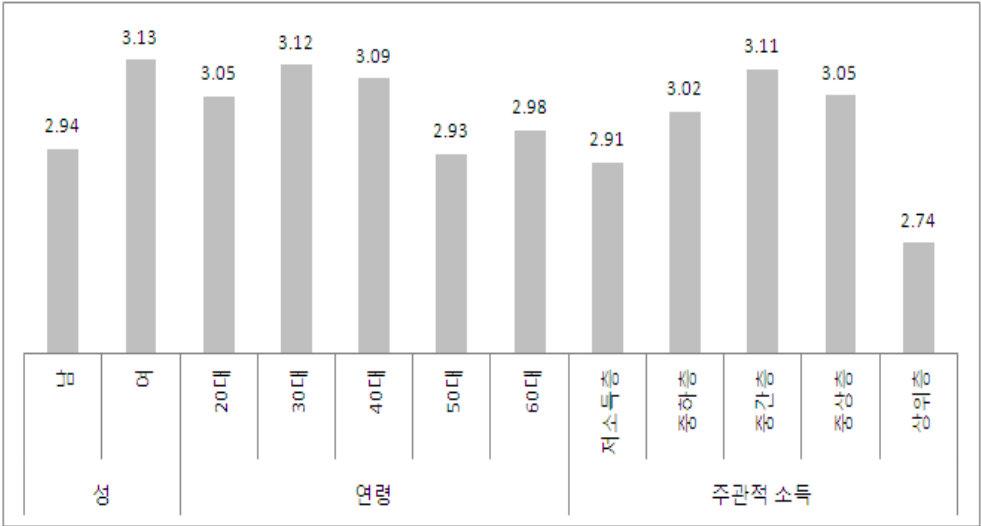
구분		준수함			보통	준수하지 않음			$\chi^2$
			매우 잘 준수함	대체로 준수함			잘 준수하지 않음	전혀 준수하지 않음	
성별	남	33.5	1.7	31.7	29.3	37.3	33.2	4.1	23.965***
	여	40.1	3.4	36.7	31.8	28.2	25.8	2.4	
연령	20대	36.8	0.8	36.0	34.6	28.7	24.7	3.9	35.002**
	30대	39.2	2.6	36.6	32.8	28.1	26.2	1.9	
	40대	39.5	2.7	36.8	29.2	31.3	29.2	2.0	
	50대	33.7	2.2	31.5	27.3	39.0	34.8	4.2	
	60대	34.4	4.4	30.0	29.1	36.6	32.2	4.4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31.0	2.7	28.3	32.1	36.9	31.0	5.9	40.239**
	중하층	36.6	3.3	33.3	28.4	35.1	32.2	2.9	
	중간층	38.8	2.6	36.2	32.8	28.5	26.5	2.0	
	중상층	40.4	1.2	39.2	26.1	33.5	30.6	2.9	
	상위층	31.6	0.0	31.6	26.3	42.1	26.3	15.8	
학력	중졸이하	26.3	3.8	22.6	37.1	36.6	32.8	3.8	23.200*
	고졸	35.1	2.7	32.5	29.8	35.1	32.0	3.2	
	대학이상	39.4	2.4	37.1	29.9	30.7	27.7	3.0	
	무응답	33.3	5.6	27.8	33.3	33.3	22.2	11.1	
직업	자영자(경영자)	32.1	1.4	30.7	32.1	35.8	32.8	3.0	19.957
	사무직/서비스 직 근로자	39.6	2.2	37.4	27.9	32.6	29.9	2.6	
	생산직근로자	27.9	1.9	26.0	34.6	37.5	30.8	6.7	
	주부/기타	37.3	3.4	33.8	31.8	31.0	27.7	3.3	
이념성향	매우 보수적	36.9	2.6	34.3	30.6	32.6	29.4	3.2	33.085**
	보수적	37.7	1.9	35.7	29.0	33.3	29.5	3.9	
	중도	36.4	3.2	33.2	33.6	30.1	27.7	2.4	
	진보적	36.7	2.2	34.6	29.8	33.5	31.3	2.2	
	매우 진보적	36.8	2.6	34.2	13.2	50.0	36.8	13.2	
계		36.9	2.6	34.3	30.6	32.6	29.4	3.2	N=2,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 직업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p=.068$ ). 생산직근로자와 자영업자(경영자) 집단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더 많이 하였고, 사무직과 서비스직 근로자, 주부 및 기타 집단들은 준수한다는 평가를 더 많이 하였음.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적, 진보적인 응답자 모두에서 잘 준수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 많았음.
  - 매우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응답률이 50.0%에 달하였음.
- 집단별로 비교를 위하여 1점(전혀 준수하지 않음) ~ 5점(매우 잘 준수함)으로 전환한 집단별 평균점수를 보면, 일부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별, 성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학력별, 직업분류별 집단 평균 차이가 확인됨(.05 유의수준 기준).
  - 거주지역별, 월소득대별, 이념성향별 집단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각 집단의 평균값은 [그림 3-4]와 [그림 3-5]와 같음.
- 여성은 우리 국민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가 3.13점으로 남성보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20대, 60대, 50대의 순서로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 30대(평균점수 3.12)와 50대(평균점수 2.93)의 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내보이고 있음.
-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가가 2.74점으로 가장 부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가가 3.11점으로 가장 긍정적 평가를 보였음.
  - 저소득층도 우리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해서 2.91점의 평가를 보여 낮은 수준이었음.

[그림 3-4] 집단별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성, 연령, 주관적 소득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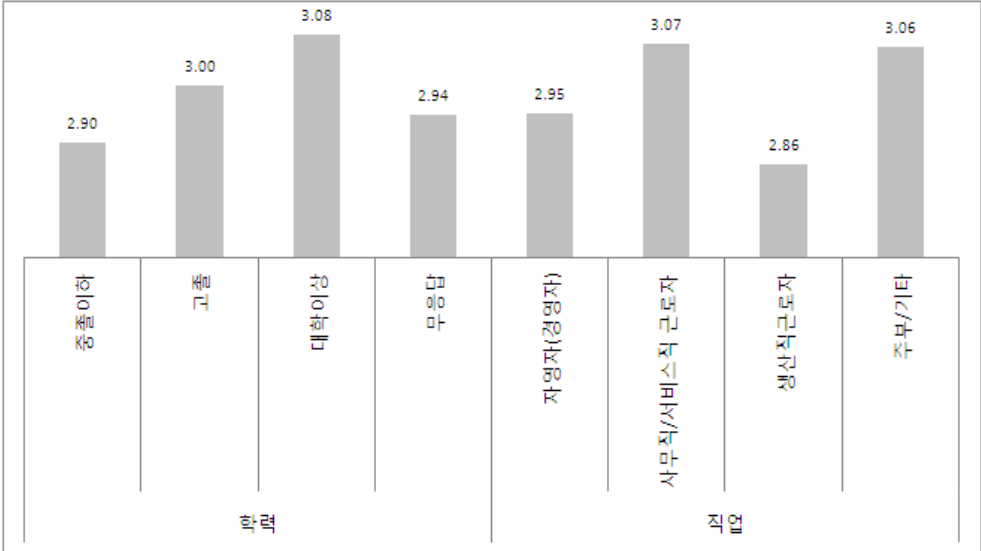
(단위: 점)



주: 1)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 5점 ~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1점(보통이다 3점)으로 측정함.  
2) 성별 F = 21.32 (p<.001), 연령별 F = 2.83 (p<.05), 주관적소득별 F = 3.58 (p<.01)

[그림 3-5] 집단별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학력, 직업)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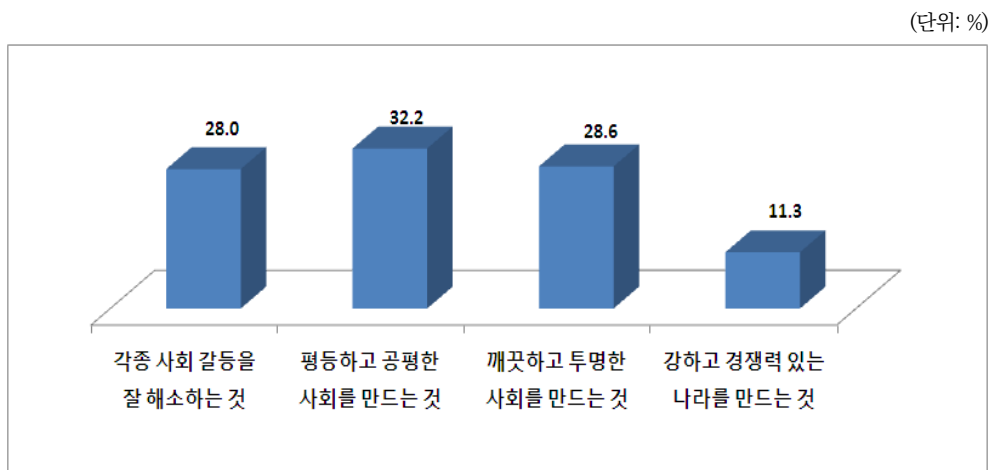
주: 1)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 5점 ~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1점(보통이다 3점)으로 측정함.  
2) 학력별 F = 2.73 (p<.05), 직업별 F = 2.74 (p<.05)

-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해서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를 보였음.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학력자의 평가가 낮았고, 대학이상 졸업 학력자의 평가가 높았음.
- 직업별로는 생산직근로자 집단이 우리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사무직 및 서비스직 근로자는 가장 높은 평가를 보였음.

### 3. 국민통합의 의미

-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통합의 개념에 대해 확인할 필요
-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함.
- 국민들은 ‘국민통합’을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32.2%),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28.6%),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28.0%)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는 만드는 것이라는 평가는 11.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그림 3-6] 국민통합의 의미



- 국민통합의 개념에 대한 응답은 거주지역,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 월평균소득, 학력, 직업, 이념성향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각종 사회갈등의 해소라는 응답비율이, 남성은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이 차이가 있음.
  - 20대부터 40대까지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음.
  - 50대 이상이 우리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에 낮은 평가를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면, 법치확립이나 시민의식 제고를 강조함을 알 수 있음.
-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음.
- 학력이 높을수록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고, 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음.
- 직업별로는 자영자(경영자),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주부 및 기타 집단에서 평등과 공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직 근로자 집단은 이보다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높았음.

〈표 3-4〉 집단별 국민통합의 의미에 대한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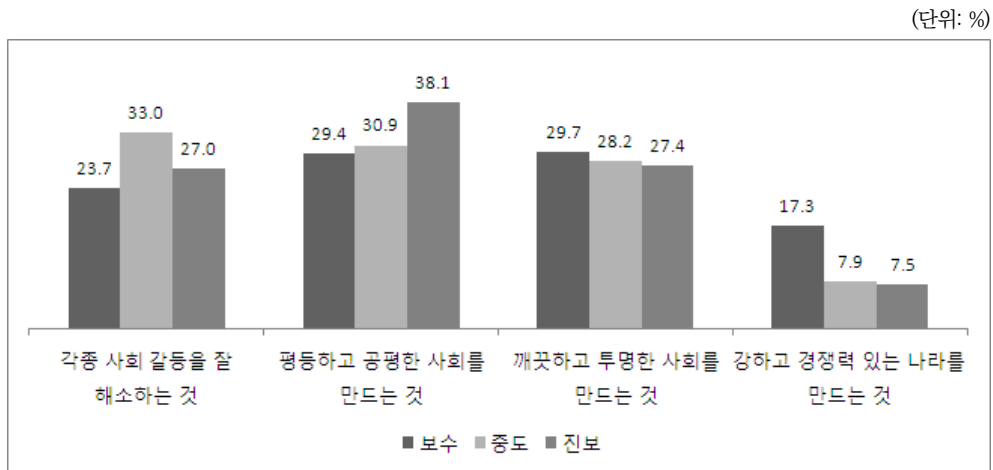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chi^2$
성별	남	25.9	31.4	29.5	13.2	18.744**
	여	30.0	32.8	27.7	9.5	
연령	20대	32.3	38.5	20.8	8.4	86.738***
	30대	33.3	34.0	23.8	9.0	
	40대	29.2	34.8	27.5	8.5	
	50대	25.6	25.1	37.9	11.4	
	60대	19.6	28.1	33.2	19.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1.0	34.0	29.7	15.3	27.754*
	200만원대	28.7	30.9	28.5	11.8	
	300만원대	30.3	34.1	28.6	6.9	
	400만원대	30.3	28.8	28.8	12.1	
	500만원초과	30.2	32.8	27.1	9.9	
	무응답	31.5	27.9	27.9	12.6	
학력	중졸이하	18.3	26.9	36.6	18.3	48.652***
	고졸	22.7	33.9	29.0	14.4	
	대학이상	32.3	32.1	27.0	8.6	
	무응답	22.2	33.3	33.3	11.1	
직업	자영자(경영자)	23.0	32.1	30.7	14.2	23.853**
	사무직/서비스 직 근로자	30.3	35.2	25.4	9.1	
	생산직근로자	21.2	26.9	40.4	11.5	
	주부/기타	28.6	30.3	29.0	12.1	
이념성 향	매우 보수적	23.7	23.7	18.4	34.2	84.332***
	보수적	23.7	30.1	31.0	15.3	
	중도	33.0	30.9	28.2	7.9	
	진보적	27.3	38.2	27.3	7.3	
	매우 진보적	23.7	36.8	29.0	10.5	
계		28.0	32.2	28.6	11.3	N=2,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 이념성향에 따른 국민통합의 의미에 대한 인식 차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집단(보수, 중도, 진보)으로 구분한 결과는 [그림 3-7]과 같음.
- 중도적 입장을 가진 사람은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의미에 가깝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보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이 각 29.7%, 29.4%로 높은 수준이었음.
- 진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은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음.

[그림 3-7] 이념성향별 국민통합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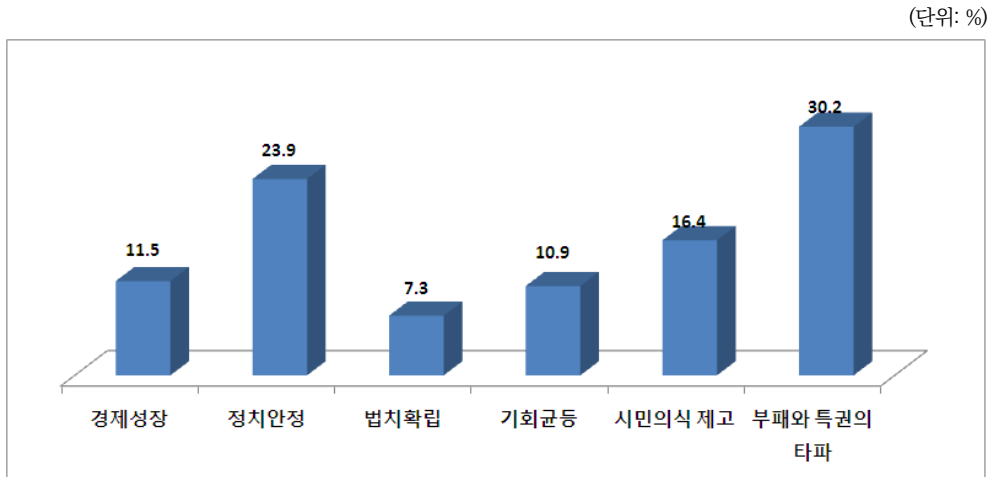


주:  $\chi^2 = 57.629$ ,  $p < 0.001$

#### 4. 국민통합의 조건

-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을 확인할 필요
- 응답자들은 부패와 특권의 타파(30.2%), 정치안정(23.9%), 시민의식 제고(16.4%), 경제성장(11.5%), 기회균등(10.9%), 법치확립(7.3%)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3-8] 국민통합의 조건



- 국민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해 지역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집단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패와 특권의 타파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높음.
- 60대는 정치 안정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부패와 특권의 타파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기회균등과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기회균등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경향이 확인됨.
-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부패와 특권의 타파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정치안정에, 상위층은 시민의식의 제고에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저소득층일수록 정치 안정을 더 강조하고 있음.
- 학력별로는 집단을 구분할 때에는 중졸 이하는 정치안정을, 고졸은 정치안정과 부패와 특권의 타파를, 대학이상 졸업자는 부패와 특권의 타파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3-5〉 집단별 국민통합 전제조건의 인식 차이

(단위: %)

구분		경제 성장	정치 안정	법치 확립	기회 균등	시민의식 제고	부패와 특권의 타파	$\chi^2$
성별	남	8.9	22.7	9.1	11.0	15.8	32.6	24.915***
	여	13.9	24.9	5.5	10.8	17.0	28.0	
연령	20대	8.7	18.5	5.6	16.0	21.1	30.1	134.857***
	30대	10.9	17.5	5.9	15.3	17.7	32.8	
	40대	11.4	19.0	6.9	10.7	15.4	36.6	
	50대	12.5	24.8	8.9	8.9	13.9	30.9	
	60대	13.6	39.5	9.0	3.6	14.3	20.1	
주관적 소득 계층	저소득층	13.9	31.3	6.7	7.5	16.6	24.1	40.204**
	중하층	10.9	24.2	5.6	12.7	14.9	31.6	
	중간층	10.8	22.2	8.3	10.5	17.2	31.0	
	중상층	11.4	18.0	7.8	13.5	15.5	33.9	
	상위층	5.3	15.8	15.8	5.3	31.6	26.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6.0	36.5	7.3	6.2	13.7	20.3	122.693***
	200만원대	10.9	24.4	7.5	11.1	17.6	28.5	
	300만원대	12.2	21.0	5.7	11.0	16.7	33.4	
	400만원대	7.2	21.2	5.7	12.9	19.7	33.3	
	500만원초과	10.2	12.7	10.2	13.0	13.8	40.1	
	무응답	7.2	24.3	6.3	16.2	21.6	24.3	
학력	중졸이하	21.0	42.5	5.4	2.7	14.5	14.0	114.671***
	고졸	12.8	27.0	8.1	8.1	17.1	27.0	
	대학이상	9.3	19.2	7.2	13.6	16.3	34.4	
	무응답	11.1	33.3	0.0	5.6	22.2	27.8	
직업	자영자(경영자)	9.8	23.0	6.8	8.5	16.2	35.8	42.417***
	사무직/서비스 직 근로자	10.2	18.5	7.2	13.4	16.6	34.2	
	생산직근로자	13.5	29.8	7.7	8.7	12.5	27.9	
	주부/기타	12.8	27.9	7.4	9.8	16.8	25.3	
이념 성향	매우 보수적	14.5	43.4	2.6	2.6	14.5	22.4	61.819***
	보수적	15.0	25.7	8.2	7.4	16.2	27.4	
	중도	9.8	22.9	7.6	12.7	16.7	30.4	
	진보적	9.0	19.3	6.0	14.2	16.5	35.0	
	매우 진보적	5.3	26.3	7.9	10.5	15.8	34.2	
계		11.5	23.9	7.3	10.9	16.4	30.2	N=2,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 직업별로는 자영자(경영자)와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는 부패와 특권의 타파에 대해, 생산직근로자와 주부 및 기타 집단은 정치 안정에 대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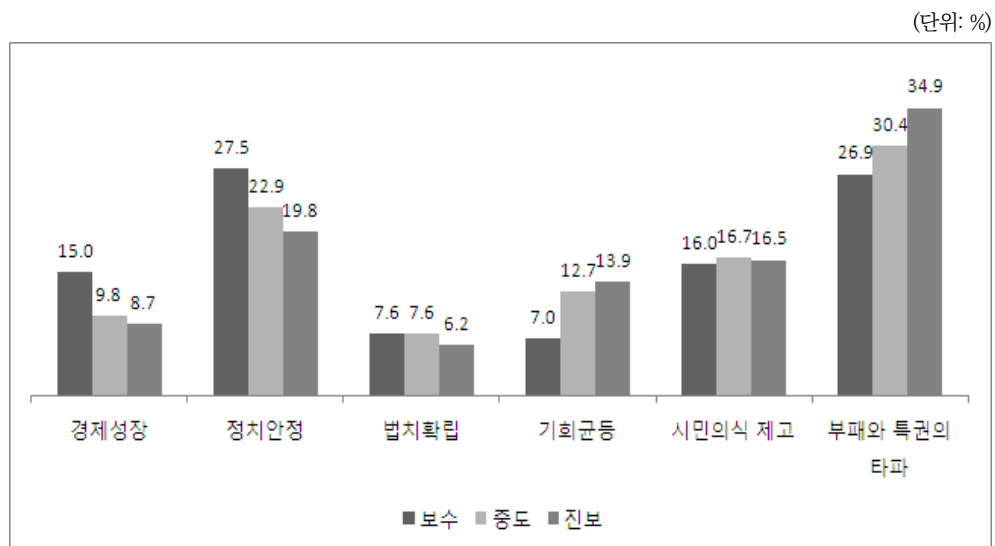
□ 이념성향에 따른 국민통합의 조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집단(보수, 중도, 진보)으로 구분한 결과는 [그림 3-9]와 같음.

○ 모든 집단에서 부패와 특권의 타파가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념적으로 보수인 응답자들은 정치안정에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이념적으로 진보에 가까울수록 부패와 특권의 타파에 더 강조하고 있으며, 반대로 이념적으로 보수에 가까울수록 정치안정에 더 강조하고 있음.

- 낮은 응답비율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경제성장을 지적한 비율은 보수일수록, 기회균등을 지적한 비율은 진보일수록 높았음.

[그림 3-9] 이념성향별 국민통합의 전제조건



주:  $X^2 = 46.027$ ,  $p < 0.001$

### 제3절 국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자유와 권리 수준, 책임과 의무 준수의 관계

- 자유로운 권리의 행사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가 자유와 권리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임.
- 5점 척도로 전환하여 측정한 결과,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와 책임과 의무 수준에 대한 평가는 .045( $p < .05$ )의 상관관계를 보였음(〈표 3-7〉 참조).
  - 자유와 권리: 매우 낮은 수준이다 1 ~ 매우 높은 수준이다 5
  - 책임과 의무: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1 ~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 5
- 낮은 상관관계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이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의 준수가 크게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
- 우리 사회의 자유와 권리 수준과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응답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3-6〉과 같음.
- 전체 응답자의 15.5%만이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고, 또한 국민들이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고 응답하였음.
  - 13.0%는 자유와 권리 수준은 높지만 책임과 의무는 준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음.

〈표 3-6〉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와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책임과 의무의 준수			계
		준수함	보통	준수하지 않음	
자유와 권리 수준	높은 수준	15.5	9.1	13.0	37.5
	보통	13.8	15.3	11.7	40.7
	낮은 수준	7.6	6.3	8.0	21.9
계		36.9	30.6	32.6	

□ 자유와 권리의 수준,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 하고 연속값으로 간주

○ 인구집단별 특징 역시 연속값으로 간주한 후 상관관계를 분석

- 연령: 20대(1) ~ 60대(5)
-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1) ~ 상위층(5)
- 이념: 매우 보수적(1) ~ 매우 진보적(5)

□ 연령, 소득계층, 이념성향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책임과 의무 준수에 대한 평가에서는 연령과 소득계층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자유와 권리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음.

○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를 하였음.

〈표 3-7〉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와 인구집단별 상관관계

구분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준수	연령	소득계층	이념성향
자유와 권리	1				
책임과 의무 준수	0.0454*	1			
연령대	0.2138***	-0.0509*	1		
소득계층	0.061**	0.0547*	-0.1351***	1	
이념성향	-0.2098***	-0.0029	-0.2508***	0.0801***	1

주: \* p<0.05, \*\* p<0.01, \*\*\*: p<0.001

## 2. 자유와 권리 수준, 책임과 의무 준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 자유와 권리 수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연령, 소득계층, 이념성향 등 집단별 특성에 따라 우리 사회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인식,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가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각 5점 척도로 구분한 후, 그 결정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함.

- 자유와 권리 수준: 매우 낮은 수준(1) ~ 매우 높은 수준(5)
-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 전혀 준수하지 않음(1) ~ 매우 잘 준수함(5)

□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성별은 남성, 학력은 중졸 이하, 지역은 서울, 직업은 자영자(경영자), 이념성향은 ‘매우 보수적’을 준거집단으로 함.

○ 기초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주관적 소득계층, 월평균 소득은 모형에 투입하지 않음.

○ 분석결과는 〈표 3-8〉과 같음.

〈표 3-8〉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의 설명요인(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연령대	0.181***	0.181***	0.174***	0.152***
성별(남=0)				
여자	-0.010	-0.008	-0.041	-0.030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이하	0.194*	0.199*	0.216*	0.206*
대학이상	0.243**	0.259**	0.280**	0.298**
무응답	-0.279	-0.225	-0.232	-0.166
지역(서울=0)				
경기/인천		-0.066	-0.063	-0.056
충청/강원		-0.044	-0.042	-0.042
영남		0.219**	0.217**	0.213**
호남		-0.118	-0.119	-0.080
직업(자영자=0)				
사무직			-0.017	-0.034
생산직			0.013	0.001
주부 및 기타			0.096	0.044
이념성향(매우보수적=0)				
보수적				-0.047
중도적				-0.239*
진보적				-0.407**
매우진보적				-0.854***
상수	2.458***	2.425***	2.408***	2.702***
N	2,000	2,000	2,000	2,000
Adj. R2	0.049	0.061	0.062	0.085

주: \* p<0.05, \*\* p<0.01, \*\*\*: p<0.001

□ 응답자의 연령대, 성별과 교육수준만을 고려한 모형 1에서는

-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서 자유와 권리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지만 유의하지는 않음.
- 학력별로는 일관되게 학력이 높을수록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졸이하 학력자에 비해서 고졸학력자는 0.19점, 대학학력자는 0.24점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학력효과는 다른 변수를 투입하여도 지속적으로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남.

□ 모형 1에 거주지역을 추가한 모형2에서는

- 연령대, 성별과 교육수준의 효과는 모형1과 동일함.
- 새롭게 투입된 거주지역의 경우는 영남지역의 응답자들이 서울지역 응답자에 비해서 자유와 권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확인됨.

□ 모형2에 주관적 소득계층을 추가한 모형3에서는

- 직업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차이의 대부분은 연령대, 교육수준 등으로 설명됨을 의미함.

□ 모형4는 이념적 성향을 추가한 것으로

-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역의 효과는 앞선 모형과 동일함.
- 이념적으로 매우 보수적임에 비해서 진보적일수록 일관되게 자유와 권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우 보수적인 집단과 보수적인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이념성향에 따라 한국 사회의 자유와 권리 수준에 따른 평가가 상이함을 확인

## 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는 요인을 탐색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9>에 제시되어 있음.

○ 기초분석에서 유의한 집단 간 응답 차이를 보였던 집단 구분을 투입함.

○ 연령대는 40대를 준거집단으로 함.

□ 응답자의 연령대, 성별과 학력만을 고려한 모형 1에서는

○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는 40대와 비교하여, 50대가 유의하게 낮게 평가하고 있음.

- 20대와 60대 역시 낮게 평가하고, 30대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이는 한국사회에서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연령에 따라서 역 U자 모양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 여성일수록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는 모든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 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들이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한 차이는 대학이상 학력자 집단에서만 나타남.

□ 주관적 소득계층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 저소득층에 비해서 중간층이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평가하였음.

-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이 더 낮다고 평가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직업유형이 추가된 모형 3은 모형2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음.

〈표 3-9〉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의 설명요인(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연령대(40대=0)				
20대	-0.052	-0.051	-0.060	-0.065
30대	0.013	0.013	0.009	0.009
50대	-0.141*	-0.145*	-0.141*	-0.149*
60대	-0.075	-0.079	-0.088	-0.094
성별(남=0)				
여자	0.204***	0.194***	0.182***	0.182***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이하	0.084	0.056	0.054	0.060
대학이상	0.160	0.112	0.100	0.104*
무응답	0.044	0.017	0.006	0.017
주관적소득계층(저소득층=0)				
중하층		0.069	0.067	0.067
중간층		0.139*	0.137*	0.138*
중상층		0.082	0.079	0.085
고소득층		-0.242	-0.239	-0.217
직업(자영자=0)				
사무직			0.057	0.052
생산직			-0.043	-0.047
주부 및 기타			0.050	0.040
이념성향(매우보수적=0)				
보수적				-0.002
중도적				0.026
진보적				-0.038
매우진보적				-0.261
상수	2.859***	2.819***	2.798***	2.806***
N	2,000	2,000	2,000	2,000
Adj. R <sup>2</sup>	0.015	0.017	0.016	0.017

주: \* p<0.05, \*\* p<0.01, \*\*\*: p<0.001

□ 이념적 성향이 추가된 모형 4에서는

- 매우 보수적인 집단에 비해서 중도적인 집단이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진보적 집단은 매우 보수적인 집단에 비해서 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념성향은 유의한 설명요인이 되지는 못하였음.

## 제4절 소결

□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높은 수준, 보통,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약 4:4:2의 비율로 나타남.

- 평가는 연령대별, 지역별, 학력별, 직업분류별, 이념성향별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 20~40대는 낮다는 평가를, 50대 이상은 높다는 평가를 함.
- 영남지역의 응답자가 높다는 평가를 하였음.
- 이념성향이 보수적인 응답자가 높다고 평가를 하였음.

□ 국민들이 책임과 의무의 준수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가 준수하지 않는다는 평가보다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수준이라는 평가를 보였음.

-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소득계층별로는 중간층이 높다는 평가를 하였음.

□ 연령, 소득계층, 이념성향 등 집단별 특성에 따라 우리 사회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인식,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가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연령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거주지역에서 영남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으며, 이념성향

에 따른 인식의 차이 역시 나타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계층 구분이 사회에 대한 평가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함.

○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연령, 학력, 소득계층,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됨.

-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국민들은 ‘국민통합’을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32.2%),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28.6%),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28.0%)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20대부터 40대까지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50대 이상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로 선택하였음.

○ 이념성향에 따라, 중도는 사회갈등의 해소를, 보수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진보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더 강조하였음.

□ 국민들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부패와 특권의 타파(30.2%), 정치안정(23.9%), 시민의식 제고(16.4%), 경제성장(11.5%), 기회균등(10.9%), 법치확립(7.3%)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60대는 정치 안정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부패와 특권의 타파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인식에서 집단별 차이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연령이었음.

○ 이것은 세대별로 현 사회에 대한 평가와 지향하는 사회의 모델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

○ 사회통합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직접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설정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제4장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제1절 분석 배경

제2절 주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제3절 소결



# 4

##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 제1절 분석 배경

□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의 해소는 공통의 정치적 목표임. 그만큼 모든 나라는 내부적으로 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강원택·정병기, 2007)

○ 특히,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과 ‘압축 민주화’ 과정에서 저변에 깔려 있던 다양한 사회갈등이 최근 한꺼번에 폭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예컨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2013)는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2009년의 결과보다도 2계단 하락한 결과라고 분석한 바 있음(박준, 2013).

- 또한,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246조원으로 추산,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GDP의 7-21%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함.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형인 다양한 사회 갈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해소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인 2012년 9월 24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으며, 2012년 12월 17일 연설(대통령 후보 제4차 연설)에서 ‘국민대통합 3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 3대 과제는 ‘지역갈등 해소’, ‘소득불균형과 계층 간 갈등 해소’, ‘세대 간 갈등 해소’임.

-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전략과 비전에 관한 공청회(2012.12.6.)에서도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이 4대 전략 중 핵심적 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음.
-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다양한 방식과 강도로 표출되고 있는 사회갈등의 심각성과 해결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 현황을 진단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제2절 주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1.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가. 전체적인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먼저, 사회갈등을 계층·노사·이념·지역·세대·남녀·다문화·환경의 8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국민들이 각각의 갈등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음.
- 그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 각 영역에 걸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계층갈등(74.0%)과 이념갈등(72.7%)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이어서 노사갈등(66.7%), 지역갈등(62.2%), 세대갈등(53.5%), 환경갈등(51.6%) 순으로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이념갈등(30.5%), 계층갈등(24.9%), 지역갈등(21.1%), 노사갈등(18.0%) 순으로 이념갈등이 계층갈등을, 지역갈등이 노사갈등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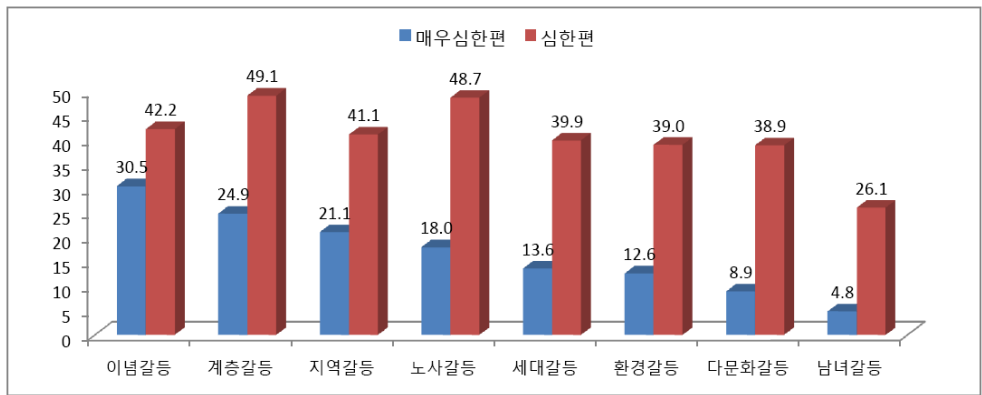
〈표 4-1〉 사회집단 간 갈등의 정도

(단위: %)

구분	심한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Total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심하지 않은 편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계층갈등	74.0	24.9	49.1	22.4	3.7	3.4	0.3	100.0
노사갈등	66.7	18.0	48.7	29.4	4.0	3.7	0.3	100.0
이념갈등	72.7	30.5	42.2	23.7	3.7	3.5	0.2	100.0
지역갈등	62.2	21.1	41.1	29.9	8.0	7.5	0.5	100.0
세대갈등	53.5	13.6	39.9	38.8	7.8	6.9	0.9	100.0
남녀갈등	30.9	4.8	26.1	53.9	15.2	13.7	1.6	100.0
다문화갈등	47.8	8.9	38.9	40.0	12.2	11.1	1.1	100.0
환경갈등	51.6	12.6	39.0	41.8	6.7	5.9	0.8	100.0

[그림 4-1] 사회집단 간 갈등의 정도 평가

(단위: %)



□ 특히, 이념갈등과 다문화갈등은 최근 심각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층갈등의 경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비해,
  - 이념갈등의 경우 2011년 3.48점에서 2012년 3.82점으로, 다시 2013년에는 3.99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2013년에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30.5%)과 평균 점수(4.0) 기준으로는 계층갈등보다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남.
- 대선을 전후해서, 보수와 진보 간의 정쟁과 사회적 논쟁이 지나치게 가열되고 있는 양상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2〉 연도별사회갈등 영역별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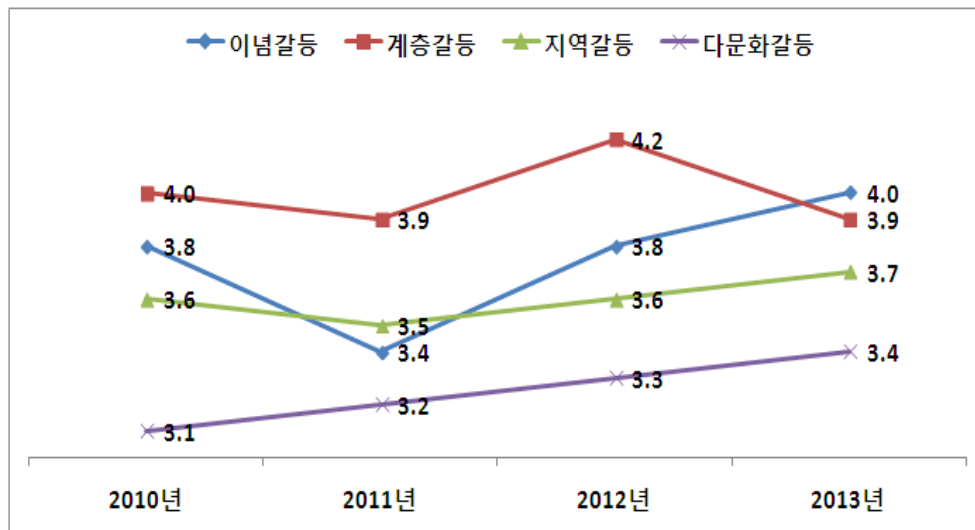
(단위: 점)

영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념갈등	3.8	3.4	3.8	4.0
계층갈등	4.0	3.9	4.2	3.9
노사갈등	3.8	3.9	3.8	3.8
지역갈등	3.6	3.5	3.6	3.7
세대갈등	3.4	3.4	3.7	3.6
환경갈등	3.6	3.5	3.5	3.6
다문화갈등	3.1	3.2	3.3	3.4
남녀갈등	2.9	3.0	3.2	3.2

주: '전혀 심하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심한 편이다' 5점으로 측정된 서열척도 평균 점수임.

[그림 4-2] 주요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추이(평균점수)

(단위: 점)



- 한편, 다문화갈등은 계층, 이념, 지역, 노사 등 기존의 주요 갈등 영역에 비해서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평균 점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2010년 3.1점이던 평균 점수는 매년 0.1점 정도씩 상승하여 2013년에는 3.43점까지 상승한 상태임.
-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더불어 외국인 범죄, 다문화가정 해체, 다문화 자녀의 적응 문제 등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영역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인구학적 특성이나 성향별로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계층갈등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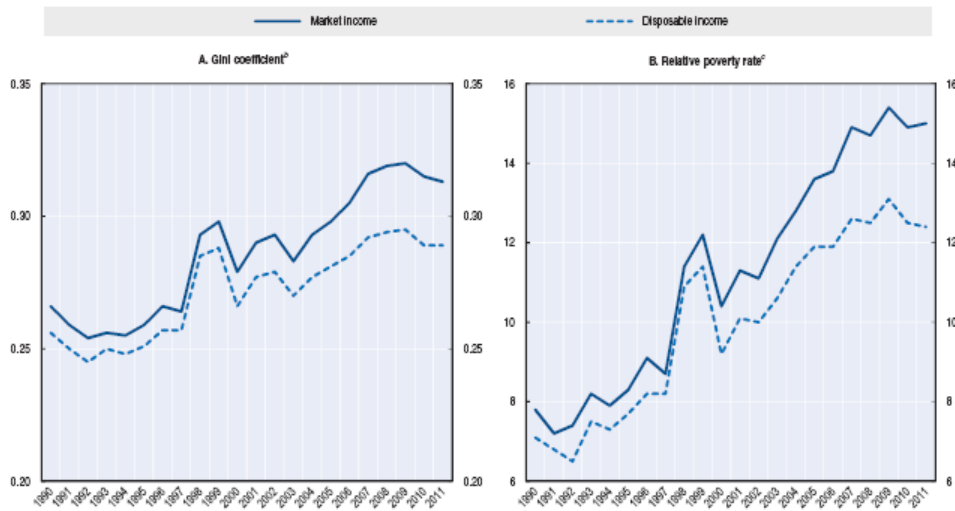
### (1) 계층갈등

- 우리나라의 최근 분배 구조는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계층갈등 역시 최근 조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등 반복적인 경제위기의 여파가 사회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인과 가구경제의 불안정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불안과 계층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가구의 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
- 중산층(중위소득 50-150%가구)의 비중도 1990년 75.4%에서 2000년

71.7%, 2010년 67.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가계부채는 1000조에 달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36%에 이름.

[그림 4-3] 빈곤과 불평등의 추이



자료: OECD(2013).

○ 그러나 이러한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연령대별, 학력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이념성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sup>1)</sup>.

○ 먼저, 연령별로 볼 때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정규분포 형태를 보임. 즉, 30대-50대까지의 연령층이 20대의 젊은층과 60대 이상의 노인층에 비해 계층갈등을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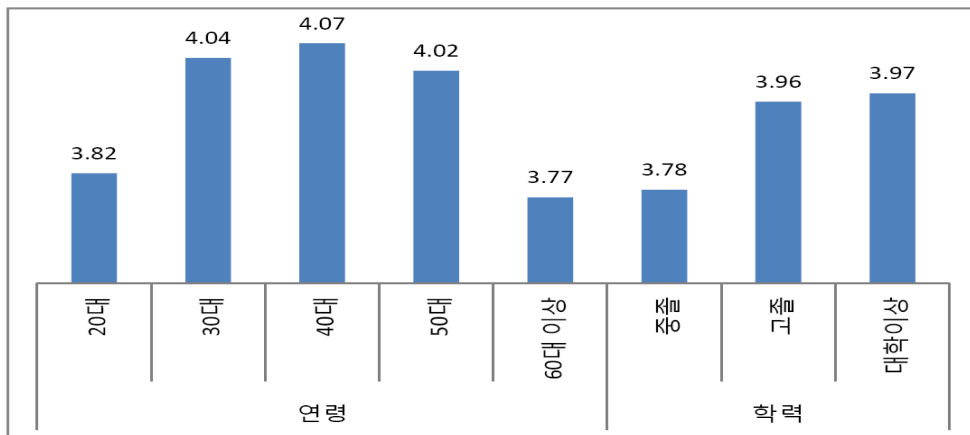
- 특히, 40대가 계층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4.07점으로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남.
-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 가능함. 첫째, 이 연령대는 소위 486세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의 분배문제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좀 더 진보적 성

1)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시오.

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임. 둘째, 이 연령대는 경제활동인구의 핵심 연령 대로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민감도와 체감도가 좀 더 높을 집단임.

[그림 4-4] 연령별·학력별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단위: 점)



주: 연령별 F = 13.04 Pr = 0.000. 학력별 F = 3.88 Pr = 0.0089

○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4.09점)이 계층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하층(4.03점), 중간층(3.84점), 상위층(3.94점)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좀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원하는 만큼 현재의 분배상태와 갈등에 대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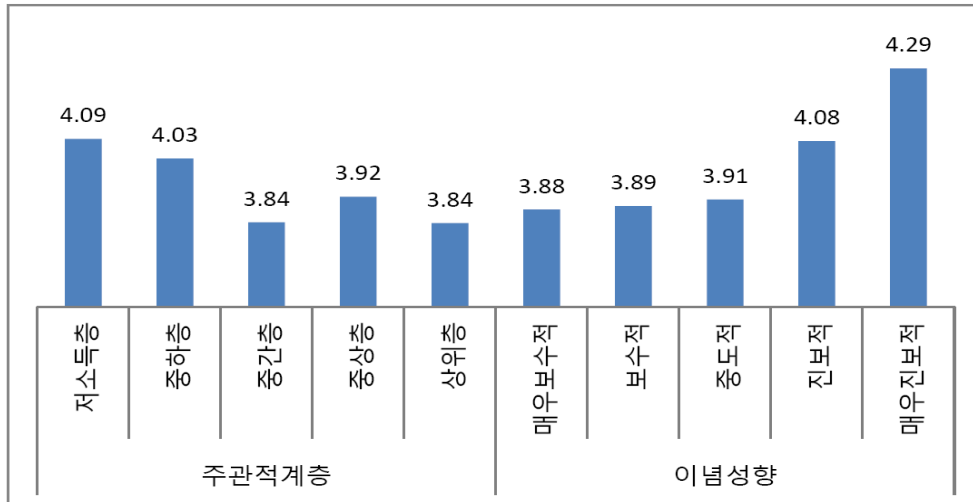
○ 이념 성향별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역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스스로 매우 진보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계층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각각 4.29점, 4.08점)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매우 보수적이거나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계층갈등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각각 3.88점, 3.89점)하는 경향이 있음.

- 진보적일수록 성장보다는 분배에, 보수적일수록 분배보다는 성장에 역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성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림 4-5] 주관적 소득계층별·이념 성향별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단위: 점)



주: 주관적 소득계층별 F = 7.96 Pr = 0.000. 이념성향별 F = 6.43 Pr = 0.000

## (2) 이념갈등

□ 우리나라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역사적·현실적으로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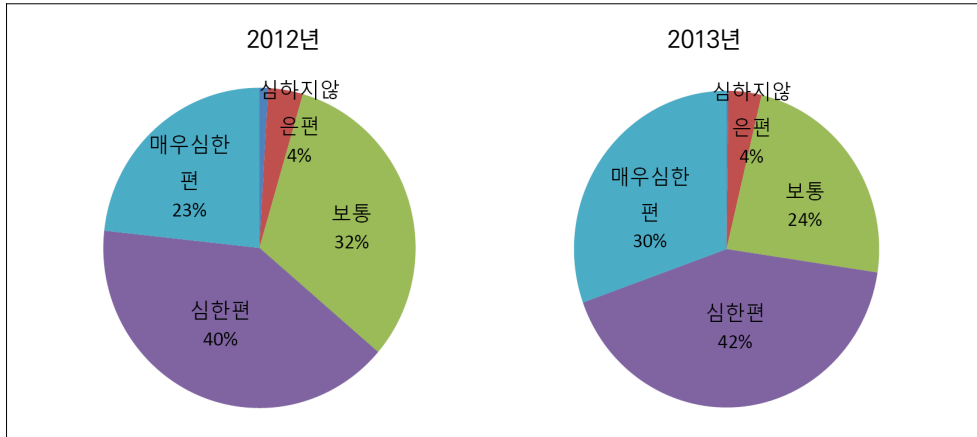
○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스로 인식하는 이념 성향의 분포는 균형 잡힌 모양새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념갈등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주기적인 선거 시기를 전후해서 이념갈등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으며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 대선을 치르면서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가 크게 증가한 것도 이같은 양상을 대변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2012년에 비해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는 7%p 정도 증가한 30%에 이르렀고, 심한 편이라는 의견 역시 2%p 증가한 42%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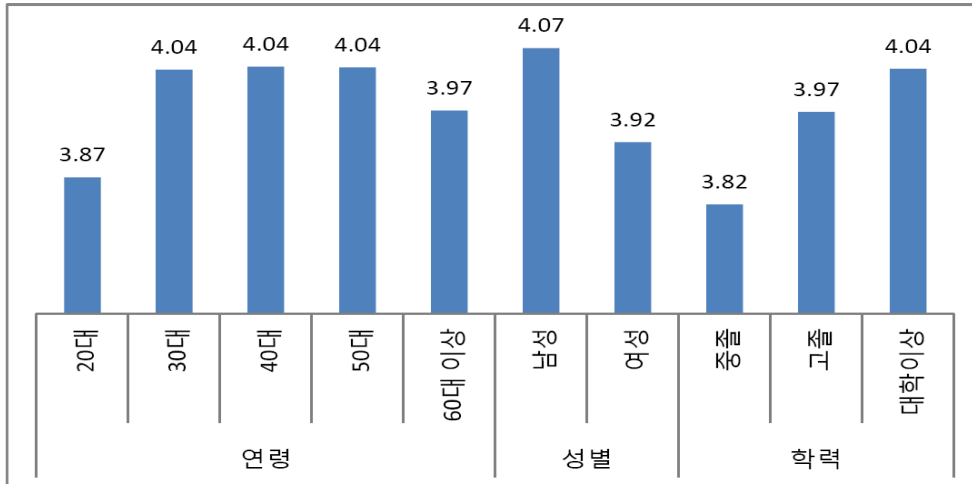
[그림 4-6] 2012년과 2013년 이념갈등에 대한 평가



-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역시 연령별, 학력별, 이념성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보였으며, 여기에 더해 성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 이념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차이는 앞선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즉, 20대(3.87점)와 60대 이상(3.97)에서 점수가 낮고, 30-50대의 점수는 동일(4.04점)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4.07점)이 여성(3.92점)에 비해 이념갈등을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4.04점)이 이념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30-50대 중간연령층, 남성, 대학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현재의 이념갈등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들은 현재 사회경제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집단들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좀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그림 4-7] 연령별·성별·학력별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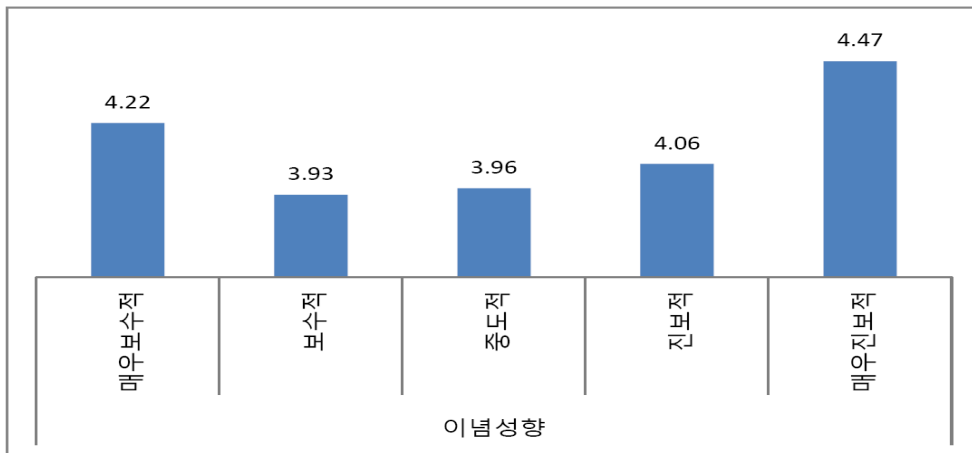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연령별 F = 3.08 Pr = 0.0153, 성별 F = 16.02 Pr = 0.0001, 학력별 F = 4.52 Pr = 0.0037

[그림 4-8] 이념 성향별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단위: 점)



주: F = 6.55 Pr = 0.000

□ 이념성향이 극단적일수록 현재의 이념갈등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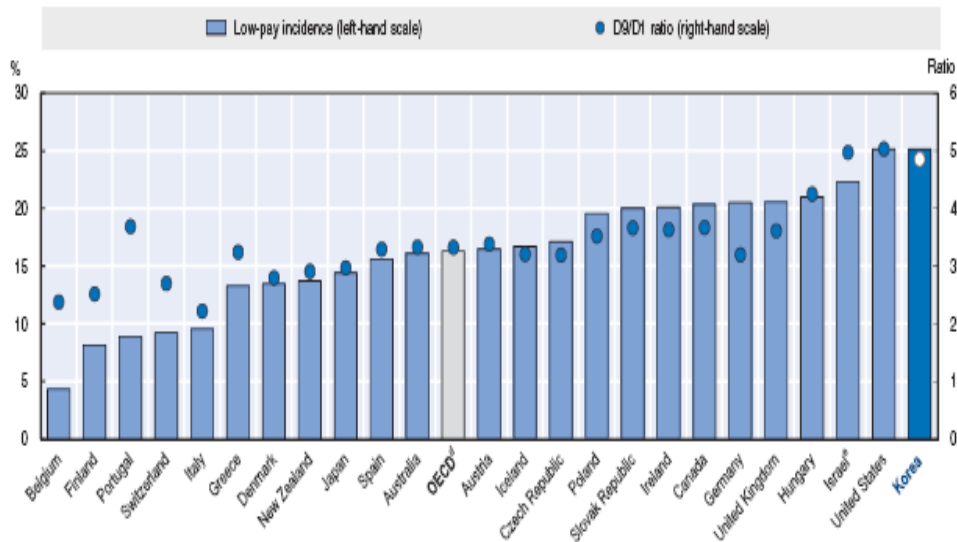
○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념갈등에 대한 심각도 점수가 4.47점으로 가장 높고,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22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상황의 이념갈등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임.

### (3) 노사갈등

- 우리나라의 최근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상황임.
- 임시직 고용률은 23.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임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34.9% 수준임(통계청, 경찰부가조사)
- 중위임금의 2/3보다 적게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율 역시 한국은 25.1%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1분위임금과 10분위임금의 배율은 4.85배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OEC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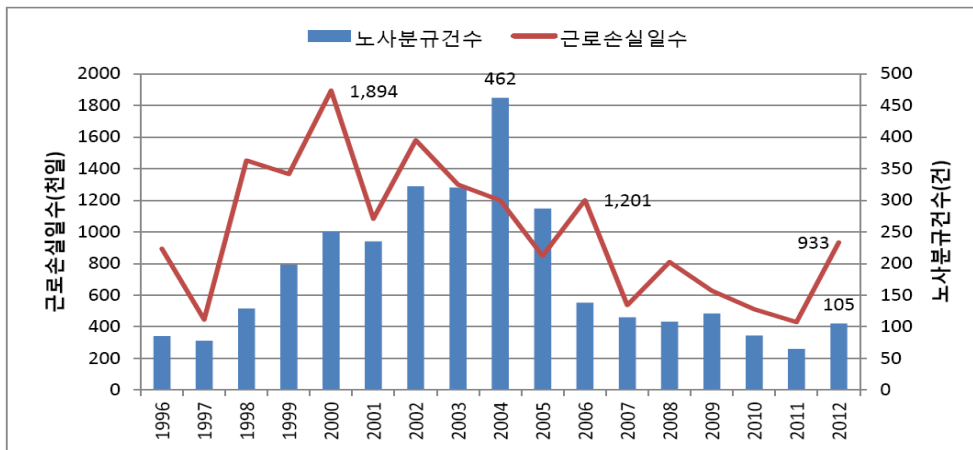
[그림 4-9]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자료: OECD(2013).

- 노사분규건수는 2004년 462건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들어 2011년 65건까지 줄어들었으나 2012년 105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 노사갈등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0년 1,894천일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줄어들다가 2012년 933일로 증가하였음.
  - 또한, 노사분규의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쌍용자동차, 기륭전자, 기아차, 금호타이어 등의 노사분규 사례에서 보듯이,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림 4-10]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



자료: e-나라지표(index.go.kr)

□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직업별·이념성향별로 갈등인식에 대한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 먼저, 직업별로는 노사갈등의 당사자인 자영자를 포함한 경영주와 생산직 근로자가 노사갈등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식의 정도는 각각 4.08과 4.07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 이념성향별 노사갈등의 인식 역시 앞선 이념갈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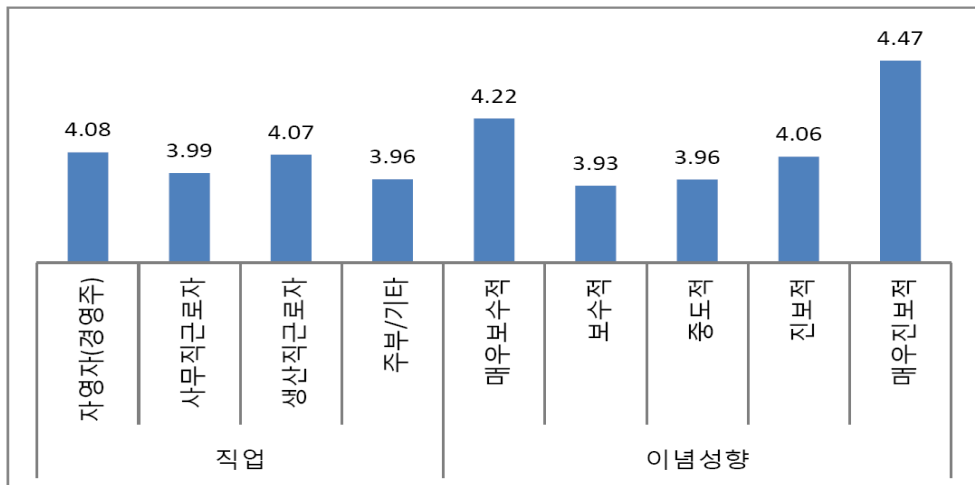
- 즉,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노사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고(4.47점),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 다음을 잇고 있음(4.22점).

○ 이와 같이, 이념의 양극단에 선 사람들이 대체로 갈등을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이들이 여론의 전면을 주도할 경우 사회갈등은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통합보다는 분열이 조장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임.
- 소통과 타협을 중시하는 중도와 온건한 보수·진보의 낮은 목소리를 사회의 주도적 목소리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4-11] 직업별·이념성향별 노사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단위: 점)



주: 직업별  $F = 6.09$   $Pr = 0.0004$ , 이념성향별  $F = 4.70$   $Pr = 0.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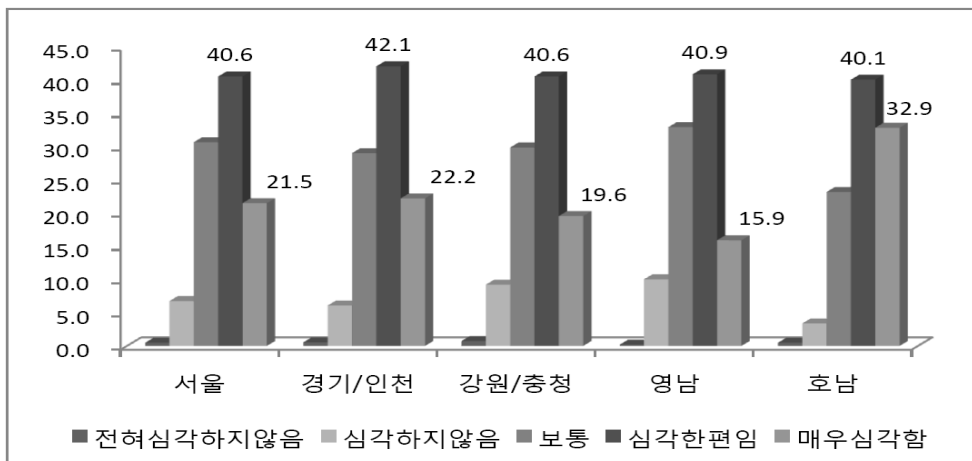
#### (4) 지역갈등

- 지역갈등은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갈등과, 최근 수도권 이전, 지역균형발전, 지방대 학생의 취업 등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영호남을 둘러싼 지역갈등은 주로 감정적 배타성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주로 경제발전의 비대칭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음.
- 지역갈등 수준은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래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5-3.7점 수준을 유지하며, 높은 갈등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인구학적 특성이나 이념성향, 소득계층별로는 지역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의 편차가 나타나지 않으며, 지역별<sup>2)</sup>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각한 편이라는 비율에는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음.
  - 하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는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호남인의 경우 32.9%가 지역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에 비해, 영남인의 경우 15.9%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호남의 약 1/2 수준에 불과함.

[그림 4-12] 지역별 지역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X^2 = 39.699$  Pr = 0.000

2) 지역별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5) 세대갈등

□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노인빈곤 문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 또한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1.0%로 멕시코(5.9%), 터키(6.3%)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OECD 평균 14.8%),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65세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25.8%)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총부양률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2010년 37.2%에서 2050년 72.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압축성장 과정에서 노후에 대비하지 못한 노인층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대갈등은 향후 우리사회의 지배적 갈등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에 달하고, 노인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80.3명으로 두 지표 다 OECD 국가들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임.

- 또한, 유교적 효사상이 강한 환경 속에서 자란 60대 이상의 세대와 그러한 가치가 시효 만료된 청장년세대 간의 가치관의 괴리도 매우 큼.

○ 최근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 거부운동,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갈등 등 세대갈등이 정치적·정책적 갈등으로 부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연령 간 이념적 성향의 편차도 커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갈등은 이념갈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2010년과 2011년 3.4점이었으나, 2012년 3.7점, 2013년 3.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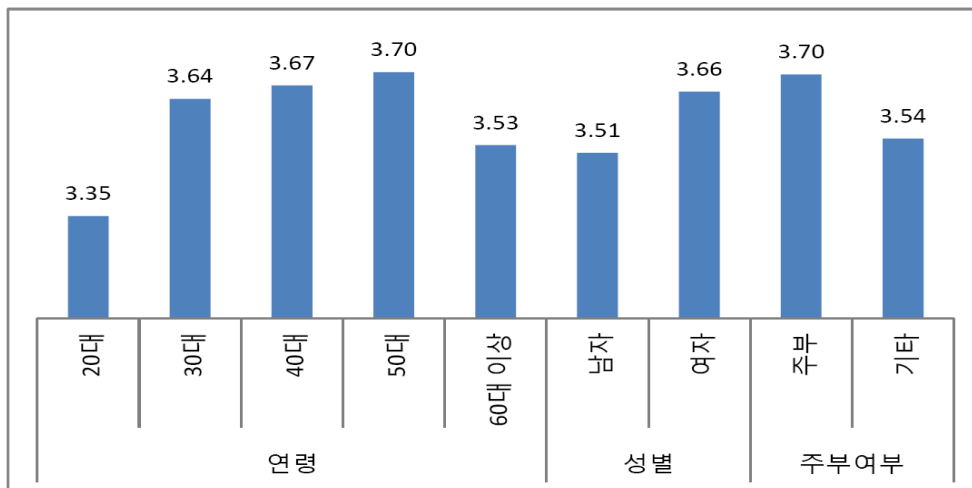
□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연령별·성별·직업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가 계층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과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세대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양 세대와의 가치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음.
- 30대와 40대는 50대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연령대임.
- 20대는 아직 본격적인 부모 부양부담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나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비해, 현세대 노인이 상대적으로 세대갈등을 이전 연령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의외적임. 추론컨대, 이러한 결과는 이들 세대의 경우 부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세대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그림 4-13] 연령별·성별·주부여부별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단위: 점)



주: 연령별 F = 11.07 Pr = 0.000, 성별 F = 16.07 Pr = 0.0001, 주부여부별 F = 13.88 Pr = 0.0002

- 남자(3.51점)보다는 여자(3.66점)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부(3.70점)가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단순한 연령에 따른 세대차에 더하여 성정체성과 성역할에 대한 세대차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즉, 여성, 특히 주부의 경우 시대과의 갈등을 세대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6) 환경갈등

- 4대강 개발을 두고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환경갈등은 ‘개발 대 보존’ 간의 갈등으로 대별될 수 있음.
- 최근에는 4대강 개발 뿐 아니라 원전 추가 건설,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건설, 사패산 터널 건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을 둘러싼 갈등 등 환경갈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임.
- 환경갈등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전체의 찬반 논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주민 간 직·간접적인 충돌을 야기하고 있음.
- 환경갈등은 사람 대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사람 대 환경의 갈등이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소수이지만 간접적인 피해는 매우 광역적이고 지속적인 만큼 여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는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sup>3)</sup>.
- 또한, 환경갈등은 단순한 NIMBY(Not in My Backyard)현상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와 최근 조사에서도 환경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3.5-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김종호 외(2004)는 환경갈등의 특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갈등의 주요 원인인 환경악화의 피해는 광역적이고 지속적이다. 둘째, 환경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현상을 초래한다. 셋째,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한다. 넷째, 가치갈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즉, 환경 자체의 가치나 미래세대의 강조는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기존 가치체계와 충돌하게 된다.

□ 환경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이념성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 볼 때, 앞선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에서와 유사하게, 20-50대의 경우 환경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와 같이, 연령별 갈등인식에 있어서의 일관성, 즉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3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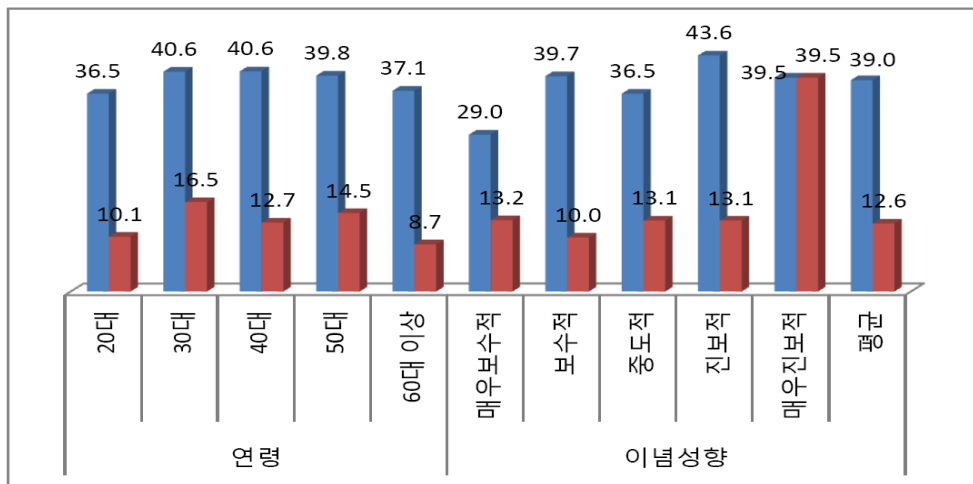
○ 이념성향별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39.5%가 환경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평가한 점임.

-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보수적 혹은 중도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환경갈등을 심각하게 여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 스스로를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환경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4] 연령별·이념성향별 환경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심한편과 매우심한편)

(단위: %)



주: 연령별  $X^2 = 36.853$   $Pr = 0.002$ , 이념성향별  $X^2 = 48.201$   $Pr = 0.000$

## (7) 다문화갈등

-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문화 격차와 차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친부모 중 한 쪽 이상이 외국에서 왔거나 한국인 친부모가 이혼 뒤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0-18세)는 2013년 현재 191,3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동아일보, 2013.10.23.).
  - 특히 결혼이민 온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경우 언어적 어려움과 문화 차이로 인해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음.
- 또,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0년 기준으로 40,4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안전행정부 집계에 의한 2013년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52만명에 달함(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
  -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최근 3년간 6,36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매경뉴스, 2013.10.4.).
  -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위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문화갈등은 아직 우리 사회의 주류적 갈등이라 일컬을 수준은 아니지만, 방기할 수준을 넘어섰음.
  - 실제로 2010년 이후 다문화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매년 증가하여, 2010년 3.1점에서 2013년 3.43점으로 상승하였음.
  - 서구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가장 핵심적 영역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라 할 수 있음.
    - 실제로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 LA 폭동 등은 이민자나 인종적 갈등이 사회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넓히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문화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성별·지역별·소득별·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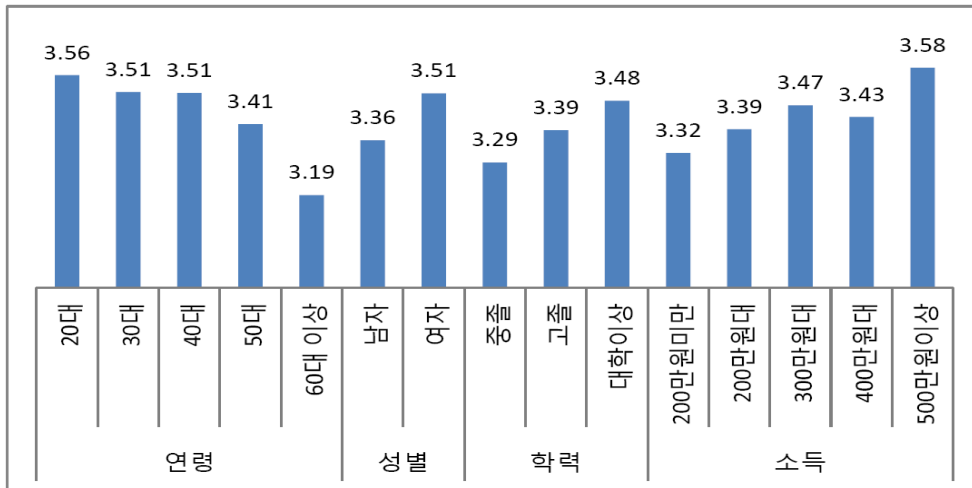
○ 연령별로 볼 때 20대(3.56점)가 다문화갈등에 대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3.19점)의 경우 다문화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여성(3.51점)이 남성(3.36점)보다 다문화갈등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5] 연령별·성별·학력별·소득별 다문화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단위: 점)



주: 연령별 F = 12.81 Pr = 0.000, 성별 F = 15.09 Pr = 0.0001,  
학력별 F = 4.26 Pr = 0.0053, 소득별 F = 4.23 Pr = 0.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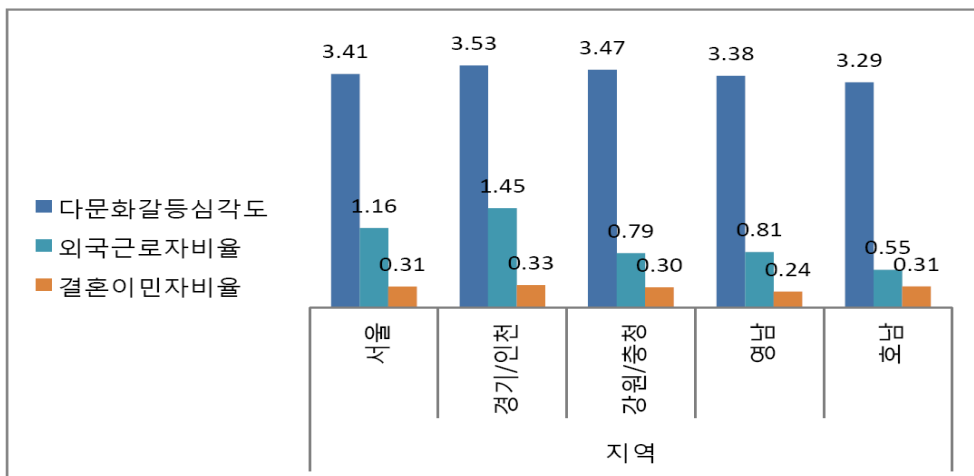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지역 응답자(3.53점)가 다문화갈등을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호남지역 응답자(3.29점)

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문화갈등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지역적 편차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인구 대비 비율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비율과 결혼이민자 비율을 산출한 결과,
-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다문화갈등에 대한 인식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1.45%로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다문화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문화갈등의 심각성 점수가 가장 낮은 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 대비 비율 역시 0.55명으로 가장 낮게 나온 것임.
- 이에 비해, 결혼이민자의 인구 대비 비율은 지역별로 영남을 제외하고는 그 편차가 크지 않을뿐더러, 다문화갈등에 대한 인식과도 별 관계가 없어 보임.
- 좀 더 엄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다문화갈등은 주로 도시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된 곳에서 좀 더 심각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4-16] 지역별 다문화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과 인구 대비 외국인비율

(단위: 점, %)



주: 1) 지역별 외국인근로자비율과 결혼이민자비율은 통계청 원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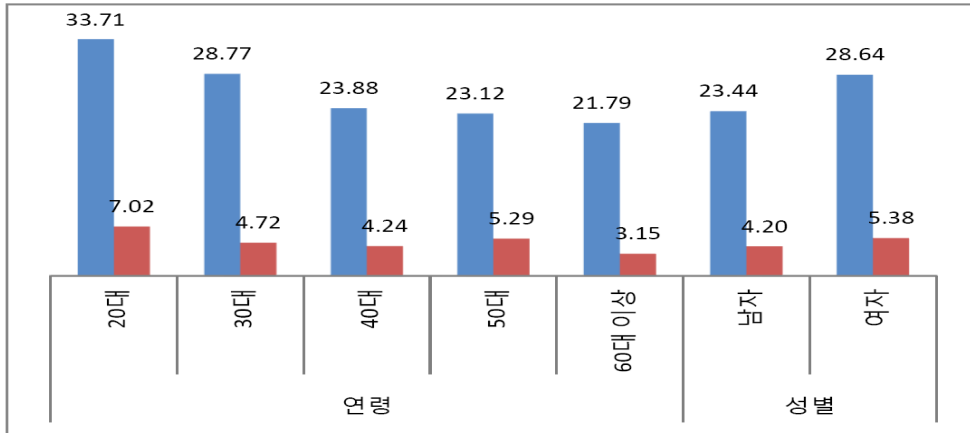
2) 지역별  $F = 4.26$   $Pr = 0.0020$

## (8) 남녀갈등

- 여성의 고학력화, 맞벌이가구의 증가,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남녀갈등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생활갈등을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이래의 조사에서 남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조사된 8개 갈등 영역 중에서 항상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해 왔음.
- 이는 남녀갈등을 개인·가족내·직장내 개별적인 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사회문제나 사회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즉, 서구국가에서처럼 일-가정양립의 문제나 양성평등의 문제가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사회적·정책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가족내·직장 내에서 미시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임.
- 하지만 최근 저출산의 문제와 일-가정양립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남녀갈등의 사회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임.
- 남녀갈등은 연령별·성별로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였음.
  - 연령별로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남녀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남.
    - 20대의 33.7%가 남녀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7%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60대 이상의 21.8%가 심각하다고 보고, 3.2%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남녀갈등을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연령별·성별 편차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집단(남성, 고연령층)과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여성, 젊은층)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4-17] 연령별·성별 남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심한편과 매우심한편)

(단위: %)



주: 연령별  $X^2 = 47.011$   $Pr = 0.000$ , 성별  $X^2 = 19.801$   $Pr = 0.001$

#### 다.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금까지 각 갈등 영역별로 갈등의 심각성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집단별 차이를 살펴 보았음.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각 갈등 영역에서의 갈등 인식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먼저, 계층갈등 인식과 관련하여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과 연령 제곱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역U’자형을 보인다는 의미.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층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다가 다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계층갈등을 덜 심각하게 여기는 형태임.

○ 주관적 소득계층은 일관되게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계층갈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재분배 지향적이고, 고소득층일수록 성장지향적인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이념적 성향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만이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에 비해 계층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더 이상 여타의 이념 성향에 따른 계층갈등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층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연령	0.04***	0	0.03**	0.01
연령제곱	-0.00***	0	-0.00**	0
성별(남=0)				
여자	-0.07	-0.06	-0.15***	-0.03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이하	0.1	0.24**	0.20*	0.05
대학이상	0.15	0.24**	0.29***	0.18*
무응답	-0.24	0	-0.14	-0.06
직업(자영자=0)				
사무직	0.03	0.01	-0.01	0.04
생산직	-0.02	0.04	0.1	0
주부 및 기타	0.01	-0.08	0.06	0.05
월평균소득(200만원이하=0)				
200만원대	0.07	0.08	0.09	0.14*
300만원대	0.07	0.05	-0.09	0.07
400만원대	0.07	0.02	0.02	0.08
500만원이상	0.11	0.09	0.05	0.12
무응답	0.05	0	0.01	-0.05
주관적소득계층(저소득층=0)				
중하층	-0.15*	-0.03	-0.04	-0.04
중간층	-0.35***	-0.14*	-0.06	-0.04
중상층	-0.32***	-0.08	-0.1	-0.06
고소득층	-0.44*	-0.16	0.16	-0.25
이념성향(매우보수적=0)				
보수적	0	0.05	-0.28**	-0.09
중도적	0	0.01	-0.23*	-0.13
진보적	0.16	0.1	-0.14	-0.06
매우진보적	0.33*	0.48**	0.24	0.44*
지역(서울=0)				
경기/인천	0.02	-0.04	-0.01	0.03
충청/강원	-0.03	-0.02	-0.12	-0.08
영남	-0.07	-0.06	-0.09	-0.13*
호남	-0.08	-0.06	-0.1	0.25**
상수	3.18***	3.67***	3.45***	3.27***
N	1,867	1,867	1,867	1,867
R <sup>2</sup>	0.06	0.03	0.05	0.04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 노사갈등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 중간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노사갈등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또, 매우 진보적인 사람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에 비해 노사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직업별 노사갈등 인식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이념갈등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이념성향이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갈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은 ‘역U자형’으로 이념갈등에 영향을 미침. 즉, 젊은층과 고령층에서 이념갈등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장년층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념갈등을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념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또한 분명하게 드러남. 또,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이 매우 보수적인 사람에 비해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지역별로 편차를 드러냄. 즉, 영남인들은 서울 사람들에 비해 지역갈등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호남인들은 서울 사람들에 비해 지역갈등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중학교 미만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지역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 또한 지역갈등을 보수적인 사람들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표 4-4〉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회귀분석 결과)

변수	세대갈등	남녀갈등	다문화갈등	환경갈등
연령	0.04***	-0.01	0.01	0.03***
연령제곱	-0.00***	0	-0.00*	-0.00***
성별(남=0)				
여자	0.14**	0.14***	0.13**	0.08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이하	0.08	-0.18*	-0.06	0.04
대학이상	0.06	-0.18*	-0.05	0.02
무응답	0.03	0.12	-0.27	-0.23
직업(자영자=0)				
사무직	0.03	0.04	-0.01	0.08
생산직	0.08	0.04	-0.03	0.09
주부 및 기타	0.05	0.08	0.03	0.06
월평균소득(200만원이하=0)				
200만원대	0.1	-0.02	-0.03	0
300만원대	0.05	-0.01	0.07	0.09
400만원대	0.12	-0.01	0.03	0
500만원이상	0.06	0.08	0.22**	0.09
무응답	0.08	-0.02	0.02	0.07
주관적소득계층(저소득층=0)				
중하층	0.02	-0.03	0.05	-0.02
중간층	-0.1	-0.14*	-0.12	-0.15*
중상층	-0.09	-0.22**	-0.1	-0.14
고소득층	-0.09	-0.26	0	-0.05
이념성향(매우보수적=0)				
보수적	-0.1	0.05	-0.04	0
중도적	-0.03	0	-0.05	0.01
진보적	0	0	-0.05	0.09
매우진보적	0.08	0.35*	0.03	0.59***
지역(서울=0)				
경기/인천	0.12*	0.10*	0.11*	0.02
충청/강원	-0.02	0.01	0.08	-0.03
영남	0.03	-0.03	-0.01	-0.06
호남	-0.11	-0.07	-0.1	-0.04
상수	2.42***	3.64***	3.43***	2.92***
N	1,867	1,867	1,867	1,867
R <sup>2</sup>	0.04	0.05	0.05	0.03

주: \* p<0.05, \*\* p<0.01, \*\*\*: p<0.001

-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연령과 성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
  - 연령과 연령제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며, 이는 앞서의 계층 및 세대갈등과 유사하게 ‘역U자형’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함.
    - 즉 중장년층에서 세대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데 비해, 청년층과 고령층은 덜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세대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집단 간 차이검증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 남녀갈등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른 갈등과는 달리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남녀갈등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중간층과 중상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남녀갈등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에 비해 남녀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다문화갈등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은 저소득계층에 비해 다문화갈등을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경기·인천 지역이 서울 지역에 비해 다문화갈등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환경갈등과 관련해서도 계층·이념·세대갈등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역U자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간계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환경갈등을 약간 덜 심각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에 비해 환경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2. 갈등해결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갈등은 창조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함.

○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갈등 혹은 비생산적인 갈등은 큰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국민통합을 훼손함으로써 사회 불안정을 유발함.

-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2013)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연간 82-246조원으로 추산하고,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GDP의 7-21%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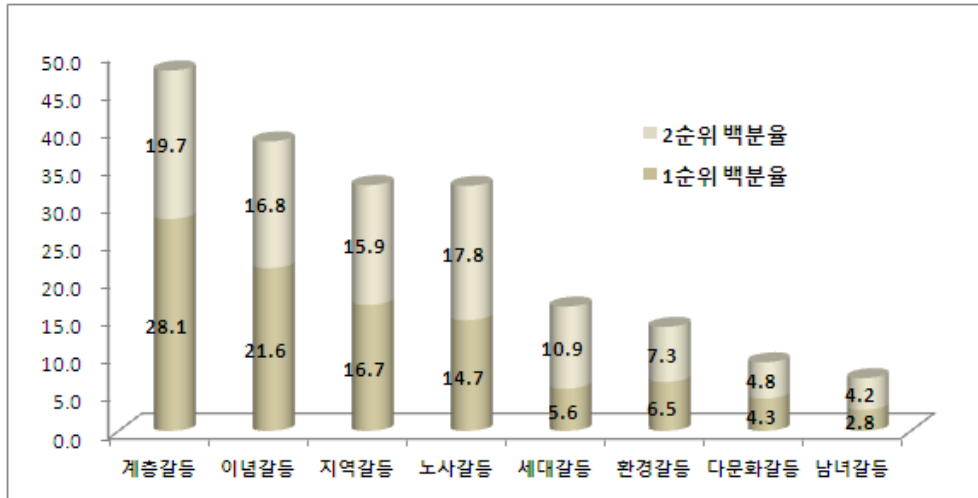
○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8가지 갈등을 중심으로, 어떠한 갈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인 우선순위 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표 4-5〉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합산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계층갈등	562	28.1	393	19.7	955	24.2
이념갈등	431	21.6	335	16.8	766	19.4
지역갈등	333	16.7	317	15.9	650	16.5
노사갈등	293	14.7	356	17.8	649	16.5
환경갈등	130	6.5	145	7.3	275	7.0
세대갈등	111	5.6	217	10.9	328	8.3
다문화갈등	85	4.3	96	4.8	181	4.6
남녀갈등	55	2.8	83	4.2	138	3.5
전체	2,000	100.0	1,942	100.0	3,942	100.0

[그림 4-18]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1, 2순위 백분율)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순위 갈등으로 계층갈등(28.1%)을 지목하고 있음. 이어서 이념갈등(26%), 지역갈등(16.6%), 노사갈등(14.7%) 순이었음.

○ 2순위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갈등은 계층갈등(19.7%)이었으나, 2위는 노사갈등(19.8%)이 차지했음. 이어서 이념갈등(16.8%), 지역갈등(15.9%)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계층갈등은 우리 사회의 갈등 중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갈등인 동시에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꼽고 있을 만큼 중요성과 시급성이 큰 갈등 요소임.

- 이는 무엇보다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분배보다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이 추진되어 온 데다, 최근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분배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임.
- 넓은 범주에서 노사갈등까지를 계층갈등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의 균형점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함.

□ 2010년 이래의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갈등의 부동의 1순위는 ‘계층갈등’이었지만, 최근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신 이념갈등을 꼽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점임.

○ 아래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의 1순위는 4년 연속으로 계층갈등이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은 2010년 37.8%, 2011년 44%, 2012년 39.6%, 2013년 28.1%로 2013년에는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노사갈등 역시 2011년 23.8%로 나타났으나, 2013년 14.7%로 감소하였음. 대신, 이념갈등은 2010년 14%, 2011년 6%, 2012년 16.4%에서 2013년 21.6%로 큰 폭의 증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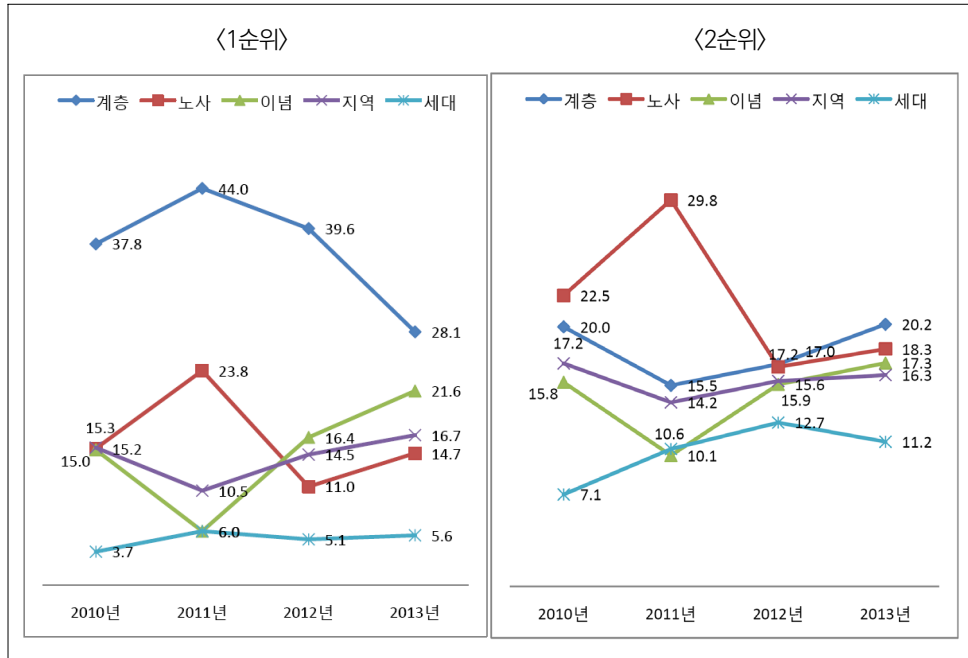
〈표 4-6〉 연도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순위	계층	37.8	44.0	39.6	28.1
	노사	15.2	23.8	11.0	14.7
	이념	15.0	6.0	16.4	21.6
	지역	15.3	10.5	14.5	16.7
	세대	3.7	6.0	5.1	5.6
	남녀	2.0	1.1	3.1	2.8
	다문화	2.2	2.2	3.1	4.3
	환경	8.8	6.4	7.4	6.5
	합계	100.0	100.0	100.0	100.0
2순위	계층	20.0	15.5	17.2	20.2
	노사	22.5	29.8	17.0	18.3
	이념	15.8	10.1	15.6	17.3
	지역	17.2	14.2	15.9	16.3
	세대	7.1	10.6	12.7	11.2
	남녀	3.7	2.0	4.8	4.3
	다문화	3.4	6.1	5.8	4.9
	환경	10.3	11.6	11.2	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4-19] 연도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의 우선순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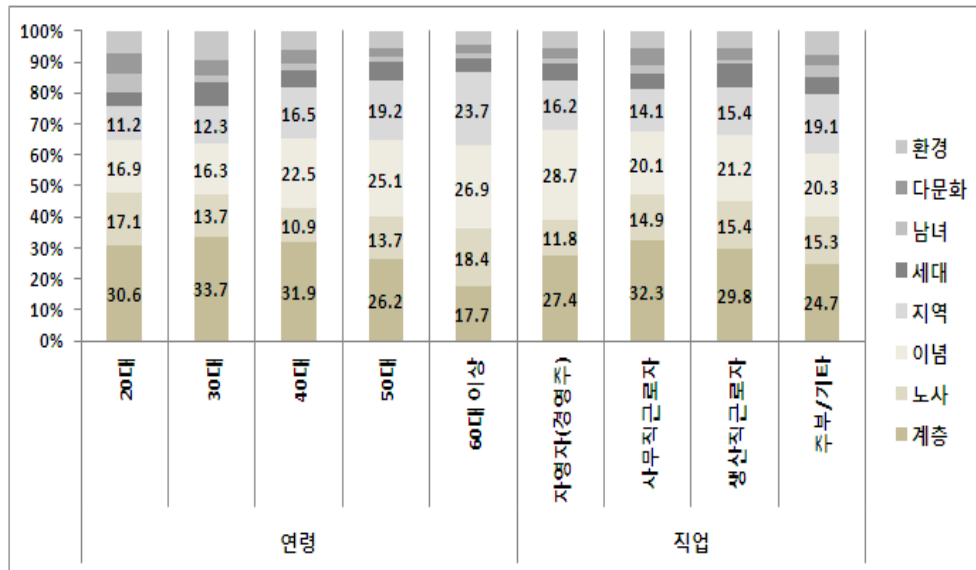
(단위: %)



- 2순위의 갈등 해결 우선순위의 경우 2013년에 계층, 노사, 이념, 지역갈등이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계층갈등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갈등이라는 데 대해 국민의 동의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갈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질타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1순위)은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의외로 소득계층이나 이념성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40대의 경우 계층갈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30%를 넘었으나, 50대의 경우 26.2%, 60대의 경우 17.7%만이 계층갈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20] 연령별·직업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의 우선순위(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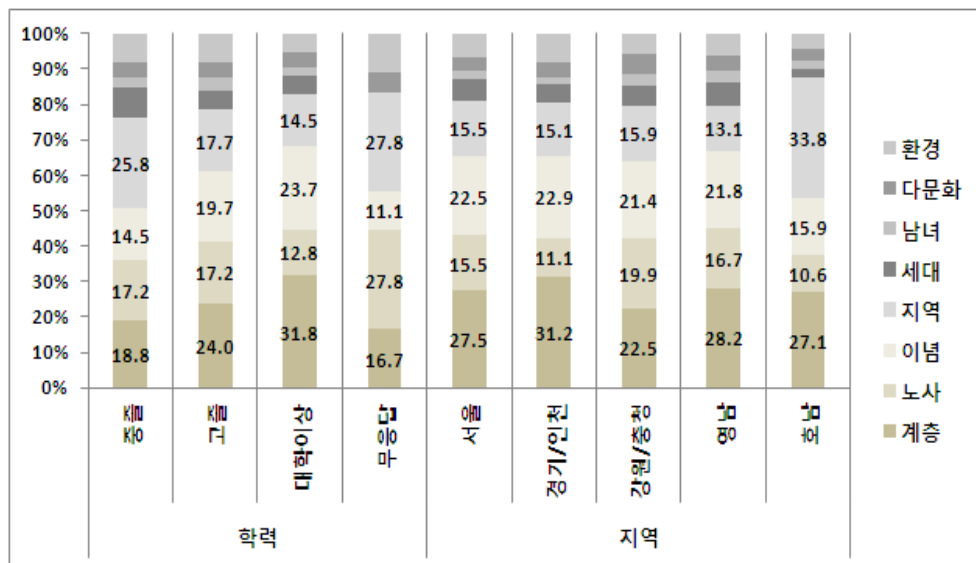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령별  $X^2 = 120.71$  Pr = 0.000, 직업별  $X^2 = 36.397$  Pr = 0.02

[그림 4-21] 학력별·지역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의 우선순위(1순위)

(단위: %)



주: 학력별  $X^2 = 62.853$  Pr = 0.000, 지역별 F = 77.141 Pr = 0.000

-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계층갈등보다는 이념갈등(26.9%)과 지역갈등(23.7%), 노사갈등(18.4%)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일반적인 갈등 해결의 우선순위와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음.
- 전쟁 경험세대이면서 절대 빈곤을 몸소 체험해 온 6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분배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보다는 남북문제를 포함한 이념적 갈등의 문제가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들에게 다양한 이념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이념적 수용성의 요구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일 가능성이 높음.

○ 직업별로 볼 때, 사무직 근로자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계층갈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중산층의 핵심 계층으로써 비교적 고학력이면서 최근 주택 가격 하락, 교육비 부담,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직업군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계층갈등 해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비해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자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이념갈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계층갈등(31.8%)과 이념갈등(23.7%)을, 중졸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지역갈등(25.8%)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꼽고 있다는 것임.

○ 지역별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호남 응답자의 경우 지역갈등(33.8%)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이 지역이 지역갈등의 최대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3. 사회갈등 악화 요인<sup>4)</sup>에 대한 인식

□ 국민들은 다차원적 영역에서 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갈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 즉 소득분배의 악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양갈등 증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의 급증, 압축적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의 갈등 축적 등 각 영역의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요인과 더불어 갈등을 촉진시키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보다 보편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

- 최근의 정치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이 국민들을 분열시킨다는 비판도 이러한 보편적 요인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임.
- 국민의 인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을 고조시키는 요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함.

□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28.9%의 응답자가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꼽고 있음.

○ 이어서 23.7%는 ‘개개인의 이기주의와 강한 권리 주장’을 17.4%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경향’을, 13.8%는 ‘과도한 경쟁’을, 8.6%는 ‘서로간의 불신’을, 그리고 7.7%는 ‘토론문화의 미성숙’을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고 있음.

○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사회갈등 악화요인 1순위로 꼽고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큼.

- 즉, 국민들이 계층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근저에는 사회지도층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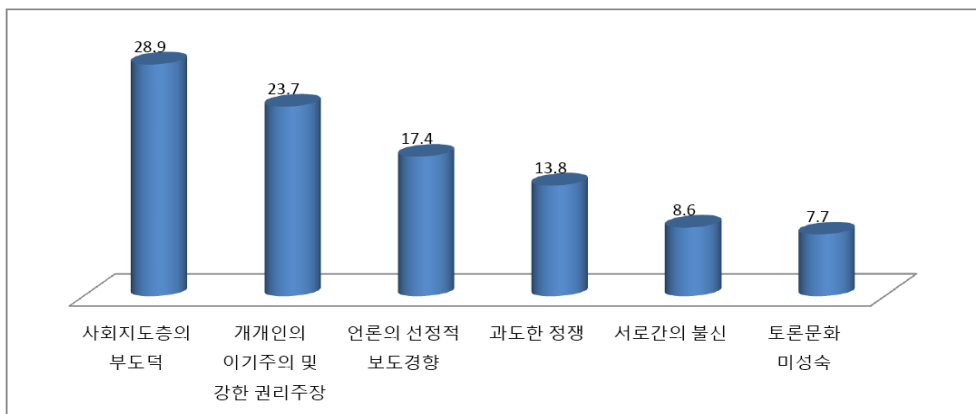
4) 본 설문문항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포괄성과 배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것. 반대로 말하면, 사회지도층이 공평무사하고 깨끗하고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한다고 인식한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갈등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 로드릭(Dani Rodrik) 하버드대 교수가 「지구화의 역설」에서 “지구화로 인한 불안정과 대규모 승자와 패자의 양산은, 그러한 과정이 공정하고 널리 이롭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국민들에 의해 감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음.
- 다수 국민들은 현재의 격차와 불안정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사회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임.

[그림 4-22] 사회갈등 악화 요인

(단위: %)



□ 그러나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상당히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사회갈등 악화 요인으로 지적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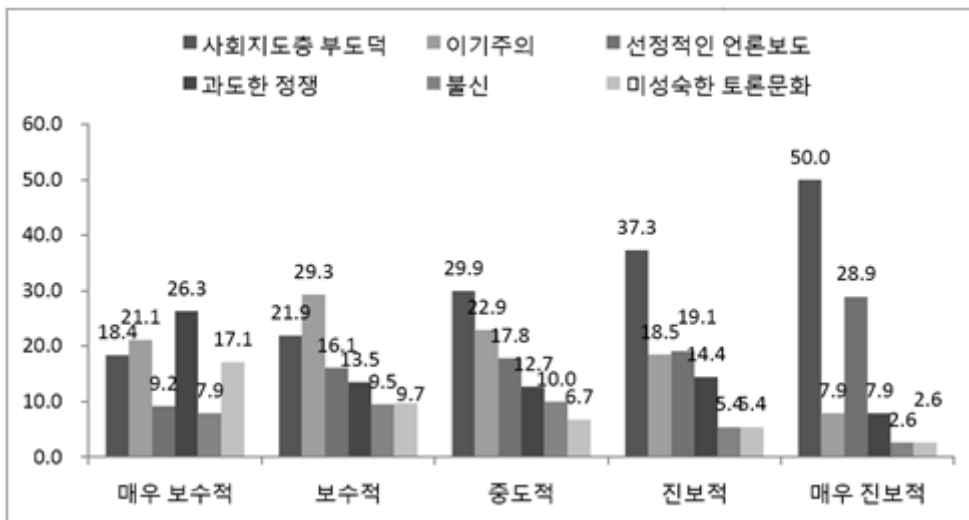
-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50%가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사회갈등 악화 요인으로 지적한 반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18.4%,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21.9%만이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사회갈등 악

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반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26.3%가 과도한 정쟁을 사회갈등 악화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29.3%는 개개인의 이기주의를 사회갈등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그림 4-23] 이념성향별 사회갈등 악화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X^2 = 96.045$  Pr = 0.000

- 이와 같이 이념성향에 따라 사회갈등과 그 악화요인을 보는 시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그 자체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제3절 소결

-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을 줄이고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전제이기도 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성장 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축적되고 최근 다문화 갈등, 환경갈등과 같은 새로운 갈등이 부상하면서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반복적 경제위기와 분배 상황 악화로 인해, 계층갈등은 지속적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 국민의 4명 중 3명 정도는 계층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계층갈등은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임.

○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분배 상황과 가계부채, 고용 상황 등은 악화되고 있어 더 이상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치 못하다는 인식, 즉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어려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영세자영업자와 시장상권의 보호, 각종 고용창출 프로그램, 주택시장 안정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혜택 강화 등 ‘성장과 분배’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대책을 통해 계층갈등을 완화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기저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국민통합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평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계층갈등과 함께 이념갈등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은 계층갈등보다 오히려 이념갈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2년 대선을 전후 해서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쟁점이 이념갈등으로 비화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계층갈등의 경우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이념갈등의 경우 그 실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보다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의식 변화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문제임.

- 최근 증가하고 이념갈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해결 촉구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바탕 위에, 정부와 정치권의 자각과 개선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즉, 극단적인 이념적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중도와 온건한 보수·진보 간의 타협과 컨센서스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역할과 중재 노력이 중요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 주요 갈등 영역, 즉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환경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30-40대(부분적으로 50대)의 경우 각 영역의 갈등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2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30-40대보다 갈등을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같은 경향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첫째, 30-40대는 소위 민주화세대로서 다른 세대에 비해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임. 2장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30-40대는 50-60대에 비해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 둘째, 30-50대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 경제·사회활동 계층으로써 사회의 갈등과 부조리를 좀 더 몸소 체험하는 사람들임. 따라서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발을 담그지 않은 20대나 본격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을 뺀 60대 이상의 사람들보다 갈등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실제로 계층갈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도나 진보성향이 강한 20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50대가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결국 갈등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 자체가 세대갈등의 또 다른 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우리사회는 압축성장의 결과로 전근대-근대-탈근대가 혼재된 사회임. 따라서 세대 간의 큰 인식의 격차 자체도 국민통합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한 주제라 할 수 있음.
- 그 세대만이 가진 독특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다른 세대에 강요하려는 경향 자체가 '수용과 인정'을 전제로 하는 국민통합의 정신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음.
- 세대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연령 이외에는 각 영역별 갈등에 대한 인식차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인들은 각 영역의 갈등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속한 집단의 특성과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영호남 지역에 따라 지역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세대갈등과 다문화갈등을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다문화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식임.

○ 이러한 결과는 일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게 하는 결과임.

-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기득권을 가진 집단(중산층 이상, 기업, 집권당, 특정 지역, 남성, 시민권자, 개발주의자 등등)임.
- 기득권 집단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국민통합이 강화될 수 있음.
-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갈등 영역-계층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남녀갈등, 환경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

적인 사람들과 매우 진보적인 사람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짐.

- 전반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에 비해 사회갈등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이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은 과도한 정쟁을 사회갈등 악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음.
- 그러나 스스로를 매우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3.8%, 매우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5.7% 정도만이 이념적으로 다소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 즉, 평균과는 갈등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이념의 양극단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나 여타의 측면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민의 대다수는 중도 혹은 온건한 보수-진보에 속하며, 이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은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 소수이지만 큰 목소리가 주도하는 사회보다는 낮은 목소리를 가진 다수가 주도하는 사회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중도 혹은 온건한 보수-진보적 사고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소통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여지가 매우 큼.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역할은 이와 같이 다수의 '낮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국민적 컨센서스'의 지지 기반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제5장 국민통합관련 현 쟁점에 대한 인식

제1절 복지지출 확대 및 자원 마련 방법

제2절 공공정책 갈등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

제3절 소결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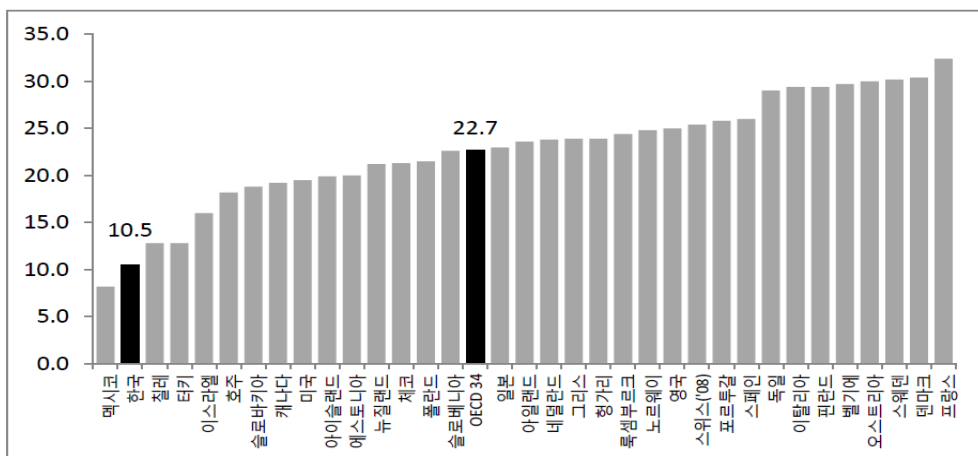
## 국민통합관련 현 쟁점에 대한 인식 <<

### 제1절 복지지출 확대 및 재원 마련 방법

####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31.1조원에서 2009년에는 약 112.1조원으로 증가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7년 국민기초노령연금 등 굵직굵직한 복지제도가 이 기간 동안 도입되면서 복지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
-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09년 GDP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10.5%로 OECD 34개국 평균인 2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8.2%의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그림 5-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2009년)



주: 공공부문과 법정민간부문을 합한 수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향후 복지수요의 증가를 예견하게 함.

○ 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복지확대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복지지출 확대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음.

○ 그러나 복지확대는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

- 특히, 향후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는 복지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2008년 GDP 대비 비중으로 간접세 8.4%(총세입대비 31.6%), 직접세 8.2%(총세입대비 31.0%), 사회보장기여금 5.8%(총세입대비 21.8%)의 순

○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은 OECD 국가 중 독일,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상이한 구조임.

- 직접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3.1%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법인세 비중은 4.2%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
- 한편,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최성은, 2012: 4-5)

□ 이 같은 세입구조 상황에서 향후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재정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각 세목 또는 조달 방법은 효율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예컨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이에 따른 소비감소 및 소득감소 효과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형평성 개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김승래 외, 2008; 전병목·박상

원, 2012: 202 재인용).

- 한편,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일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한계소비성향의 차이로 인해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증가액이 고소득층에서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부가가치세도 형평성 개선 목적에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음(김승래 외, 2008; 전병목·박상원, 2012: 203 재인용).
- 조세 유형별로 납세협력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효율성과 관련이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순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낮음(김승래 외, 2008; 전병목·박상원, 2012: 204 재인용).

□ 이처럼 세목별로 재원조달의 원칙들이 상충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할 때는 세목별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음(전병목·박상원, 2012: 204).

○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방법에 입각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납세자인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 복지지출 수준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 금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1%가 복지지출 확대에 찬성하고, 2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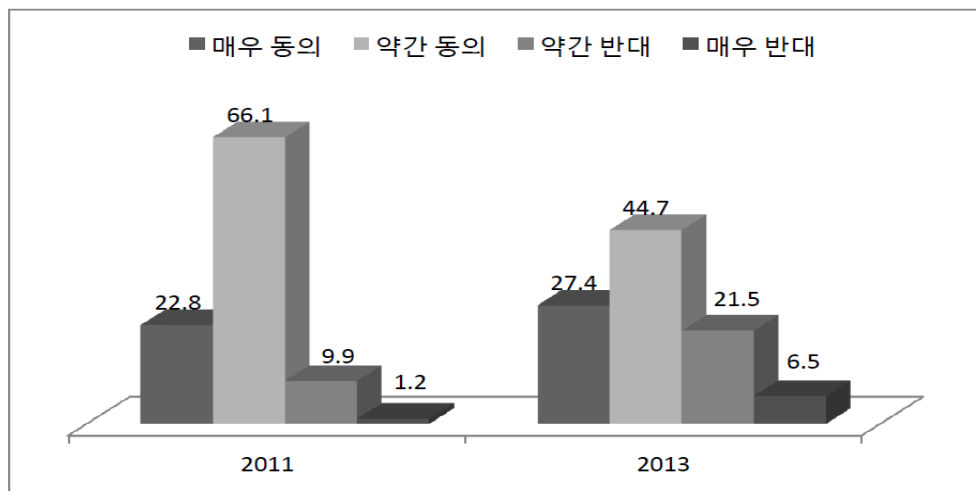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동의		1,441	72.1
	매우 동의함	547	27.4
	약간 동의함	894	44.7
반대		559	28.0
	별로 동의하지 않음	430	21.5
	전혀 동의하지 않음	129	6.5

- 이 같은 결과를 다른 조사 결과(김태완 외, 2012)와 비교해보면 2011년에는 88.9%가 찬성했지만 2013년에는 72.1%로 다소 감소
- 그러나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2011년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비율도 2011년에 비해 상승

[그림 5-2]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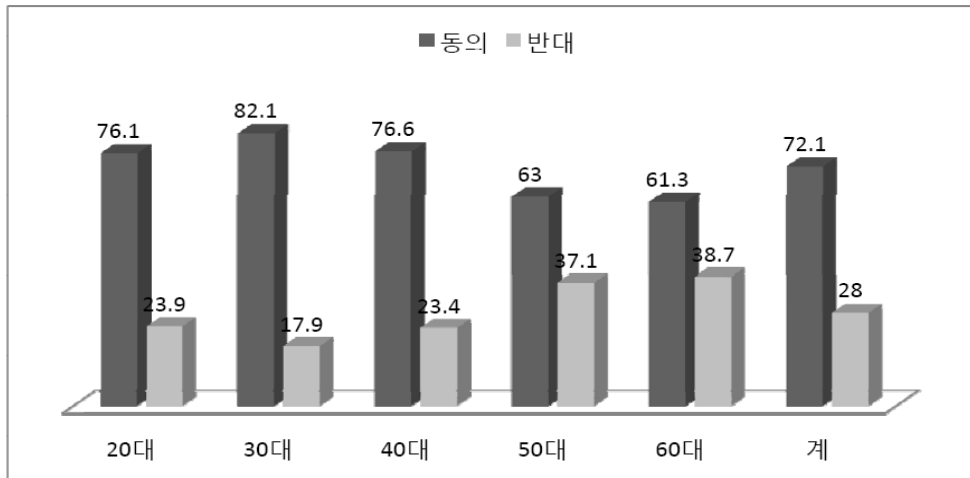
주: 2011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 및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

#### □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소 흥미로운 점을 발견

- 세금을 부담해야 할 30, 40대에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복지 욕구가 높은 50대 이상에서는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역설적인 현상이 발견
- 2011년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20, 30, 40대의 찬성비율이 50대 이상의 찬성비율보다 높게 나타남(김태완 외, 2012: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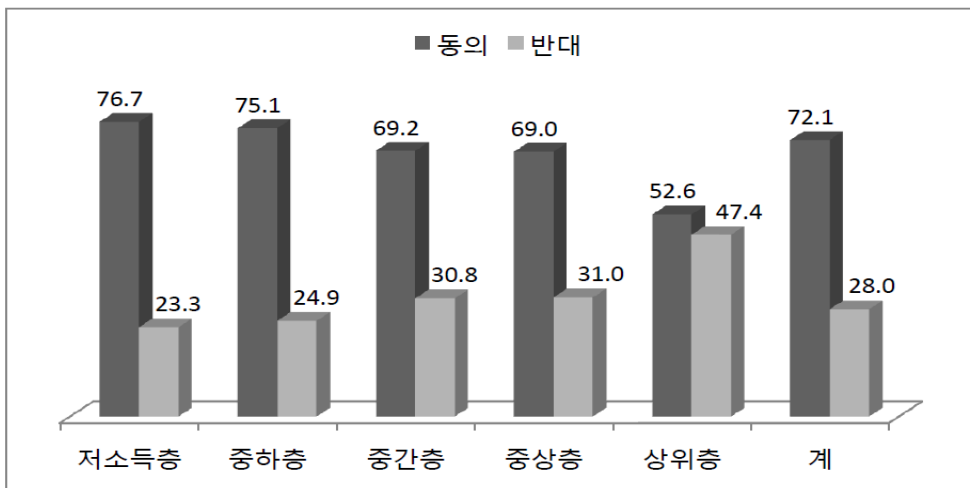
[그림 5-3] 연령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chi^2 = 84.3608$  Pr = 0.000

[그림 5-4] 주관적 소득계층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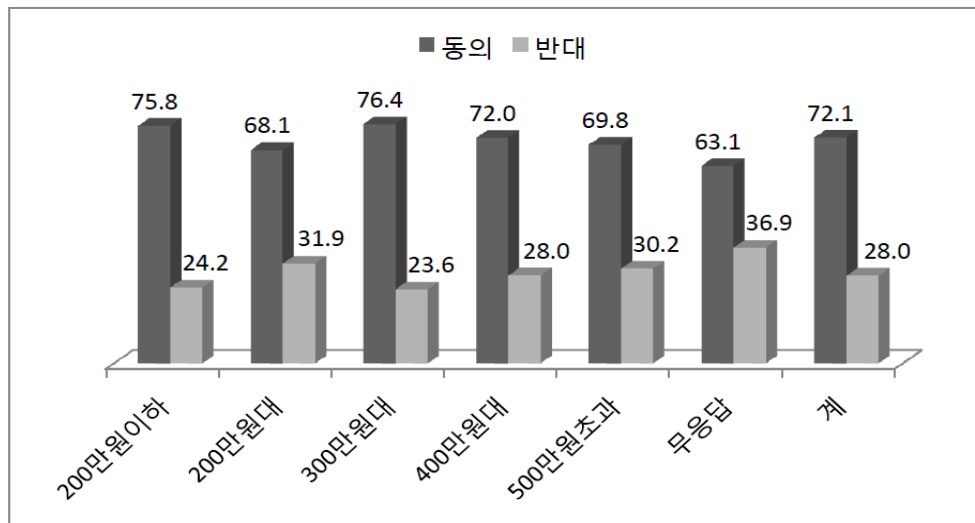
주:  $\chi^2 = 25.9510$  Pr = 0.011

□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저소득층 76.7%, 중간층 69.2%, 상위층 52.6%),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저소득층 23.3%, 중간층 30.8%, 상위층 47.4%).

○ 이는 스스로 저소득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일수록 복지 욕구가 높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합당한 결과로 풀이됨.

[그림 5-5] 월평균 소득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chi^2 = 37.9973$  Pr = 0.001

□ 실제 소득수준별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또한 주관적 소득계층별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복지욕구가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200만원 이하 75.8%, 300만원대 76.4%, 500만원 초과 63.1%), 고소득층일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200만원 이하 24.2%, 300만원대 23.6%, 500만원 초과 30.2%).

- 다만, 소득수준이 200만원대인 응답자의 경우는 동의하는 비율 68.1%, 반대하는 비율이 31.9%로 소득수준별 복지지출 확대 인식간의 전반적인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특징

○ 2011년 조사에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임.<sup>5)</sup>

- 1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 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지다가, 400만원대 이상의 구간에서 다시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그리고 100만원 미만의 가장 낮은 소득수준에서 복지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특징도 있음(김태완 외, 2012: 256).

○ 이로써 주관적 소득계층과 달리 실제 소득수준별로는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비례적인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학력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대학이상의 고학력자가 가장 높고(74.6%), 중졸이하(68.6%), 고졸(68.2%)의 순으로 나타나, 엄밀하게는 학력수준과 복지지출 확대가 완전하게 비례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음.

- 하지만 중졸이하와 고졸간의 차이가 미약(0.2% 포인트)한데다 학력수준을 대학이상과 고졸이하로만 구분하게 되면 비례관계가 명료

○ 2011년 조사에서는 대졸, 고졸, 중졸의 순으로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김태완 외, 2012: 255) 금번 조사와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줌.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론<sup>6)</sup>에 입각할 때 이 같은 결과는 다소 의외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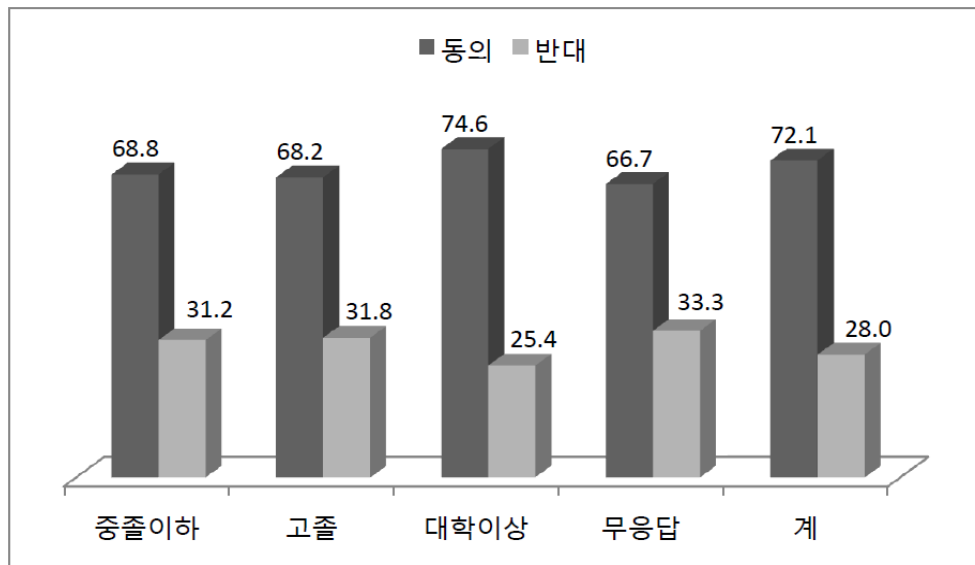
5) 동 조사에서는 소득구간을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대로 구분하고, 무응답이 없다는 점에서 본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6) 본 조사자료에서 학력과 소득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력과 주관적 소득계층의 상관계수 0.3216(1% 신뢰수준에서 유의), 학력과 월평균 소득의 상관계수 0.3388(1% 신뢰수준에서 유의)로 각각 계산된다.

- 2011년 조사와 본 조사에서 학력은 소득수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은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

[그림 5-6] 학력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chi^2 = 15.5262$  Pr = 0.077

□ 이념성향별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진보적일수록 복지지출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매우 보수적 63.2%, 중도 73.0%, 매우 진보적 73.7%), 보수적일수록 복지지출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매우 보수적 36.8%, 중도 27.0%, 매우 진보적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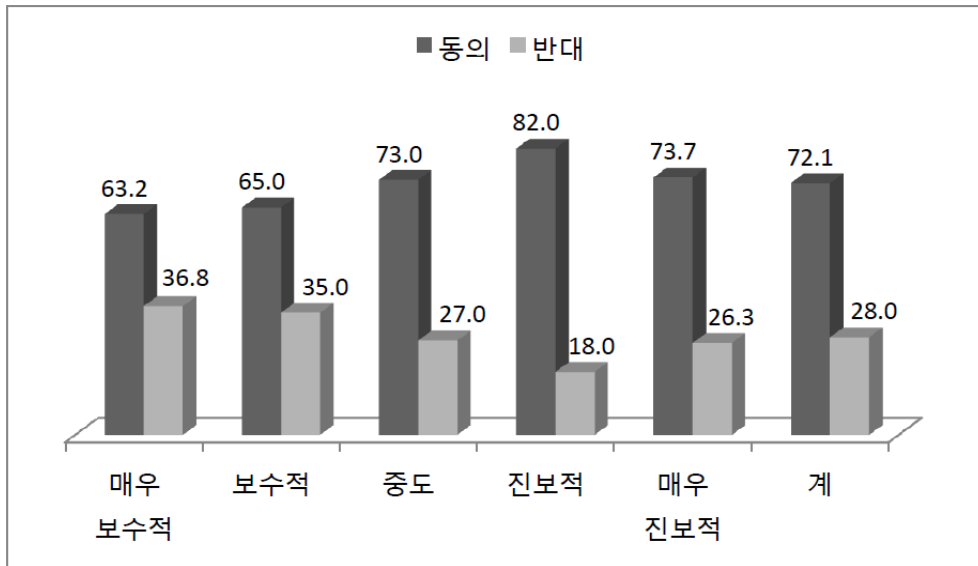
○ 다른 조사에서는 본 조사와 동일한 문항은 찾아보기 어려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강신욱 외(2011)는 이념성향에 따른 인구대상별(노인, 장애인, 근로빈곤층) 복지확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진보적일수록 장애인과 근로빈곤층 지원확대를 지지하고, 노인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비슷한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진보적일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가 강

## 한 것으로 나타나는 본 조사 결과와 상응

[그림 5-7] 이념성향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X^2 = 98.7800$  Pr = 0.000

## 나. 복지지출 확대와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상관계수의 값이 양이면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

□ 먼저 여러 특성들 중 성별과 학력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 연령대, 주관적 소득계층, 월평균 소득은 복지지출 확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이념성향은 복지지출 확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진보적

인 성향이 강할수록 복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

〈표 5-2〉 학력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구분	연령대	성별	주관적 소득계층	월평균 소득	학력	이념성향
복지지출 확대	0.154***	0.003	0.081***	0.084***	-0.038	-0.174***

주: \*\*, \*\*\*은 각각 신뢰수준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3. 복지지출 재원마련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1순위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42.3%)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세출조정(32.6%), 이용요금 인상(13.0%), 소득세 인상(12.2%) 순

○ 가구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인상과 이용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적인 반응을 보임.

○ 2순위로는 세출조정을 통해 재원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견(34.7%)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법인세 인상(27.4%), 이용요금 인상(20.2%), 소득세 인상(17.7%) 순으로 나타나, 2순위에서도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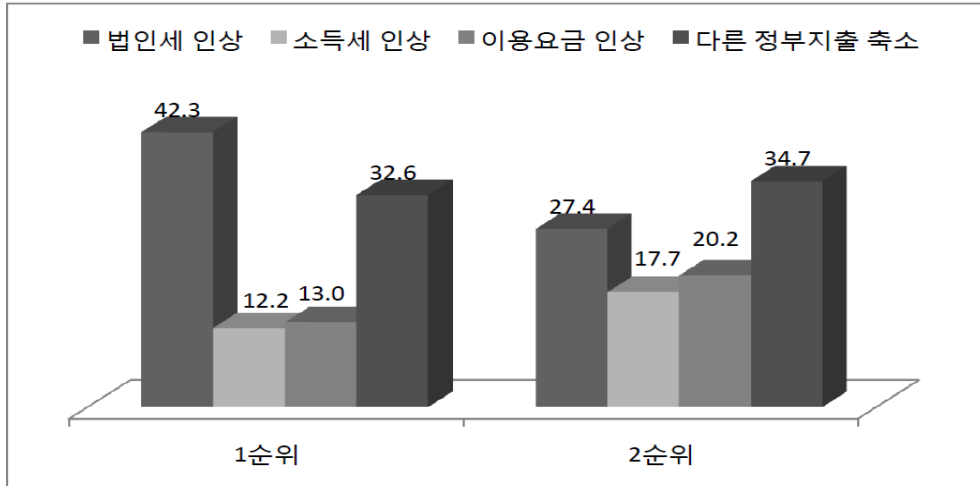
〈표 5-3〉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법인세 인상	845	42.3	845	42.3	414	27.4	414	27.4
소득세 인상	243	12.2	1,088	54.4	267	17.7	681	45.0
이용요금 인상	260	13.0	1,348	67.4	306	20.2	987	65.3
세출조정	652	32.6	2,000	100.0	525	34.7	1,512	100.0

[그림 5-8]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단위: %)



□ 2011년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지재원 마련방안을 설문한 결과를 보면,

○ 조세인상, 국공채 발행, 국가사업간 재원조정 중에서 고르도록 해, 본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조세인상과 국가사업간 재원조정이 같은 비중으로 선호된 것으로 나타남(김태완 외, 2012: 266).

□ 재원마련 방법 1순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30, 40대에서 법인세 인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50, 6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용요금 인상에 대한 선호가 강한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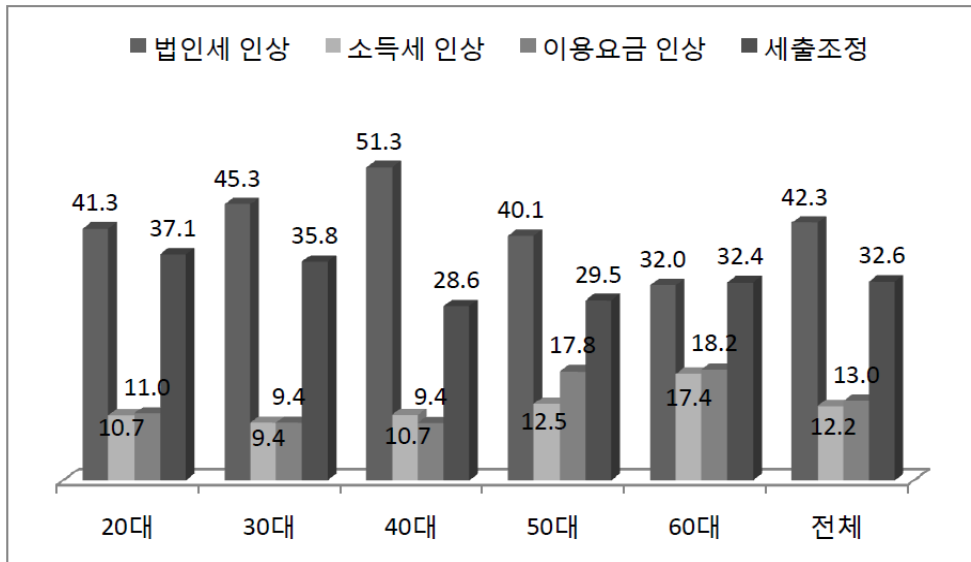
○ 이것은 전술한 연령대별 역설적인 선호상황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

- 30, 40대가 고령세대에 비해 복지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것은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안으로 본인 부담으로 귀착되는 방식보다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음.

• 즉,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 본인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는 것을 전제로 복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9] 연령대별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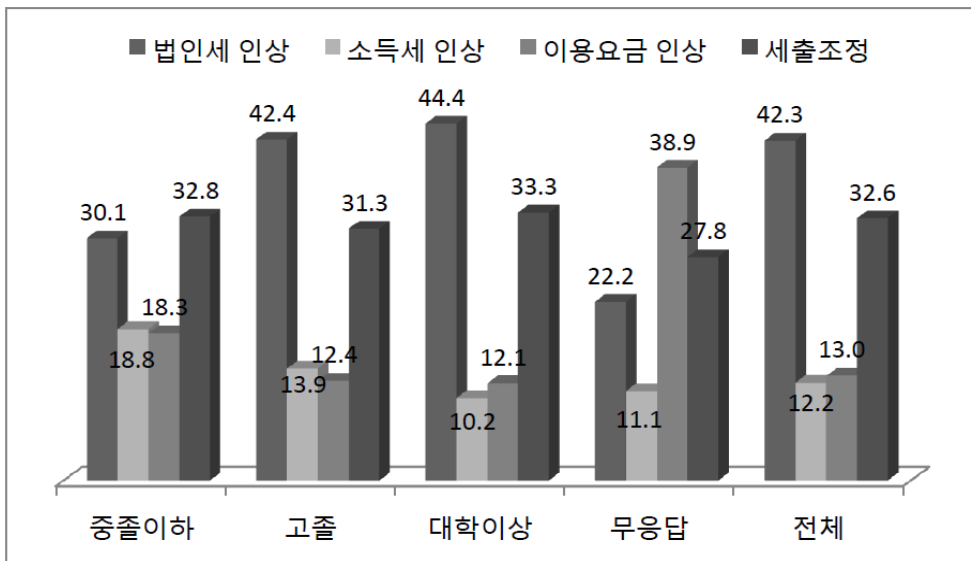
(단위: %)



주:  $X^2 = 65.553$  Pr = 0.000

[그림 5-10] 학력별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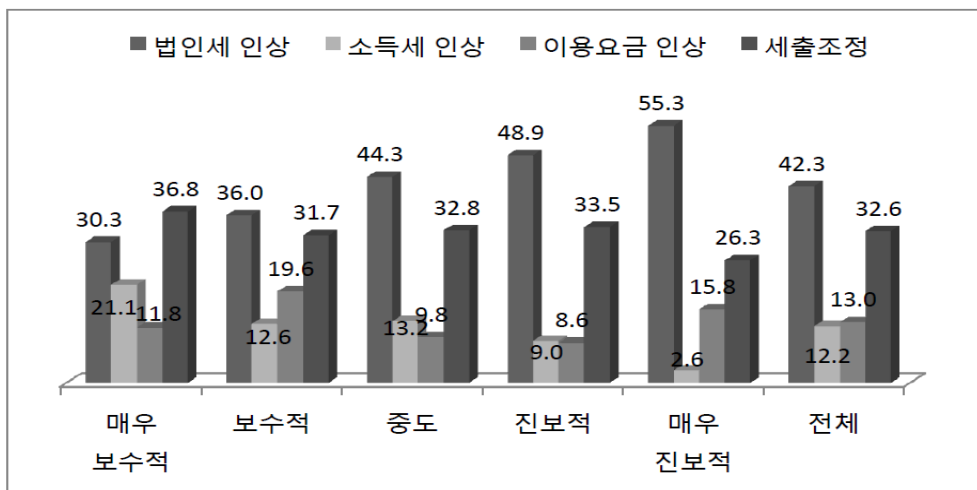


주:  $X^2 = 36.2666$  Pr = 0.000

-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안 1순위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법인세 인상을 선호하고(중졸이하 30.1%, 고졸 42.4%, 대학이상 44.4%), 소득세 인상(중졸이하 18.8%, 고졸 13.9%, 대학이상 10.2%)과 이용요금 인상(중졸이하 18.3%, 고졸 12.4%, 대학이상 12.1%)을 덜 선호하는 경향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조달방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세출조정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는 학력수준별로 비례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음.
-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안 1순위를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법인세 인상을 선호하고(매우 보수적 30.3%, 중도 44.3%, 매우 진보적 55.3%), 소득세 인상을 선호하지 않음(매우 보수적 21.1%, 중도 13.2%, 매우 진보적 2.6%) 경향을 보임.
- 이용요금 인상과 세출조정에 대해서는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비례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음.

[그림 5-11] 이념성향별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chi^2 = 65.6657$  Pr = 0.000

## 제2절 공공정책 갈등<sup>7)</sup>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

### 1. 검토 배경

□ 최근 주요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주민 혹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는 정책갈등이 급증하고 있음.

○ 가장 최근의 예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들 수 있음. 이 밖에도 4대강 개발, 제주 해군기지, 부안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원전 건설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야기된 바 있음.

- 이러한 갈등은 혐오시설의 입지에 반대하는 단순한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를 넘어서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환경갈등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에는 혐오시설의 입지에 반대하는 고전적 님비와는 반대로, 특정 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이른바 핼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도 새로운 지역 간 갈등으로 등장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핼피갈등의 대표적인 예로 동남권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들 수 있음.

〈표 5-4〉 최근 갈등의 유형과 해결방식

갈등유형	사례	해결방식
님비갈등	제주해군기지 부안방폐장	자율적·비공식적 주민투표 ⇒ 공권력 동원 및 대집행
핼피갈등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동강댐	중재(arbitration) ⇒ 정치적 논쟁
환경갈등 (개발 vs 보존)	4대강, 경인운하 새만금, 사패산, 천성산	민관위원회, 공동조사단 구성 ⇒ 소송

7) 정책갈등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야기되는 갈등으로, 사회 세력들 간의 표면상의 충돌과 더불어 행동을 통한 다툼, 경쟁과 논쟁, 그리고 긴장 등이 모두 갈등에 포함된다(김영중, 2008).

- 혐오시설의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나 지역 발전 차원에서의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 문제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이 부족할 때 갈등의 장기화와 극단화로 인한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초래된다는 것.
  - 특히, 최근 정부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물리적 저항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과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정책갈등이 현시화 되었을 때 국민의 반응 양식과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만한 해결책 모색의 단초로 삼고자 함.

## 2. 정부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반응

-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주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반응 양식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응답자의 35.5%는 ‘정부와 지역대표 간의 협상 결과에 따르겠다’는, 즉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식의 대응 양식을 선호하였음.
    - ‘어딘가에 들어서야 한다면 감내하겠다’는 수용적 반응(29.3%), ‘반대하지만 물리적 충돌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소극적 저항(23.8%)이 뒤를 이었음.
    - 한편, ‘이사가겠다’는 회피의 반응(7.8%)과 ‘무조건 반대하며,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적극적 저항의 반응(3.7%)도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반적인 수용적 반응은 질문에 대한 ‘바람직한 응답의 경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막상 그러한 일이 현시화 되었을 때의 태도와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를 수 있다는 것.

〈표 5-5〉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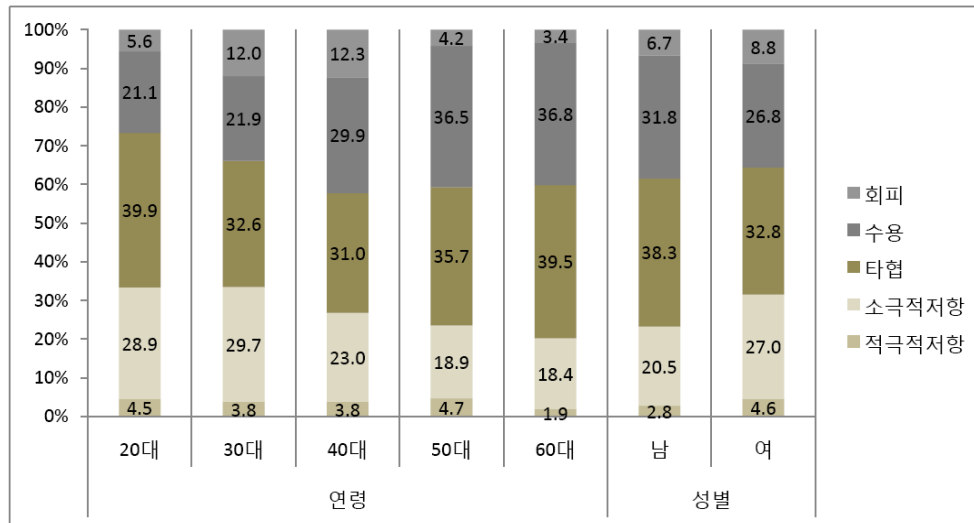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무조건 반대하며, 몸으로라도 막겠다(적극적 저항)	74	3.7	3.7
반대하지만 물리적 충돌에는 나서지 않겠다(소극적 저항)	476	23.8	27.5
정부와 지역대표와의 협상결과에 따르겠다(타협)	710	35.5	63.0
여단가에 들어서야 한다면 감내하겠다(수용)	585	29.3	92.3
이사를 가겠다(회피)	155	7.8	100.0

□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응 방식은 인구학적 특징(연령, 성별)과 소득계층(주관적 소득계층, 월 소득), 이념 성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그림 5-12〕 연령·성별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처방식

(단위: %)



주: 연령별  $X^2 = 101.8356$   $Pr = <.0001$ , 성별  $X^2 = 24.9013$   $Pr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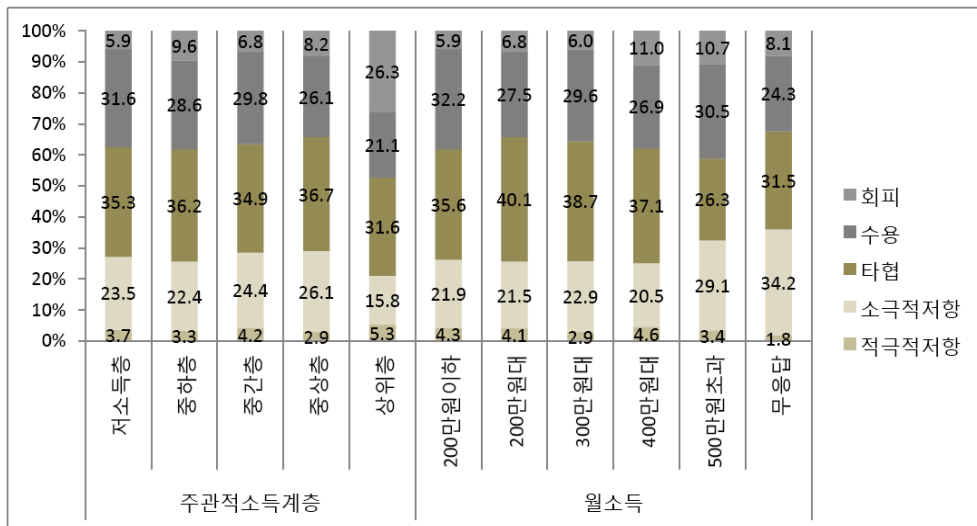
○ 20대와 30대의 경우 소극적 저항의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수용의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즉, 젊은층의 경우 물리적 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대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면, 고령층의 경우 감내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남.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소극적 저항의 의사가 더 강할 뿐 아니라, 회피의 경향 또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여성, 특히 주부의 경우 주거를 생활공간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 주관적 소득계층별 대처 방식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상위층 응답자의 경우 저항보다는 회피, 즉 이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 이는 가용한 자원을 가진 경우 저항보다는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됨.
  - 그러나 실제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저항과 회피 모두 더 강하게 나타났음.

[그림 5-13] 주관적 소득계층 및 월소득별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처방식

(단위: %)

주: 주관적 소득계층별  $X^2 = 19.245$   $Pr = 0.000$ , 월소득별  $X^2 = 43.2655$   $Pr =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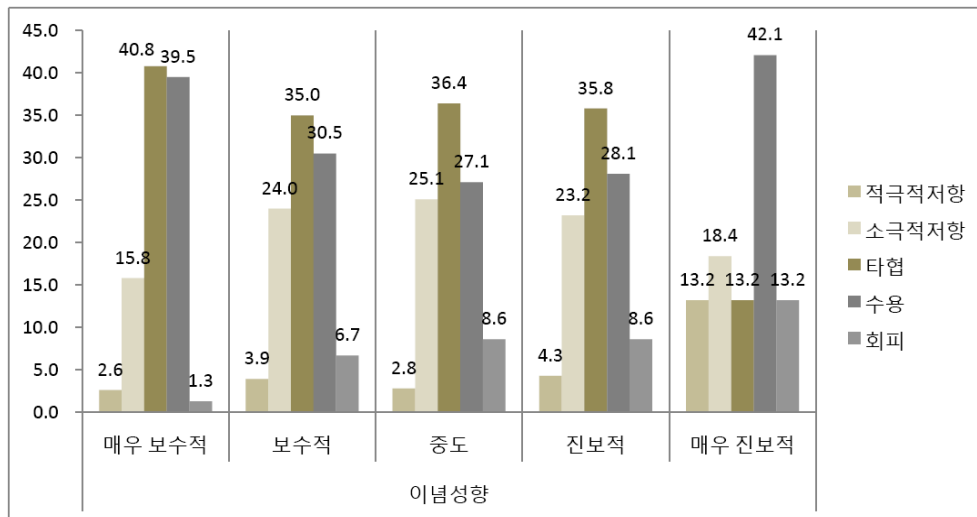
- 이념성향별 차이에서 두드러진 점은, 스스로를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적극적 저항과 수용 모두 다른 이념집단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
  - 이는 '진보'라면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지만, 정

당한 것에 대해서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도덕적 성향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보임.

- 스스로를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다른 이념집단들에 비해 타협과 수용의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수’의 안정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응방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그림 5-14] 이념성향별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처방식

(단위: %)



주:  $X^2 = 34.918$  Pr = 0.004

### 3. 정부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결책

□ 정부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울여야 할 가장 필요한 노력에 대한 조사 결과, 41.2%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달을 꼽았음.

○ 응답자의 33.3%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해결 문화 확산을 꼽았으며, 이어서 13.4%는 보상·이주 대책 등 갈등관련 법률 정비, 12.2%는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을 꼽았음.

- 현대 정보민주주의 사회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러한 의미에서 응답자의 3/4이 직접적 대책이나 참여보다는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설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신뢰 제고와 타협과 설득의 자세가 갈등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보상대책이나, 직접적 참여는 그 이후의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표 5-6〉 정부정책 갈등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243	12.2	12.2
투명한 정보공개 및 전달	823	41.2	53.3
보상, 이주 대책 등 갈등관련 법률 정비	268	13.4	66.7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해결 문화 확산	666	33.3	100.0

□ 정부의 갈등 해결 노력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 소득별, 이념성향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음.

○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갈등해결 문화 확산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20-30대의 젊은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갈등법률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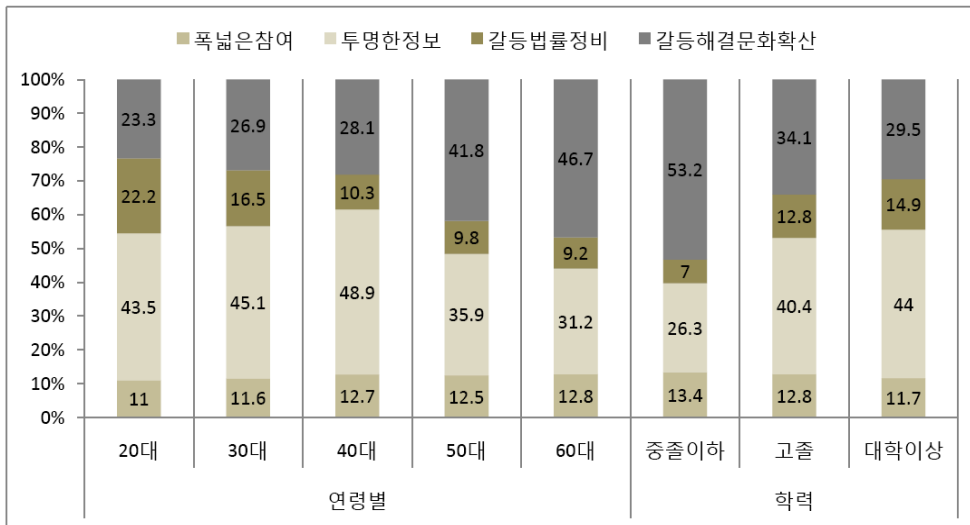
○ 이러한 경향은 학력별 차이에서도 뚜렷했는데,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정보 공개 필요성을 좀 더 중시한 반면, 중졸 이하 학력자들의 절반 이상은 갈등 해결 문화 확산에 정부 갈등 해결 노력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 같은 결과는 젊은층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정보사회에 익숙해져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 비해, 고령층일수록, 저학력자일수

록 정보보다는 직접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한 정부의 설득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5-15] 연령별·학력별 정부정책 갈등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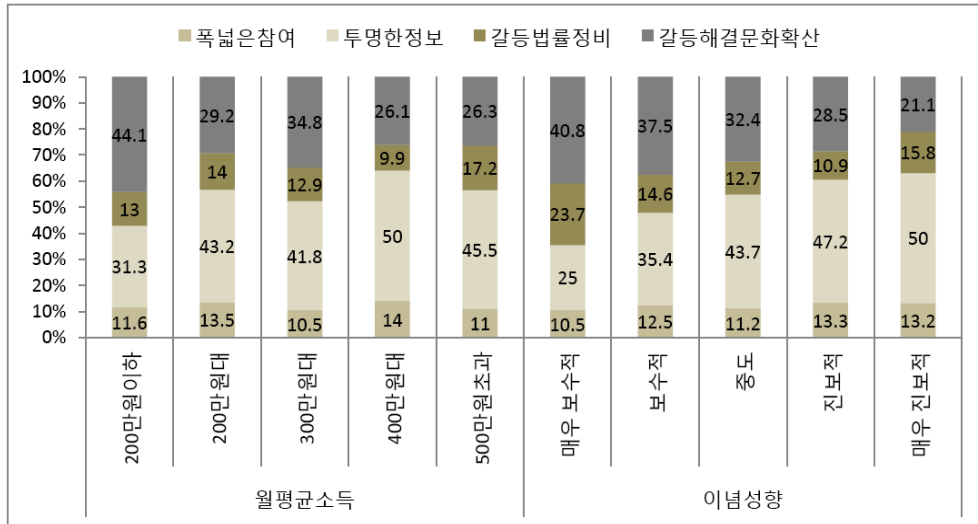
주: 연령별  $X^2 = 107.1827$  Pr = 0.000, 학력별  $X^2 = 52.6625$  Pr = 0.000

○ 이러한 경향은 월소득계층별, 이념성향별로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

- 즉, 다소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 공개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월소득 400만원대 응답자의 50%, 500만원 초과 이상 응답자의 45.5%가 투명한 정보공개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31.3%만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공공갈등 해결 노력의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44.1%가 갈등 해결문화 확산을 꼽고 있음.
- 이념 성향별로는 그 경향이 매우 일관성 있게 증감하여,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50%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꼽은 데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25%만이 투명한 정보공개를 일차적으로 주문하고 있음.

[그림 5-16] 월 소득 및 이념성향별 정부정책 갈등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단위: %)

주: 월평균 소득별  $X^2 = 57.1634$   $Pr = 0.000$ , 이념성향별  $X^2 = 36.7179$   $Pr = 0.000$ 

### 제3절 소결

□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다수(72.1%)가 복지지출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은 연령, 소득수준, 학력, 이념성향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세금을 주로 납부하는, 즉 복지공급자라 할 수 있는 30, 40대가 복지확대를 더 선호하고, 복지수요자인 50, 60대가 복지확대를 덜 선호하는 결과는 다소 역설적

○ 조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많은 국민들이 복지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사회지출 수준을 반영한 것임.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지출 수준이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즉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

복지확대에 대한 보다 선명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연령대별 역설적인 선호상황은 복지욕구와 부양의식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음.
  - 30, 40대 젊은 세대 당사자들의 경우 자녀 교육비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에 사회안전망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현 노인세대에 대해 사적인 부양보다 공적인 부양을 선호하는 경향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은퇴자의 노후생활에 자녀(5%)보다 정부(31%)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참고할 만함(Jackson et al., 2012).<sup>8)</sup>
  - 한편, 노인세대의 경우 젊은 세대에 비해 공적인 부양에 비해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나 자녀의 부양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음.

□ 본 의식조사 결과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직접세 중에서는 소비세보다 법인세 인상을 더욱 선호하고 있으며, 별도의 증세 없이 세출조정에 의한 방안을 두 번째로 많이 선호

- 이와 같은 성향은 연령, 학력, 이념성향을 불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됨.
- 향후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증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
  - 그 전에 세출조정과 누수억제 등의 조치가 따르겠지만 실효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움.
  - 결국 증세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상당

8) 은퇴자 자신의 책임이 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부 31%, 자녀와 과거 고용주 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 부담을 야기

- 특히, 본 조사 결과로부터 소비세 인상과 이용요금 인상과 같이 가계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더욱 큰 조세저항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법인세를 늘리는 것은 앞서 제기되었던 효율성과 형평성에 위해를 가저올 수 있음.

○ 이처럼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식은 조세의 다양한 원칙들의 상충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도 반드시 수반

- 따라서 모든 원칙을 충족하고 정치적 저항 없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복지지출 재원 조달방식을 고려할 때, 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 공공정책갈등은 현대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다수의 국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주할 경우 협상과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거나,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물론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의 태도와 일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저항의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문제는 어떻게 협상과 타협을 통해 원만한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느냐인데, 이와 관련해서 청장년층과 고학력자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일차적으로 주문하고 있음.

- 즉, 민주화 이후,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으로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솔직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작은 갈등이든 큰 갈등이든 물리적 충돌이나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하기 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갈등의 원만한 해소를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공공갈등해결에 있어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통해 신뢰를 제도화하고 소통과 타협의 창구를 시스템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제6장 정책적 제언



# 6

## 정책적 제언 <<

□ 현 정부와 국민들의 국민통합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안고 2013년 7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하였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소통과 공감 등 국민통합 문화의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 발전을 향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음(국민대통합위원회, 2013.12.6.).

○ 본 조사연구는 이러한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추어 본격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에 앞서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사업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되었음

- 구체적으로 국민통합의 개념과 조건, 각 영역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 해소의 우선순위, 현재의 쟁점에 대한 국민의 의견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얻는데 조사연구의 목적을 두었음.

○ 본 조사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이들의 의견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를 매우 보수적 혹은 매우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이념적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의 비율은 5% 내외의 극소수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가장 많은 국민들은 스스로를 중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도 다소 보수적 혹은 다소 진보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념적 극단화를 스스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가 다소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낮은 목소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다소 보수적-중도적-다소 진보적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견의 차이가 표출되지 않는 데 비해, 매우 보수적 대 매우 진보적인 이념 성향 간에는 많은 영역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95% 국민의 목소리를 주류의 의견으로 담아내고,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을 좀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노력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만큼 응답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음.

- 즉,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32.2%),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28.0%) 간에 큰 차이가 없었음.
-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의 우선 순위(합산 순위)에 있어서도 계층갈등(24.2%), 이념갈등(19.4%), 지역갈등(16.5%), 노사갈등(16.5%) 순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

○ 이와 같이, 국민들은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평등하고 깨끗하고 원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차원적 갈등 중 어느 한 가지만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지도 않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의 전략을 좀 더 세분화하고, 조직역량을 분업화·전문화함으로써 각 전략별·영역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낮추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본 조사 연구의 결과, 국민들은 세대갈등이 계층, 이념, 노사, 지역갈등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주요한 갈등 영역(계층, 이념, 세대, 환경갈등)에서 연령은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음.
  - 특히, 30-40대는 현재 경제·사회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는 세대로서 현재의 갈등 상태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데 비해, 20대와 60대 이상은 현실의 갈등에 대해 30-40대보다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함.
  - 또한 갈등 해결의 우선순위에서도 30-40대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 즉 계층갈등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50대 이상은 이념갈등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세대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갈등으로 부상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 세대 간 ‘현실 인식에 대한 온도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
  - 세대갈등이 다른 갈등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한 갈등을 단지 ‘집안문제’로 보는 경향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실상 노인빈곤과 자살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기초노령연금, 보육정책 등 세대갈등을 잠재한 정책들이 이미 가시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우리사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세대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절실함.
  - 이를 위해 먼저 각 세대만이 겪은 독특한 경험에 대해 상호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절실함.
    - 전쟁과 절대빈곤을 겪은 세대에게 힘든 일을 꺼리는 현 세대가 이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자라온 현 세대에게 유교적 형식과 틀을 고집하는 노인 세대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임.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세대 간 상호 다른 경험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자정(自淨) 노력, 부정부패의 타파,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실천 등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집단에 대한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본 조사를 통해 국민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인됨.

- 국민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가장 많은 국민(30.2%)이 부패와 특권의 타파를 꼽고 있으며,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역시 가장 많은 국민(28.9%)이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지목하고 있음.

○ 공정성은 '신뢰'의 기반이자 '결과에 대한 승복'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국민의 다수가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결과가 공정치 못하다고 여긴다면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국민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사회지도층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자질을 요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장치를 보완하는데 일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실천과 재능기부 등을 통해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공공갈등 해소를 제도적 영역으로 담아내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함.

○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민-관, 민-민 간의 갈등 상황이 물리력의 동원과 공권력과의 충돌이라는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음.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정 정도 갈등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를 투명한 정보 공개와 타협과 협상의 절차를 통해 민주적이고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형성이 절실함.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대통합의 중요한 차원 중 하나인 공공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해 갈등관리의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참고문헌 <<

- 강원택·정병기(2007).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공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인간사랑.
- 김병조(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여름호): 241-268.
- 김영중(2008). 지방정부 정책갈등관리전략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0(3): 1-24.
- 김종호·이창훈·신창현(2004). 환경분야 갈등 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태완 외(2012).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2013) 국민통합을 위한 추진전략 및 운영체계 연구(외부발표자료).
- 노대명·강신욱·김호기·이동원·유진영(2010). 한국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준(2013). 한국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삼성경제연구소.
- 서광민(2009).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득·교육 수준·직업·소득 만족도·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이병훈·윤정향(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여름호): 111-140.
- 장상수(1996). 한국 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위치. 사회와 역사. 49: 180-212.
- 전병목·박상원(2012). 복재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최성은(2012).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3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2). 사회조사. Kosis.kr
- 한국행정연구원(2012).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한준·설동훈(2006).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한국여성개발원.
- Colletta, N. J., & Cullen, M. L(2000). the nexus between violent conflict social capital and social cohesion: *Case Studies from Cambodia and Rwanda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No. 23) Washington: The World Bank.
- OECD(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 Veenhoven(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33-45.



---

## 부 록 <<

부록 1.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표 .....	153
------------------------------	-----

부록 2. 기초분석표 .....	157
-------------------	-----



## 부록 1.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표

##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원에서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국민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지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잠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해주신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를 응답지에 적는다.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식구 중 다른 사람을 바꾸도록 유도한다)

○ 응답자 나이 2013년 실제 나이 만 \_\_\_\_\_ 세(아래 응답지에 이기함)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 령	만    세(2013년 실제 나이 : 조사시점 만 나이)	
3) 거주지	(시/도)	

## &lt;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gt;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② 다소 높은 편이다	답변
③ 다소 낮은 편이다    ④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⑤ 보통이다	

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준수하는 편이다	답변
③ 잘 준수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⑤ 보통이다	

## &lt;사회갈등 평가&gt;

3. 우리사회의 각 사회집단 간 갈등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다음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은 <갈등이 매우 심하다>, 5는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입니다. 1~5까지의 숫자 중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심한 편이다 1	심한 편이다 2	보통이다 3	심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심하지 않다 5	답변
1) 계층갈등 (저소득층, 상위층 vs. 중산층)						
2) 노사갈등 (근로자 vs. 고용주)						
3) 이념갈등 (보수 vs. 진보)						
4) 지역갈등 (수도권 vs. 지방, 영남 vs. 호남)						
5) 세대갈등 (노인 vs. 청년층, 장년층 vs. 노인·청년층)						
6) 남녀갈등 (취업차별, 가사분담)						
7) 다문화갈등 (다인종/외국인문 제)						
8) 환경갈등 (개발 vs. 환경보존)						

4. 위의 8(여덟) 가지 갈등 중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번호기제).

제 1 순위		제 2 순위	
--------	--	--------	--

☞ 3번 답변과 내용이 심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4번 응답내용을 환기시켜 줌

5.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을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도한 정쟁(정치적 미성숙)	② 개인의 이기주의와 강한 권리주장	답변
③ 막말 등 토론문화 미성숙	④ 사회지도층의 부도덕	
⑤ 언론의 선정적 보도경향	⑥ 서로간의 불신	

### <국민통합의 의미와조건>

6.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각종 사회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	②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	답변
③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	④ 강하고 경쟁력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7.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성장	② 정치안정	③ 법치확립	답변
④ 기화균등	⑤ 시민의식 제고	⑥ 부패와 특권의 타파	

### <주요쟁점>

8. 귀하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답변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귀하는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기업의 법인세 인상      ② 개인의 소득세 인상	1순위	2순위
③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이용요금 인상		
④ 다른 정부지출 축소		

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에 쓰레기폐기장이나 송전탑 같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무조건 반대하며, 몸으로라도 막겠다. ② 반대하지만 물리적 충돌에는 나서지 않겠다. ③ 정부와 지역대표와의 협상결과에 따르겠다. ④ 어딘가에 들어서야 한다면 감내하겠다.      ⑤ 이사를 가겠다.	답변
---	----

11. 귀하께서는 정부 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기울여야 할 가장 필요한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답변
②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전달	
③ 보상, 이주 대책 등 갈등관련 법률 정비	
④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해결 문화 확산	

DQ 1.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	답변

DQ 2. 귀 가구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이하    ③ 201~300만원 이하 ④ 301~400만원 이하    ⑤ 401~500만원 이하    ⑥ 501~600만원 이하 ⑦ 601만원 이상    ⑧ 무응답(제시하지 않음)	답변

DQ 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이상 ④ 무응답(제시하지 않음)	답변

DQ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자(경영자) ③ 생산직 근로자 ④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⑤ 가정주부 ⑥ 학생 ⑦ 무직/기타	답변

DQ 5.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이념적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굳이 구분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보수적 ② 보수적 ③ 중도적 ④ 진보적 ⑤ 매우 진보적	답변

※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록 2. 기초분석표

〈부표 1〉 집단별 계층의식의 분포

(단위: %)

구분		저소득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chi^2$
전체		18.7	27.5	40.6	12.3	1.0	100.0	
성별	남성	20.4	29.5	37.0	12.3	0.9	100.0	11.848*
	여성	17.1	25.6	44.1	12.2	1.0	100.0	
연령	20대	12.9	27.5	43.0	15.2	1.4	100.0	58.079***
	30대	13.0	28.8	43.9	13.2	1.2	100.0	
	40대	17.0	29.7	41.5	10.7	1.1	100.0	
	50대	20.9	25.4	39.8	13.1	0.8	100.0	
	60대 이상	29.5	25.7	34.9	9.7	0.2	100.0	
지역	수도권	17.5	27.6	41.1	12.9	1.0	100.0	2.277
	비수도권	19.8	27.4	40.2	11.7	0.9	100.0	
	서울	16.2	26.3	43.7	12.3	1.5	100.0	13.773
	경기,인천	18.5	28.5	39.1	13.3	0.7	100.0	
	강원,충청	18.1	28.0	42.1	11.8	0.0	100.0	
	영남	19.3	28.6	38.8	12.1	1.1	100.0	
	호남	23.7	24.6	40.6	9.7	1.5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3.7	29.2	14.6	1.8	0.7	100.0	862.903***
	201~300만원 이하	16.7	44.7	34.3	4.1	0.2	100.0	
	301~400만원 이하	8.4	28.4	52.7	10.3	0.2	100.0	
	401~500만원 이하	3.0	19.7	62.5	14.8	0.0	100.0	
	500만원 초과	2.5	10.7	47.5	35.3	4.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50.5	22.0	23.1	3.8	0.5	100.0	275.225***
	고졸	26.7	31.8	36.3	4.6	0.7	100.0	
	대학이상	9.5	26.3	45.6	17.5	1.2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16.9	25.0	43.6	13.2	1.4	100.0	46.818***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16.1	28.0	41.1	13.8	1.0	100.0	
	생산직 근로자	38.5	34.6	24.0	1.9	1.0	100.0	
	주부/기타	19.1	27.1	41.1	11.9	0.8	100.0	
이념	매우 보수적	31.6	25.0	36.8	4.0	2.6	100.0	32.368**
	보수적	19.8	28.0	40.0	11.6	0.6	100.0	
	중도적	19.3	27.7	40.0	12.2	0.9	100.0	
	진보적	14.2	27.3	43.6	14.2	0.9	100.0	
	매우 진보적	18.4	23.7	34.2	18.4	5.3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2〉 집단별 이념 성향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보수적	다소 보수적	중도적	다소 진보적	매우 진보적	전체	X <sup>2</sup>
전체		3.8	33.9	37.4	23.3	1.9	100.0	
성별	남성	4.4	32.0	37.9	23.2	2.5	100.0	6.436
	여성	3.2	35.1	37.0	23.4	1.4	100.0	
연령	20대	2.3	23.6	43.8	29.2	1.1	100.0	173.634***
	30대	1.4	25.2	38.7	32.3	2.4	100.0	
	40대	3.1	27.5	38.4	27.7	3.4	100.0	
	50대	4.7	41.5	34.8	17.8	1.1	100.0	
	60대 이상	7.5	50.6	31.7	9.0	1.2	100.0	
지역	수도권	3.4	32.8	37.4	24.9	1.5	100.0	4.498
	비수도권	4.2	34.3	37.5	21.8	2.2	100.0	
	서울	3.1	34.8	37.7	22.5	1.9	100.0	27.412*
	경기, 인천	3.6	31.4	37.1	26.7	1.3	100.0	
	강원, 충청	5.5	34.7	37.6	19.6	2.6	100.0	
	영남	4.6	37.9	35.0	20.3	2.3	100.0	
	호남	1.9	25.6	41.6	29.5	1.5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6.4	35.6	38.5	17.7	1.9	100.0	32.368**
	중하층	3.5	34.2	37.6	23.1	1.6	100.0	
	중간층	3.5	33.1	36.8	25.0	1.6	100.0	
	중상층	1.2	31.8	37.1	26.9	2.9	100.0	
	상위층	10.5	21.1	36.8	21.1	10.5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8.5	40.6	34.3	14.8	1.8	100.0	69.134***
	201~300만원 이하	2.9	34.5	37.7	23.4	1.5	100.0	
	301~400만원 이하	2.9	33.4	36.5	26.0	1.2	100.0	
	401~500만원 이하	1.9	29.6	37.5	27.7	3.4	100.0	
	500만원 초과	2.3	28.3	37.9	29.1	2.5	100.0	
학력별	중졸이하	7.0	41.4	40.9	10.2	0.5	100.0	80.555***
	고졸	4.5	43.5	30.3	19.7	2.0	100.0	
	대학이상	2.9	27.5	40.3	27.3	2.0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3.7	30.4	34.1	28.4	3.4	100.0	61.864***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2.1	28.4	38.3	29.0	2.2	100.0	
	생산직 근로자	4.8	34.6	33.7	25.0	1.9	100.0	
	주부/기타	5.1	38.9	38.2	16.7	1.1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3〉 집단별 자유와 권리 수준에 대한 인식의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전체	X <sup>2</sup>
전체		10.4	27.1	40.7	16.1	5.8	100.0	
성별	남성	12.5	25.9	37.6	17.2	6.9	100.0	18.74***
	여성	8.4	28.3	43.6	15.0	4.8	100.0	
연령	20대	4.8	27.0	40.2	20.2	7.9	100.0	123.82***
	30대	5.2	23.4	43.4	20.3	7.8	100.0	
	40대	6.5	27.0	42.6	17.2	6.7	100.0	
	50대	16.2	26.5	39.0	14.2	4.2	100.0	
	60대 이상	19.9	31.7	37.5	8.5	2.4	100.0	
지역	수도권	10.0	24.5	40.2	19.0	6.3	100.0	16.396**
	비수도권	10.8	29.6	41.1	13.2	5.4	100.0	
	서울	10.1	24.2	42.0	19.3	4.4	100.0	51.80***
	경기,인천	9.9	24.7	38.9	18.8	7.7	100.0	
	강원,충청	8.9	24.7	44.3	16.6	5.5	100.0	
	영남	12.5	35.6	36.9	10.2	4.7	100.0	
	호남	9.2	20.8	46.9	16.4	6.8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11.2	21.9	42.5	15.5	8.8	100.0	25.831**
	중하층	9.6	25.8	40.9	18.4	5.3	100.0	
	중간층	10.0	28.5	41.5	15.5	4.6	100.0	
	중상층	11.8	33.9	33.9	13.9	6.5	100.0	
	상위층	15.8	21.1	47.4	10.5	5.3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3.9	23.7	43.4	12.8	6.2	100.0	30.763**
	200만원대	10.9	25.9	43.7	14.3	5.3	100.0	
	300만원대	7.2	30.3	39.6	18.1	4.8	100.0	
	400만원대	9.1	28.0	38.6	17.4	6.8	100.0	
	500만원 초과	11.3	29.7	34.8	18.1	6.2	100.0	
	무응답	7.2	22.5	46.0	18.0	6.3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0.2	23.7	52.2	12.9	1.1	100.0	28.60***
	고졸	12.3	26.8	42.1	13.4	5.5	100.0	
	대학이상	9.6	27.9	38.2	17.8	6.6	100.0	
	무응답	5.6	22.2	38.9	22.2	11.1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12.2	26.7	15.9	6.4	38.9	100.0	37.091***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9.1	25.7	20.1	8.0	37.1	100.0	
	생산직 근로자	11.5	20.2	14.4	3.8	50.0	100.0	
	기타/무직/농업어업/ 학생/가정주부	10.7	29.3	12.9	4.0	43.1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25.0	23.7	38.2	5.3	7.9	100.0	116.34***
	보수적	15.6	30.2	39.9	10.9	3.4	100.0	
	중도적	8.6	26.5	41.7	18.3	5.0	100.0	
	진보적	4.3	25.3	39.9	21.0	9.4	100.0	
	매우 진보적	0.0	13.2	47.4	23.7	15.8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4〉 집단별 책임과 의무 준수 정도에 대한 인식의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잘 준수함	대체로 준수함	보통	잘 준수하지 않음	전혀 준수하지 않음	전체	X <sup>2</sup>
전체		2.6	34.3	30.6	29.4	3.2	100.0	
성별	남성	1.7	31.7	29.3	33.2	4.1	100.0	23.97***
	여성	3.4	36.7	31.8	25.8	2.4	100.0	
연령	20대	0.8	36.0	34.6	24.7	3.9	100.0	35.00***
	30대	2.6	36.6	32.8	26.2	1.9	100.0	
	40대	2.7	36.8	29.2	29.2	2.0	100.0	
	50대	2.2	31.5	27.3	34.8	4.2	100.0	
	60대 이상	4.4	30.0	29.1	32.2	4.4	100.0	
지역	수도권	2.1	35.1	29.6	30.4	2.9	100.0	4.229
	비수도권	3.1	33.5	31.4	28.5	3.5	100.0	
	서울	2.7	37.2	28.0	28.0	4.1	100.0	14.812
	경기, 인천	1.6	33.5	30.8	32.1	2.0	100.0	
	강원, 충청	3.7	31.4	33.2	28.4	3.3	100.0	
	영남	2.7	34.9	30.9	28.4	3.2	100.0	
	호남	3.9	32.9	31.4	27.5	4.4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2.7	28.3	32.1	31.0	5.9	100.0	40.24***
	중하층	3.3	33.3	28.4	32.2	2.9	100.0	
	중간층	2.6	36.2	32.8	26.5	2.0	100.0	
	중상층	1.2	39.2	26.1	30.6	2.9	100.0	
	상위층	0.0	31.6	26.3	26.3	15.8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4.3	30.6	31.1	29.2	4.8	100.0	25.567*
	200만원대	2.4	33.1	30.9	31.4	2.2	100.0	
	300만원대	1.9	36.8	29.6	29.1	2.6	100.0	
	400만원대	1.9	32.6	31.4	30.7	3.4	100.0	
	500만원 초과	1.7	39.3	27.4	28.8	2.8	100.0	
	무응답	3.6	31.5	38.7	22.5	3.6	100.0	
학력별	중졸이하	3.8	22.6	37.1	32.8	3.8	100.0	23.20**
	고졸	2.7	32.5	29.8	32.0	3.2	100.0	
	대학이상	2.4	37.1	29.9	27.7	3.0	100.0	
	무응답	5.6	27.8	33.3	22.2	11.1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1.4	30.7	32.8	3.0	32.1	100.0	19.957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2.2	37.4	29.9	2.6	27.9	100.0	
	생산직 근로자	1.9	26.0	30.8	6.7	34.6	100.0	
	기타/무직/농업/학 생/가정주부	3.4	33.8	27.7	3.3	31.8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5.3	30.3	27.6	30.3	6.6	100.0	33.09***
	보수적	1.9	35.7	29.0	29.5	3.9	100.0	
	중도적	3.2	33.2	33.6	27.7	2.4	100.0	
	진보적	2.2	34.6	29.8	31.3	2.2	100.0	
	매우 진보적	2.6	34.2	13.2	36.8	13.2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5〉 연도별 사회집단 간 갈등의 정도 추이

(단위: %)

구분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Total
계층갈등	2010년	0.4	3.6	19.5	49.0	27.6	100.0
	2011년	0.3	5.4	18.6	53.4	22.3	100.0
	2012년	0.2	2.1	15.7	45.7	36.5	100.0
	2013년	0.3	3.4	22.4	49.1	24.9	100.0
노사갈등	2010년	49.0	27.6	100.0	51.1	15.9	100.0
	2011년	53.4	22.3	100.0	52.2	22.3	100.0
	2012년	45.7	36.5	100.0	47.3	16.4	100.0
	2013년	49.1	24.9	100.0	48.7	18.0	100.0
이념갈등	2010년	0.9	4.8	26.1	47.7	20.4	100.0
	2011년	1.0	14.2	36.3	39.5	9.0	100.0
	2012년	0.9	3.6	31.8	40.5	23.3	100.0
	2013년	0.2	3.5	23.7	42.2	30.5	100.0
지역갈등	2010년	1.1	10.9	29.3	43.2	15.4	100.0
	2011년	1.3	16.2	30.8	37.4	14.2	100.0
	2012년	1.6	9.6	32.8	37.4	18.7	100.0
	2013년	0.5	7.5	29.9	41.1	21.1	100.0
세대갈등	2010년	1.4	13.7	35.8	40.0	9.2	100.0
	2011년	1.8	15.6	32.7	37.1	12.7	100.0
	2012년	0.9	8.0	33.1	41.3	16.8	100.0
	2013년	0.9	6.9	38.8	39.9	13.6	100.0
남녀갈등	2010년	5.4	29.8	39.6	22.6	2.7	100.0
	2011년	5.5	22.1	44.3	24.5	3.5	100.0
	2012년	2.8	15.5	49.6	25.7	6.5	100.0
	2013년	1.6	13.7	53.9	26.1	4.8	100.0
다문화갈등	2010년	2.3	24.3	38.6	30.8	4.1	100.0
	2011년	2.0	19.9	38.1	36.8	3.1	100.0
	2012년	2.1	15.1	46.0	29.2	7.7	100.0
	2013년	1.1	11.1	40.0	38.9	8.9	100.0
환경갈등	2010년	0.9	8.0	33.3	47.0	10.8	100.0
	2011년	0.6	10.1	39.5	40.7	9.0	100.0
	2012년	1.5	8.0	39.1	37.9	13.7	100.0
	2013년	0.8	5.9	41.8	39.0	12.6	100.0

〈부표 6〉 집단별 계층 갈등의 정도 평가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전체	X2
전체		24.9	49.1	22.4	3.4	0.3	100.0	
성별	남성	28.0	47.0	20.9	3.9	0.2	100.0	12.727*
	여성	21.9	51.0	23.9	2.9	0.3	100.0	
연령	20대	21.1	46.1	26.7	5.9	0.3	100.0	80.202***
	30대	25.5	55.9	16.3	2.4	0.0	100.0	
	40대	29.2	51.1	17.6	1.8	0.2	100.0	
	50대	28.1	49.6	19.2	2.2	0.8	100.0	
	60대 이상	20.1	41.9	32.9	5.1	0.0	100.0	
지역	수도권	26.3	50.0	20.5	2.9	0.3	100.0	6.811
	비수도권	23.5	48.2	24.2	3.9	0.2	100.0	
	서울	26.1	48.8	20.8	4.1	0.2	100.0	19.285
	경기, 인천	26.5	50.9	20.3	2.0	0.4	100.0	
	강원, 충청	24.4	50.2	22.5	3.0	0.0	100.0	
	영남	23.3	45.8	26.9	3.8	0.2	100.0	
	호남	23.2	50.2	20.3	5.8	0.5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33.7	45.2	17.4	3.5	0.3	100.0	49.776***
	중하층	29.5	47.5	20.0	2.7	0.4	100.0	
	중간층	18.7	51.2	26.1	3.7	0.2	100.0	
	중상층	22.4	50.2	24.1	3.3	0.0	100.0	
	상위층	15.8	63.2	10.5	10.5	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8.1	40.6	26.5	3.9	0.9	100.0	36.964*
	200만원대	27.1	49.8	20.0	3.1	0.0	100.0	
	300만원대	23.2	51.6	22.2	2.9	0.2	100.0	
	400만원대	23.9	50.8	21.2	4.2	0.0	100.0	
	500만원 초과	22.9	55.4	18.6	3.1	0.0	100.0	
	무응답	19.8	45.9	30.6	3.6	0.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8.8	46.8	29.0	4.8	0.5	100.0	50.376***
	고졸	29.1	42.1	24.5	4.1	0.2	100.0	
	대학이상	23.8	52.9	20.3	2.8	0.2	100.0	
	무응답	16.7	50.0	22.2	5.6	5.6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27.4	51.4	17.2	4.1	0.0	100.0	33.451**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27.0	51.3	19.0	2.5	0.1	100.0	
	생산직 근로자	31.7	41.3	21.2	4.8	1.0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학생 /가정주부	21.5	47.3	27.1	3.8	0.3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27.6	42.1	21.1	9.2	0.0	100.0	43.581***
	보수적	23.2	47.3	25.4	3.4	0.6	100.0	
	중도적	21.9	50.9	23.5	3.5	0.1	100.0	
	진보적	29.8	50.6	17.2	2.4	0.0	100.0	
	매우 진보적	47.4	36.8	13.2	2.6	0.0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7〉 집단별 노사 갈등의 정도 평가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전체	X <sup>2</sup>
전체		18.0	48.7	29.4	3.7	0.3	100.0	
성별	남성	21.1	47.4	28.1	3.0	0.4	100.0	16.419**
	여성	15.1	50.0	30.5	4.4	0.1	100.0	
연령	20대	17.7	47.8	30.3	3.9	0.3	100.0	25.531
	30대	16.3	54.7	26.4	2.4	0.2	100.0	
	40대	19.4	48.9	28.8	2.9	0.0	100.0	
	50대	18.7	47.4	27.0	6.7	0.3	100.0	
	60대 이상	17.9	44.3	34.1	3.1	0.5	100.0	
지역	수도권	19.8	47.3	28.8	3.8	0.3	100.0	4.471
	비수도권	16.3	50.0	29.9	3.6	0.2	100.0	
	서울	21.3	46.6	27.1	4.6	0.5	100.0	12.694
	경기,인천	18.6	47.8	30.1	3.2	0.2	100.0	
	강원,충청	16.6	53.1	26.6	3.3	0.4	100.0	
	영남	16.9	47.9	30.9	4.2	0.2	100.0	
	호남	14.5	50.2	32.4	2.9	0.0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20.6	46.3	29.1	3.7	0.3	100.0	15.470
	중하층	20.9	49.1	26.2	3.5	0.4	100.0	
	중간층	15.0	48.9	32.0	3.8	0.2	100.0	
	중상층	18.0	49.8	28.6	3.7	0.0	100.0	
	상위층	10.5	63.2	21.1	5.3	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9.4	44.5	31.1	4.1	0.9	100.0	26.168
	200만원대	19.3	47.8	30.9	1.9	0.0	100.0	
	300만원대	16.7	50.6	28.6	4.1	0.0	100.0	
	400만원대	16.7	50.0	28.8	4.2	0.4	100.0	
	500만원 초과	19.5	50.6	25.7	4.2	0.0	100.0	
	무응답	10.8	52.3	32.4	4.5	0.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3.4	41.4	37.1	7.5	0.5	100.0	22.283*
	고졸	19.4	48.3	28.6	3.5	0.2	100.0	
	대학이상	18.1	50.1	28.4	3.1	0.3	100.0	
	무응답	11.1	44.4	33.3	11.1	0.0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18.6	53.0	24.3	3.7	0.3	100.0	26.776**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20.1	49.9	27.2	2.8	0.0	100.0	
	생산직 근로자	25.0	43.3	26.9	3.8	1.0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15.2	46.9	33.1	4.5	0.3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23.7	38.2	28.9	7.9	1.3	100.0	37.750**
	보수적	17.6	48.2	30.2	3.7	0.3	100.0	
	중도적	15.9	49.2	30.3	4.4	0.1	100.0	
	진보적	18.9	51.3	27.5	2.1	0.2	100.0	
	매우 진보적	44.7	36.8	18.4	0.0	0.0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8〉 집단별 이념 갈등의 정도 평가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전체	X <sup>2</sup>
전체		30.5	42.2	23.7	3.5	0.2	100.0	
성별	남성	36.6	37.8	21.6	3.9	0.1	100.0	37.012***
	여성	24.6	46.3	25.7	3.1	0.2	100.0	
연령	20대	25.3	41.0	28.7	5.1	0.0	100.0	37.127**
	30대	31.6	42.5	24.3	1.2	0.5	100.0	
	40대	31.7	44.6	19.9	3.6	0.2	100.0	
	50대	34.0	41.5	18.9	5.6	0.0	100.0	
	60대 이상	29.5	40.7	27.1	2.7	0.0	100.0	
지역	수도권	32.6	42.9	20.8	3.4	0.3	100.0	13.049*
	비수도권	28.5	41.4	26.5	3.6	0.0	100.0	
	서울	32.4	42.0	22.0	3.4	0.2	100.0	17.445
	경기, 인천	32.8	43.5	19.9	3.4	0.4	100.0	
	강원, 충청	28.0	42.4	25.1	4.4	0.0	100.0	
	영남	29.2	40.7	26.5	3.6	0.0	100.0	
	호남	27.1	42.0	29.0	1.9	0.0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32.4	39.3	24.6	3.5	0.3	100.0	17.191
	중하층	32.5	39.6	25.1	2.4	0.4	100.0	
	중간층	29.1	43.5	23.0	4.4	0.0	100.0	
	중상층	26.9	47.8	22.0	3.3	0.0	100.0	
	상위층	42.1	42.1	15.8	0.0	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31.1	37.7	28.1	3.0	0.2	100.0	32.296*
	200만원대	35.5	39.9	21.7	2.9	0.0	100.0	
	300만원대	24.1	45.3	27.2	3.1	0.2	100.0	
	400만원대	30.7	43.9	20.8	4.5	0.0	100.0	
	500만원 초과	33.3	43.8	18.6	4.0	0.3	100.0	
	무응답	24.3	46.8	23.4	5.4	0.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7.7	41.4	31.7	8.6	0.5	100.0	26.269*
	고졸	19.5	39.6	32.3	8.6	0.0	100.0	
	대학이상	22.4	41.9	28.4	6.7	0.7	100.0	
	무응답	16.7	38.9	33.3	11.1	0.0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37.2	37.5	21.6	3.4	0.3	100.0	12.432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29.8	43.2	23.2	3.7	0.1	100.0	
	생산직 근로자	36.5	37.5	22.1	3.8	0.0	100.0	
	기타/무직/농업어업/ 학생/가정주부	28.1	43.4	25.0	3.3	0.1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48.7	28.9	19.7	1.3	1.3	100.0	50.774***
	보수적	26.5	44.5	25.0	3.9	0.1	100.0	
	중도적	29.5	41.7	23.9	4.8	0.0	100.0	
	진보적	32.6	42.5	23.2	1.5	0.2	100.0	
	매우 진보적	57.9	31.6	10.5	0.0	0.0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9〉 집단별 지역 갈등의 정도 평가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전체	X <sup>2</sup>
전체		21.1	41.1	29.9	7.5	0.5	100.0	
성별	남성	23.3	39.0	29.2	8.0	0.5	100.0	7.898
	여성	18.9	43.1	30.6	7.0	0.4	100.0	
연령	20대	19.7	38.2	32.3	8.7	1.1	100.0	17.420
	30대	18.9	42.7	30.4	7.5	0.5	100.0	
	40대	21.0	42.6	28.6	7.6	0.2	100.0	
	50대	22.0	42.3	26.5	8.6	0.6	100.0	
	60대 이상	23.7	39.2	31.7	5.3	0.0	100.0	
지역	수도권	21.9	41.5	29.7	6.4	0.5	100.0	4.093
	비수도권	20.2	40.8	30.1	8.6	0.4	100.0	
	서울	21.5	40.6	30.7	6.8	0.5	100.0	39.699**
	경기,인천	22.2	42.1	29.0	6.1	0.5	100.0	
	강원,충청	19.6	40.6	29.9	9.2	0.7	100.0	
	영남	15.9	40.9	33.0	10.0	0.2	100.0	
	호남	32.9	40.1	23.2	3.4	0.5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20.9	41.4	28.3	8.8	0.5	100.0	8.548
	중하층	22.9	38.4	30.0	8.2	0.5	100.0	
	중간층	20.4	41.7	30.4	6.9	0.5	100.0	
	중상층	19.6	44.9	29.8	5.7	0.0	100.0	
	상위층	15.8	36.8	36.8	10.5	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1.0	37.9	31.5	9.1	0.5	100.0	25.426
	200만원대	22.9	41.8	28.5	6.3	0.5	100.0	
	300만원대	21.2	39.1	33.2	6.2	0.2	100.0	
	400만원대	20.1	45.8	25.8	8.0	0.4	100.0	
	500만원 초과	21.2	44.4	27.7	5.9	0.8	100.0	
	무응답	15.3	36.9	33.3	14.4	0.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7.7	41.4	31.7	8.6	0.5	100.0	12.454
	고졸	19.5	39.6	32.3	8.6	0.0	100.0	
	대학이상	22.4	41.9	28.4	6.7	0.7	100.0	
	무응답	16.7	38.9	33.3	11.1	0.0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22.0	41.2	29.4	7.1	0.3	100.0	11.763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21.9	41.0	29.7	6.8	0.7	100.0	
	생산직 근로자	24.0	28.8	35.6	11.5	0.0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19.7	42.6	29.6	7.8	0.3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34.2	25.0	28.9	10.5	1.3	100.0	30.004*
	보수적	19.8	41.8	30.7	7.3	0.4	100.0	
	중도적	20.3	40.2	30.6	8.4	0.4	100.0	
	진보적	20.4	43.6	29.2	6.4	0.4	100.0	
	매우 진보적	39.5	47.4	13.2	0.0	0.0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10〉 집단별 세대 갈등의 정도 평가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전체	X <sup>2</sup>
전체		13.6	39.9	38.8	6.9	0.9	100.0	
성별	남성	12.2	37.2	41.0	8.4	1.2	100.0	17.365**
	여성	15.0	42.4	36.6	5.5	0.6	100.0	
연령	20대	10.7	29.8	44.7	13.8	1.1	100.0	66.891***
	30대	13.2	43.9	37.7	4.0	1.2	100.0	
	40대	14.5	43.1	37.9	4.0	0.4	100.0	
	50대	18.1	40.7	35.7	4.7	0.8	100.0	
	60대 이상	11.6	40.2	38.3	9.0	1.0	100.0	
지역	수도권	15.0	39.9	37.8	6.6	0.7	100.0	4.242
	비수도권	12.3	39.8	39.7	7.2	1.1	100.0	
	서울	12.3	39.6	39.4	7.7	1.0	100.0	16.889
	경기, 인천	17.0	40.1	36.6	5.7	0.5	100.0	
	강원, 충청	12.2	39.9	39.9	6.6	1.5	100.0	
	영남	12.5	41.3	38.8	6.8	0.6	100.0	
	호남	11.6	35.3	43.0	8.2	1.9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15.5	38.8	36.4	7.8	1.6	100.0	14.032
	중하층	15.1	41.8	37.3	5.5	0.4	100.0	
	중간층	12.3	38.7	40.6	7.3	1.1	100.0	
	중상층	11.8	41.2	39.2	7.3	0.4	100.0	
	상위층	10.5	36.8	42.1	10.5	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3.5	37.9	38.6	8.7	1.4	100.0	19.390
	200만원대	15.0	41.3	38.2	5.3	0.2	100.0	
	300만원대	13.4	38.9	39.9	7.4	0.5	100.0	
	400만원대	12.1	45.1	37.9	3.8	1.1	100.0	
	500만원 초과	14.1	38.4	39.0	7.1	1.4	100.0	
	무응답	11.7	37.8	38.7	10.8	0.9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4.0	38.2	37.1	9.1	1.6	100.0	10.680
	고졸	15.7	39.6	37.6	6.1	1.0	100.0	
	대학이상	12.6	39.9	39.8	7.0	0.8	100.0	
	무응답	5.6	61.1	27.8	5.6	0.0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13.9	40.5	39.2	4.4	2.0	100.0	17.475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12.3	40.3	40.8	5.9	0.7	100.0	
	생산직 근로자	18.3	34.6	38.5	8.7	0.0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14.1	39.9	36.9	8.3	0.8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19.7	30.3	40.8	7.9	1.3	100.0	24.877
	보수적	12.5	39.3	40.2	7.1	0.9	100.0	
	중도적	12.0	43.3	36.9	7.2	0.5	100.0	
	진보적	15.5	38.0	39.1	6.2	1.3	100.0	
	매우 진보적	28.9	23.7	42.1	2.6	2.6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11〉 집단별 남녀 갈등의 정도 평가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전체	X <sup>2</sup>
전체		4.8	26.1	53.9	13.7	1.6	100.0	
성별	남성	4.2	23.4	54.5	15.6	2.4	100.0	19.801***
	여성	5.4	28.6	53.4	11.8	0.8	100.0	
연령	20대	7.0	33.7	48.0	9.8	1.4	100.0	47.011***
	30대	4.7	28.8	54.7	10.8	0.9	100.0	
	40대	4.2	23.9	58.5	12.1	1.3	100.0	
	50대	5.3	23.1	54.0	15.6	1.9	100.0	
	60대 이상	3.1	21.8	53.0	19.9	2.2	100.0	
지역	수도권	5.2	27.1	54.6	12.1	0.9	100.0	9.549*
	비수도권	4.4	25.2	53.2	15.1	2.1	100.0	
	서울	3.9	25.8	56.3	12.8	1.2	100.0	19.750
	경기,인천	6.3	28.0	53.4	11.6	0.7	100.0	
	강원,충청	4.1	29.2	49.8	14.8	2.2	100.0	
	영남	4.2	23.9	55.5	14.6	1.9	100.0	
	호남	4.3	22.7	53.1	16.9	2.9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5.6	27.5	53.7	11.2	1.9	100.0	16.223
	중하층	5.5	29.8	50.7	12.7	1.3	100.0	
	중간층	4.4	23.9	55.3	14.8	1.6	100.0	
	중상층	3.7	23.7	55.1	15.9	1.6	100.0	
	상위층	0.0	15.8	73.7	10.5	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4.8	25.8	53.2	13.9	2.3	100.0	14.888
	200만원대	5.1	24.4	55.6	14.0	1.0	100.0	
	300만원대	2.9	28.9	54.4	12.6	1.2	100.0	
	400만원대	4.5	25.0	54.9	13.6	1.9	100.0	
	500만원 초과	6.5	25.4	53.7	12.7	1.7	100.0	
	무응답	6.3	27.9	46.8	18.0	0.9	100.0	
학력별	중졸이하	4.3	29.6	50.5	14.0	1.6	100.0	10.245
	고졸	4.3	24.7	54.5	15.1	1.5	100.0	
	대학이상	4.9	26.3	54.4	12.8	1.6	100.0	
	무응답	16.7	27.8	38.9	16.7	0.0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3.7	24.0	54.4	14.9	3.0	100.0	11.709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5.2	25.7	55.7	11.9	1.5	100.0	
	생산직 근로자	4.8	26.0	51.0	16.3	1.9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4.8	27.2	52.6	14.4	1.0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3.9	23.7	51.3	19.7	1.3	100.0	23.570
	보수적	4.9	26.2	52.4	14.9	1.6	100.0	
	중도적	5.2	26.5	51.7	14.6	2.0	100.0	
	진보적	3.6	25.5	59.4	10.5	0.9	100.0	
	매우 진보적	10.5	28.9	60.5	0.0	0.0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12〉 집단별 다문화 갈등의 정도 평가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전체	X <sup>2</sup>
전체		8.9	38.9	40.0	11.1	1.1	100.0	
성별	남성	7.6	36.7	41.4	12.7	1.6	100.0	16.305**
	여성	10.2	41.0	38.7	9.6	0.6	100.0	
연령	20대	13.5	41.6	33.7	10.1	1.1	100.0	66.878***
	30대	9.4	44.1	35.4	10.1	0.9	100.0	
	40대	10.0	41.7	38.2	8.9	1.1	100.0	
	50대	7.0	40.1	40.7	11.4	0.8	100.0	
	60대 이상	4.8	27.1	51.6	15.0	1.5	100.0	
지역	수도권	9.1	42.0	37.3	10.9	0.7	100.0	10.523*
	비수도권	8.8	36.0	42.5	11.3	1.5	100.0	
	서울	8.2	39.6	37.7	13.5	1.0	100.0	33.320**
	경기,인천	9.7	43.7	37.1	9.0	0.5	100.0	
	강원,충청	9.2	41.0	39.1	8.9	1.8	100.0	
	영남	8.1	35.6	43.0	12.5	0.8	100.0	
	호남	8.2	29.5	47.8	11.6	2.9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9.9	33.4	43.3	11.8	1.6	100.0	27.315*
	중하층	10.5	38.9	41.8	8.2	0.5	100.0	
	중간층	7.0	39.8	39.4	12.3	1.5	100.0	
	중상층	10.2	42.9	33.9	12.7	0.4	100.0	
	상위층	5.3	57.9	26.3	10.5	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8.4	29.7	49.3	10.5	2.1	100.0	65.924***
	200만원대	8.5	35.3	44.0	11.8	0.5	100.0	
	300만원대	10.3	41.3	34.4	13.1	1.0	100.0	
	400만원대	4.9	47.3	36.0	9.5	2.3	100.0	
	500만원 초과	11.3	46.3	32.2	9.9	0.3	100.0	
	무응답	9.0	36.0	44.1	10.8	0.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8.6	26.9	51.1	11.8	1.6	100.0	31.855**
	고졸	8.6	37.1	40.1	13.2	1.0	100.0	
	대학이상	9.1	41.9	38.4	9.6	1.1	100.0	
	무응답	11.1	27.8	27.8	33.3	0.0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9.1	38.5	38.9	11.5	2.0	100.0	8.486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10.2	39.7	38.3	10.9	0.8	100.0	
	생산직 근로자	7.7	36.5	40.4	13.5	1.9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7.9	38.6	41.7	10.9	0.9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9.2	39.5	35.5	13.2	2.6	100.0	28.089*
	보수적	8.6	36.5	41.5	12.4	1.0	100.0	
	중도적	9.2	39.8	38.0	12.0	0.9	100.0	
	진보적	7.7	41.2	42.7	12.0	0.9	100.0	
	매우 진보적	21.1	34.2	28.9	12.0	5.3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13〉 집단별 환경 갈등의 정도 평가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심한 편	심한 편	보통	심하지 않은 편	전혀 심하지 않음	전체	X <sup>2</sup>
전체		12.6	39.0	41.8	5.9	0.8	100.0	
성별	남성	12.4	37.2	42.1	7.4	1.0	100.0	9.940*
	여성	12.7	40.8	41.4	4.5	0.6	100.0	
연령	20대	10.1	36.5	43.3	8.1	2.0	100.0	36.853**
	30대	16.5	40.6	36.8	5.9	0.2	100.0	
	40대	12.7	40.6	41.7	4.0	0.9	100.0	
	50대	14.5	39.8	40.4	5.3	0.0	100.0	
	60대 이상	8.7	37.0	46.7	6.5	1.0	100.0	
지역	수도권	13.3	40.0	40.1	6.3	0.3	100.0	8.647*
	비수도권	11.9	38.0	43.3	5.5	1.3	100.0	
	서울	14.7	34.8	43.0	7.2	0.2	100.0	30.085*
	경기, 인천	12.2	43.9	38.0	5.6	0.4	100.0	
	강원, 충청	12.5	40.2	39.5	5.9	1.8	100.0	
	영남	10.4	39.2	43.4	6.1	0.9	100.0	
	호남	15.5	30.4	48.8	3.9	1.4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15.0	37.2	41.7	5.1	1.1	100.0	17.411
	중하층	14.9	39.5	39.3	5.3	1.1	100.0	
	중간층	9.9	38.8	44.5	6.4	0.5	100.0	
	중상층	11.8	41.6	38.8	6.9	0.8	100.0	
	상위층	21.1	36.8	36.8	5.3	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3.7	34.9	44.1	6.4	0.9	100.0	16.440
	200만원대	11.6	38.6	43.5	5.3	1.0	100.0	
	300만원대	14.3	39.9	40.3	4.8	0.7	100.0	
	400만원대	11.0	38.6	42.0	7.6	0.8	100.0	
	500만원 초과	12.4	42.7	39.5	5.1	0.3	100.0	
	무응답	9.0	42.3	37.8	9.0	1.8	100.0	
학력별	중졸이하	7.0	43.0	42.5	6.5	1.1	100.0	14.376
	고졸	14.4	36.4	43.5	4.8	0.8	100.0	
	대학이상	12.5	39.9	40.4	6.4	0.8	100.0	
	무응답	11.1	22.2	61.1	5.6	0.0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12.8	36.5	42.6	7.1	1.0	100.0	8.590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12.8	41.7	39.2	5.4	1.0	100.0	
	생산직 근로자	16.3	34.6	42.3	6.7	0.0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11.8	38.2	43.5	5.8	0.7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13.2	28.9	51.3	6.6	0.0	100.0	48.201***
	보수적	10.0	39.7	43.9	5.4	1.0	100.0	
	중도적	13.1	36.5	42.8	7.0	0.7	100.0	
	진보적	13.1	43.6	37.6	5.2	0.6	100.0	
	매우 진보적	39.5	39.5	15.8	2.6	2.6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14〉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1순위)

(단위: %)

구분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다문화 갈등	환경 갈등	전체	X <sup>2</sup>
전체		28.1	14.7	21.6	16.7	5.6	2.8	4.3	6.5	100.0	
성별	남성	27.1	15.8	26.0	16.6	4.8	2.0	3.6	4.1	100.0	44.127
	여성	29.0	13.6	17.3	16.7	6.3	3.4	4.9	8.8	100.0	
연령	20대	30.6	17.1	16.9	11.2	4.2	6.2	6.7	7.0	100.0	120.709***
	30대	33.7	13.7	16.3	12.3	7.5	2.4	4.7	9.4	100.0	
	40대	31.9	10.9	22.5	16.5	5.4	2.0	4.7	6.0	100.0	
	50대	26.2	13.6	25.1	19.2	6.1	1.7	2.5	5.6	100.0	
	60대 이상	17.7	18.4	26.9	23.7	4.4	1.9	2.7	4.4	100.0	
지역	수도권	29.6	13.0	22.7	15.2	5.6	2.4	4.1	7.4	100.0	12.275
	비수도권	26.7	16.2	20.4	18.0	5.5	3.1	4.4	5.6	100.0	
	서울	27.5	15.5	22.5	15.5	6.0	2.4	4.1	6.5	100.0	77.141***
	경기,인천	31.2	11.1	22.9	15.1	5.2	2.3	4.1	8.1	100.0	
	강원,충청	22.5	19.9	21.4	15.9	5.5	3.3	5.9	5.5	100.0	
	영남	28.2	16.7	21.8	13.1	6.4	3.4	4.2	6.3	100.0	
	호남	27.1	10.6	15.9	33.8	2.4	2.4	3.4	4.3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27.8	15.8	17.1	18.4	3.5	2.9	4.8	9.6	100.0	44.350*
	중하층	30.9	14.5	18.2	17.1	6.2	2.9	4.0	6.2	100.0	
	중간층	28.1	14.7	23.6	16.4	5.3	2.6	4.2	5.2	100.0	
	중상층	23.7	13.1	28.2	14.7	7.8	2.0	3.7	6.9	100.0	
	상위층	10.5	15.8	31.6	5.3	10.5	10.5	10.5	5.3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4.7	16.0	20.1	20.3	4.8	2.7	4.8	6.6	100.0	35.801
	200만원대	29.5	15.0	20.3	17.6	4.8	2.2	4.3	6.3	100.0	
	300만원대	30.1	14.6	21.0	13.4	5.3	3.8	4.1	7.9	100.0	
	400만원대	28.8	14.4	20.1	16.7	6.8	1.5	4.9	6.8	100.0	
	500만원 초과	29.9	11.9	26.8	15.3	6.5	2.8	2.8	4.0	100.0	
	무응답	21.6	18.0	20.7	15.3	6.3	3.6	5.4	9.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8.8	17.2	14.5	25.8	8.6	2.7	4.3	8.1	100.0	62.858***
	고졸	24.0	17.2	19.7	17.7	5.0	4.0	4.5	7.9	100.0	
	대학이상	31.8	12.8	23.7	14.5	5.5	2.2	4.1	5.5	100.0	
	무응답	16.7	27.8	11.1	27.8	0.0	0.0	5.6	11.1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27.4	11.8	28.7	16.2	5.4	1.7	3.0	5.7	100.0	36.397*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32.3	14.9	20.1	14.1	5.0	2.6	5.4	5.7	100.0	
	생산직 근로자	29.8	15.4	21.2	15.4	7.7	1.0	3.8	5.8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학 생/가정주부	24.7	15.3	20.3	19.1	5.8	3.4	3.8	7.5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23.7	17.1	31.6	14.5	1.3	0.0	6.6	5.3	100.0	40.006
	보수적	25.3	16.7	21.7	17.9	4.8	3.9	4.2	5.7	100.0	
	중도적	29.1	14.2	19.5	16.6	7.4	1.9	4.5	6.8	100.0	
	진보적	31.5	12.2	22.3	16.1	4.3	3.0	3.6	6.9	100.0	
	매우 진보적	23.7	13.2	28.9	7.9	7.9	2.6	2.6	13.2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15〉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2순위)

(단위: %)

구분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다문화 갈등	환경 갈등	전체	X <sup>2</sup>
전체		20.2	18.3	17.3	16.3	11.2	4.3	4.9	7.5	100.0	
성별	남성	19.6	19.2	20.3	18.3	8.2	3.2	3.9	7.3	100.0	40.240***
	여성	20.8	17.5	14.3	14.4	14.1	5.3	6.0	7.6	100.0	
연령	20대	18.5	16.5	14.5	15.4	8.5	9.1	8.3	9.1	100.0	61.723***
	30대	19.3	17.6	18.3	15.4	10.8	4.6	6.0	8.0	100.0	
	40대	21.9	19.4	17.8	15.3	12.5	2.7	3.4	7.1	100.0	
	50대	21.4	15.3	17.9	18.2	11.0	4.0	3.8	8.4	100.0	
	60대 이상	19.9	22.3	17.4	17.6	12.5	1.5	3.6	5.1	100.0	
지역	수도권	20.2	18.8	18.3	15.9	10.3	3.8	5.3	7.4	100.0	4.426
	비수도권	20.3	17.9	16.2	16.8	12.0	4.7	4.6	7.5	100.0	
	서울	21.7	18.5	19.0	15.6	9.1	5.2	4.9	5.9	100.0	25.196
	경기,인천	19.1	19.1	17.8	16.1	11.1	2.8	5.6	8.5	100.0	
	강원,충청	22.4	17.5	14.1	16.3	10.6	6.8	4.2	8.0	100.0	
	영남	18.2	17.8	16.6	17.0	13.9	4.5	4.3	7.6	100.0	
주관적 소득계층	호남	21.9	18.4	18.9	16.4	10.0	2.0	5.5	7.0	100.0	
	저소득층	22.8	17.8	16.4	15.6	12.8	3.3	4.7	6.4	100.0	24.492
	중하층	19.3	19.5	18.2	14.1	12.1	3.2	5.6	8.0	100.0	
	중간층	17.9	19.1	17.2	17.6	10.3	5.3	4.6	8.0	100.0	
	중상층	25.4	14.6	17.1	18.3	9.2	4.6	5.0	5.8	100.0	
	상위층	26.3	10.5	10.5	15.8	15.8	5.3	5.3	10.5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1.0	19.5	15.5	15.7	13.8	3.3	4.5	6.7	100.0	36.932
	200만원대	19.4	18.1	19.6	15.1	12.3	4.0	3.3	8.1	100.0	
	300만원대	17.3	19.2	14.1	18.0	11.7	4.9	6.6	8.3	100.0	
	400만원대	20.8	20.1	17.8	17.4	8.5	4.2	3.5	7.7	100.0	
	500만원 초과	21.7	16.8	20.8	16.2	7.7	4.6	5.7	6.6	100.0	
	무응답	26.0	11.5	14.4	14.4	12.5	5.8	7.7	7.7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6.6	21.3	11.8	17.8	16.6	4.1	5.3	6.5	100.0	22.682
	고졸	19.5	19.0	17.2	15.2	13.3	3.4	5.0	7.4	100.0	
	대학이상	20.9	17.5	18.0	16.7	9.4	4.8	4.9	7.7	100.0	
	무응답	33.3	22.2	16.7	16.7	5.6	0.0	0.0	5.6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22.3	17.1	19.2	20.2	7.9	3.4	4.8	5.1	100.0	22.661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18.8	19.8	17.4	16.1	10.3	4.2	5.1	8.2	100.0	
	생산직 근로자	16.8	20.8	12.9	17.8	9.9	4.0	7.9	9.9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학 생/가정주부	21.1	17.2	17.0	15.0	13.2	4.6	4.5	7.4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16.0	18.7	18.7	26.7	9.3	1.3	4.0	5.3	100.0	42.933*
	보수적	18.9	20.3	20.2	15.2	11.3	2.9	4.8	6.4	100.0	
	중도적	20.7	15.6	14.9	16.7	12.5	6.1	6.1	7.6	100.0	
	진보적	21.6	19.2	16.6	15.9	9.6	3.9	3.5	9.6	100.0	
	매우 진보적	26.3	26.3	18.4	13.2	5.3	2.6	5.3	2.6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16〉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1,2 순위 종합)

(단위: %)

구분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다문화 갈등	환경 갈등	Total
전체		48.3	33	38.9	33	16.8	7.1	9.2	14	200.0
성별	남성	46.7	35	46.3	34.9	13	5.2	7.5	11.4	200.0
	여성	49.8	31.1	31.6	31.1	20.4	8.7	10.9	16.4	200.0
연령	20대	49.1	33.6	31.4	26.6	12.7	15.3	15	16.1	200.0
	30대	53	31.3	34.6	27.7	18.3	7	10.7	17.4	200.0
	40대	53.8	30.3	40.3	31.8	17.9	4.7	8.1	13.1	200.0
	50대	47.6	28.9	43	37.4	17.1	5.7	6.3	14	200.0
	60대 이상	37.6	40.7	44.3	41.3	16.9	3.4	6.3	9.5	200.0
지역	수도권	49.8	31.8	41	31.1	15.9	6.2	9.4	14.8	200.0
	비수도권	47	34.1	36.6	34.8	17.5	7.8	9	13.1	200.0
	서울	49.2	34	41.5	31.1	15.1	7.6	9	12.4	200.0
	경기, 인천	50.3	30.2	40.7	31.2	16.3	5.1	9.7	16.6	200.0
	강원, 충청	44.9	37.4	35.5	32.2	16.1	10.1	10.1	13.5	200.0
	영남	46.4	34.5	38.4	30.1	20.3	7.9	8.5	13.9	200.0
	호남	49	29	34.8	50.2	12.4	4.4	8.9	11.3	2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50.6	33.6	33.5	34	16.3	6.2	9.5	16	200.0
	중하층	50.2	34	36.4	31.2	18.3	6.1	9.6	14.2	200.0
	중간층	46	33.8	40.8	34	15.6	7.9	8.8	13.2	200.0
	중상층	49.1	27.7	45.3	33	17	6.6	8.7	12.7	200.0
	상위층	36.8	26.3	42.1	21.1	26.3	15.8	15.8	15.8	2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45.7	35.5	35.6	36	18.6	6	9.3	13.3	200.0
	200만원대	48.9	33.1	39.9	32.7	17.1	6.2	7.6	14.4	200.0
	300만원대	47.4	33.8	35.1	31.4	17	8.7	10.7	16.2	200.0
	400만원대	49.6	34.5	37.9	34.1	15.3	5.7	8.4	14.5	200.0
	500만원 초과	51.6	28.7	47.6	31.5	14.2	7.4	8.5	10.6	200.0
	무응답	47.6	29.5	35.1	29.7	18.8	9.4	13.1	16.7	200.0
학력별	중졸이하	35.4	38.5	26.3	43.6	25.2	6.8	9.6	14.6	200.0
	고졸	43.5	36.2	36.9	32.9	18.3	7.4	9.5	15.3	200.0
	대학이상	52.7	30.3	41.7	31.2	14.9	7	9	13.2	200.0
	무응답	50	50	27.8	44.5	5.6	0	5.6	16.7	2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49.6	28.9	47.9	36.4	13.3	5.1	7.8	10.9	200.0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51.1	34.7	37.5	30.2	15.3	6.9	10.5	13.9	200.0
	생산직 근로자	46.6	36.2	34.0	33.2	17.6	4.9	11.8	15.7	200.0
	기타/무직/농임업/ 학생/가정주부	45.8	32.5	37.3	34.1	19.0	8.1	8.3	14.9	2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39.7	35.8	50.3	41.2	10.6	1.3	10.6	10.6	200.0
	보수적	44.2	37	41.9	33.1	16.1	6.8	9	12.1	200.0
	중도적	49.8	29.8	34.4	33.3	19.9	8	10.6	14.4	200.0
	진보적	53.1	31.4	38.9	32	13.9	6.9	7.1	16.5	200.0
	매우 진보적	50	39.5	47.3	21.1	13.2	5.2	7.9	15.8	200.0

〈부표 17〉 집단별 사회갈등 악화요인에 대한 인식 분포

(단위: %)

구분		과도한 정쟁	이기주의	미성숙 토론문화	사회지도층 부도덕	선정적 언론보도	불신	전체	X <sup>2</sup>
전체		13.8	23.7	7.7	28.9	17.4	8.6	100.0	
성별	남성	14.5	21.0	7.4	32.0	17.2	7.9	100.0	14.312*
	여성	13.1	26.2	8.0	25.9	17.6	9.2	100.0	
연령	20대	12.9	29.8	5.3	28.9	16.9	6.2	100.0	65.869***
	30대	13.7	23.1	5.7	30.9	18.6	8.0	100.0	
	40대	16.1	22.5	5.1	34.6	13.6	8.0	100.0	
	50대	12.3	22.0	9.2	29.2	18.9	8.4	100.0	
	60대 이상	13.6	21.5	13.3	20.3	19.4	11.9	100.0	
지역	수도권	13.9	24.1	7.1	28.7	17.5	8.7	100.0	1.160
	비수도권	13.7	23.2	8.3	29.1	17.3	8.4	100.0	
	서울	15.9	21.7	8.2	26.8	17.9	9.4	100.0	14.250
	경기,인천	12.4	25.8	6.3	30.1	17.2	8.2	100.0	
	강원,충청	14.8	20.7	8.9	28.4	18.8	8.5	100.0	
	영남	13.6	25.0	8.5	29.5	15.9	7.4	100.0	
	호남	12.6	20.3	7.2	30.0	19.3	10.6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12.8	21.4	10.4	28.6	16.6	10.2	100.0	24.929
	중하층	11.5	21.1	7.8	32.0	18.5	9.1	100.0	
	중간층	15.3	25.6	7.3	28.1	16.6	7.1	100.0	
	중상층	15.1	26.5	4.9	26.1	18.0	9.4	100.0	
	상위층	21.1	21.1	5.3	15.8	26.3	10.5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1.9	21.5	11.0	26.5	17.8	11.4	100.0	51.128**
	200만원대	12.1	23.2	9.9	30.4	17.6	6.8	100.0	
	300만원대	13.1	26.3	4.8	29.8	15.8	10.3	100.0	
	400만원대	15.9	20.5	6.8	28.8	18.2	9.8	100.0	
	500만원 초과	17.5	24.6	5.4	31.9	16.4	4.2	100.0	
	무응답	13.5	28.8	7.2	19.8	22.5	8.1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2.9	24.2	16.1	19.4	14.0	13.4	100.0	45.866***
	고졸	10.9	22.8	7.6	30.0	19.4	9.3	100.0	
	대학이상	15.4	24.1	6.4	30.0	16.8	7.4	100.0	
	무응답	16.7	16.7	11.1	16.7	27.8	11.1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18.6	17.9	6.4	32.4	18.9	5.7	100.0	57.077***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13.7	25.7	4.3	32.0	17.0	7.4	100.0	
	생산직 근로자	8.7	19.2	10.6	36.5	17.3	7.7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12.9	24.5	10.6	24.2	17.3	10.5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26.3	21.1	17.1	18.4	9.2	7.9	100.0	96.045***
	보수적	13.5	29.3	9.7	21.9	16.1	9.5	100.0	
	중도적	12.7	22.9	6.7	29.9	17.8	10.0	100.0	
	진보적	14.4	18.5	5.4	37.3	19.1	5.4	100.0	
	매우 진보적	7.9	7.9	2.6	50.0	28.9	2.6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18〉 집단별 국민통합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전체	$\chi^2$
전체		28.0	32.2	28.6	11.3	100.0	
성별	남성	25.9	31.4	29.5	13.2	100.0	18.74**
	여성	30.0	32.8	27.7	9.5	100.0	
연령	20대	32.3	38.5	20.8	8.4	100.0	86.74***
	30대	33.3	34.0	23.8	9.0	100.0	
	40대	29.2	34.8	27.5	8.5	100.0	
	50대	25.6	25.1	37.9	11.4	100.0	
	60대 이상	19.6	28.1	33.2	19.1	100.0	
지역	수도권	29.7	32.0	27.4	10.9	100.0	3.230
	비수도권	26.4	32.3	29.7	11.7	100.0	
	서울	29.5	31.9	26.8	11.8	100.0	15.231
	경기, 인천	29.9	32.1	27.8	10.2	100.0	
	강원, 충청	26.2	30.6	29.9	13.3	100.0	
	영남	27.3	29.6	31.1	12.1	100.0	
	호남	24.6	41.6	25.1	8.7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24.3	30.8	29.1	15.8	100.0	15.309
	중하층	29.8	32.7	28.0	9.5	100.0	
	중간층	28.9	31.0	29.4	10.6	100.0	
	중상층	26.5	35.9	26.1	11.4	100.0	
	상위층	26.3	42.1	26.3	5.3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1.0	34.0	29.7	15.3	100.0	27.75**
	200만원대	28.7	30.9	28.5	11.8	100.0	
	300만원대	30.3	34.1	28.6	6.9	100.0	
	400만원대	30.3	28.8	28.8	12.1	100.0	
	500만원 초과	30.2	32.8	27.1	9.9	100.0	
	무응답	31.5	27.9	27.9	12.6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8.3	26.9	36.6	18.3	100.0	48.65***
	고졸	22.7	33.9	29.0	14.4	100.0	
	대학이상	32.3	32.1	27.0	8.6	100.0	
	무응답	22.2	33.3	33.3	11.1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23.0	32.1	30.7	14.2	100.0	23.85**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30.3	35.2	25.4	9.1	100.0	
	생산직 근로자	21.2	26.9	40.4	11.5	100.0	
	기타/무직/농업어업/ 학생/가정주부	28.6	30.3	29.0	12.1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23.7	23.7	18.4	34.2	100.0	84.332***
	보수적	23.7	30.1	31.0	15.3	100.0	
	중도적	33.0	30.9	28.2	7.9	100.0	
	진보적	27.3	38.2	27.3	7.3	100.0	
	매우 진보적	23.7	36.8	28.9	10.5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19〉 집단별 국민통합의 조건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경제성장	정치안정	법치확립	기회균등	시민의식 제고	부패와 특권의 타파	전체	X <sup>2</sup>
전체		11.5	23.9	7.3	10.9	16.4	30.2	100.0	
성별	남성	8.9	22.7	9.1	11.0	15.8	32.6	100.0	24.91***
	여성	13.9	24.9	5.5	10.8	17.0	28.0	100.0	
연령	20대	8.7	18.5	5.6	16.0	21.1	30.1	100.0	134.86***
	30대	10.9	17.5	5.9	15.3	17.7	32.8	100.0	
	40대	11.4	19.0	6.9	10.7	15.4	36.6	100.0	
	50대	12.5	24.8	8.9	8.9	13.9	30.9	100.0	
	60대 이상	13.6	39.5	9.0	3.6	14.3	20.1	100.0	
지역	수도권	9.8	22.8	7.5	11.7	16.4	31.8	100.0	8.557
	비수도권	13.0	24.8	7.0	10.0	16.4	28.7	100.0	
	서울	9.7	22.7	7.5	13.0	17.2	30.0	100.0	16.430
	경기, 인천	9.9	22.9	7.5	10.8	15.8	33.2	100.0	
	강원, 충청	13.3	26.9	5.9	11.4	16.2	26.2	100.0	
	영남	13.3	22.2	8.0	10.0	16.7	29.9	100.0	
	호남	12.1	28.0	6.3	8.7	15.5	29.5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13.9	31.3	6.7	7.5	16.6	24.1	100.0	40.20***
	중하층	10.9	24.2	5.6	12.7	14.9	31.6	100.0	
	중간층	10.8	22.2	8.3	10.5	17.2	31.0	100.0	
	중상층	11.4	18.0	7.8	13.5	15.5	33.9	100.0	
	상위층	5.3	15.8	15.8	5.3	31.6	26.3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6.0	36.5	7.3	6.2	13.7	20.3	100.0	122.69***
	200만원대	10.9	24.4	7.5	11.1	17.6	28.5	100.0	
	300만원대	12.2	21.0	5.7	11.0	16.7	33.4	100.0	
	400만원대	7.2	21.2	5.7	12.9	19.7	33.3	100.0	
	500만원 초과	10.2	12.7	10.2	13.0	13.8	40.1	100.0	
	무응답	7.2	24.3	6.3	16.2	21.6	24.3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1.0	42.5	5.4	2.7	14.5	14.0	100.0	114.67***
	고졸	12.8	27.0	8.1	8.1	17.1	27.0	100.0	
	대학이상	9.3	19.2	7.2	13.6	16.3	34.4	100.0	
	무응답	11.1	33.3	0.0	5.6	22.2	27.8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9.8	23.0	6.8	8.4	16.2	35.8	100.0	42.42***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10.2	18.5	7.2	13.4	16.6	34.2	100.0	
	생산직 근로자	13.5	29.8	7.7	8.7	12.5	27.9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12.8	27.9	7.4	9.8	16.8	25.3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14.5	43.4	2.6	2.6	14.5	22.4	100.0	61.82***
	보수적	15.0	25.7	8.2	7.4	16.2	27.4	100.0	
	중도적	9.8	22.9	7.6	12.7	16.7	30.4	100.0	
	진보적	9.0	19.3	6.0	14.2	16.5	35.0	100.0	
	매우 진보적	5.3	26.3	7.9	10.5	15.8	34.2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20〉 집단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chi^2$
전체		27.4	44.7	21.5	6.5	100.0	
성별	남성	28.5	44.2	19.5	7.9	100.0	10.761*
	여성	26.3	45.2	23.5	5.1	100.0	
연령	20대	27.0	49.2	18.0	5.9	100.0	84.360***
	30대	36.3	45.8	14.9	3.1	100.0	
	40대	30.4	46.2	18.5	4.9	100.0	
	50대	24.0	39.0	27.0	10.0	100.0	
	60대 이상	18.2	43.1	29.8	9.0	100.0	
지역	수도권	27.6	46.1	20.2	6.2	100.0	2.645
	비수도권	27.1	43.4	22.8	6.7	100.0	
	서울	25.4	45.7	21.5	7.5	100.0	16.122
	경기, 인천	29.2	46.4	19.2	5.2	100.0	
	강원, 충청	26.9	42.8	22.5	7.8	100.0	
	영남	24.2	44.7	24.4	6.6	100.0	
	호남	34.8	40.6	19.3	5.3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32.9	43.9	17.7	5.6	100.0	25.951*
	중하층	28.2	46.9	18.9	6.0	100.0	
	중간층	26.0	43.2	23.3	7.5	100.0	
	중상층	22.5	46.5	25.3	5.7	100.0	
	상위층	15.8	36.8	47.4	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32.9	42.9	19.4	4.8	100.0	37.997**
	200만원대	27.1	41.1	23.7	8.2	100.0	
	300만원대	30.8	45.6	17.0	6.7	100.0	
	400만원대	26.5	45.5	21.2	6.8	100.0	
	500만원 초과	22.0	47.7	24.9	5.4	100.0	
	무응답	12.6	50.5	28.8	8.1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6.3	42.5	25.8	5.4	100.0	15.526
	고졸	27.5	40.7	23.7	8.1	100.0	
	대학이상	27.3	47.3	19.7	5.7	100.0	
	무응답	38.9	27.8	22.2	11.1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28.7	40.5	22.3	8.4	100.0	18.275*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29.4	43.9	20.8	5.9	100.0	
	생산직 근로자	37.5	43.3	12.5	6.7	100.0	
	기타/무직/농업/어업/ 학생/가정주부	24.0	47.0	22.9	6.2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31.6	31.6	22.4	14.5	100.0	98.780***
	보수적	21.9	43.2	25.2	9.8	100.0	
	중도적	23.8	49.2	21.5	5.5	100.0	
	진보적	38.2	43.8	16.3	1.7	100.0	
	매우 진보적	52.6	21.1	18.4	7.9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21〉 집단별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 분포 (1순위)

(단위: %)

구분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이용 요금인상	세출 조정	전체	X <sup>2</sup>
전체		42.3	12.2	13.0	32.6	100.0	
성별	남성	41.7	15.1	12.4	30.8	100.0	16.728**
	여성	42.8	9.3	13.6	34.3	100.0	
연령	20대	41.3	10.7	11.0	37.1	100.0	65.553***
	30대	45.3	9.4	9.4	35.8	100.0	
	40대	51.3	10.7	9.4	28.6	100.0	
	50대	40.1	12.5	17.8	29.5	100.0	
	60대 이상	32.0	17.4	18.2	32.4	100.0	
지역	수도권	41.6	12.3	13.1	33.0	100.0	0.381
	비수도권	42.9	12.0	12.9	32.2	100.0	
	서울	40.3	14.5	13.8	31.4	100.0	7.608
	경기,인천	42.5	10.8	12.5	34.2	100.0	
	강원,충청	39.1	12.2	13.7	35.1	100.0	
	영남	43.8	11.9	13.3	31.1	100.0	
	호남	45.9	11.6	10.6	31.9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40.1	15.2	14.4	30.2	100.0	14.770
	중하층	42.9	10.4	10.7	36.0	100.0	
	중간층	43.0	11.0	13.7	32.4	100.0	
	중상층	41.2	15.1	13.9	29.8	100.0	
	상위층	47.4	15.8	10.5	26.3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37.2	14.8	14.8	33.1	100.0	36.266***
	200만원대	46.6	10.1	11.6	31.6	100.0	
	300만원대	42.0	15.0	12.4	30.5	100.0	
	400만원대	47.3	11.7	9.1	31.8	100.0	
	500만원 초과	43.2	9.3	13.0	34.5	100.0	
	무응답	31.5	8.1	22.5	37.8	100.0	
학력별	중졸이하	30.1	18.8	18.3	32.8	100.0	36.266*
	고졸	42.4	13.9	12.4	31.3	100.0	
	대학이상	44.4	10.2	12.1	33.3	100.0	
	무응답	22.2	11.1	38.9	27.8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41.6	10.8	13.2	34.5	100.0	26.167**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47.7	12.7	9.7	29.9	100.0	
	생산직 근로자	42.3	16.3	13.5	27.9	100.0	
	기타/무직/농업어업/ 학생/가정주부	37.9	11.7	15.7	34.7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30.3	21.1	11.8	36.8	100.0	65.665***
	보수적	36.0	12.6	19.6	31.7	100.0	
	중도적	44.3	13.2	9.8	32.8	100.0	
	진보적	48.9	9.0	8.6	33.5	100.0	
	매우 진보적	55.3	2.6	15.8	26.3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22〉 집단별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 분포 (2순위)

(단위: %)

구분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이용 요금인상	세출 조정	전체	X <sup>2</sup>
전체		27.4	17.7	20.2	34.7	100.0	
성별	남성	27.7	19.7	20.9	31.8	100.0	7.534
	여성	27.1	15.7	19.6	37.6	100.0	
연령	20대	28.5	16.9	16.9	37.8	100.0	25.565*
	30대	32.4	13.7	21.4	32.4	100.0	
	40대	23.2	16.7	22.1	38.0	100.0	
	50대	21.7	23.1	19.6	35.6	100.0	
	60대 이상	31.3	18.9	20.4	29.5	100.0	
지역	수도권	27.3	18.4	19.5	34.8	100.0	0.826
	비수도권	27.5	17.0	20.9	34.6	100.0	
	서울	27.8	19.0	18.3	35.0	100.0	12.254
	경기,인천	27.0	18.0	20.3	34.8	100.0	
	강원,충청	31.8	17.2	22.2	28.8	100.0	
	영남	24.0	17.8	22.2	35.9	100.0	
	호남	30.9	14.2	15.4	39.5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29.5	19.1	17.3	34.2	100.0	11.115
	중하층	27.9	19.7	22.2	30.2	100.0	
	중간층	26.4	17.0	19.7	36.9	100.0	
	중상층	26.7	13.1	22.0	38.2	100.0	
	상위층	23.1	23.1	23.1	30.8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9.4	22.4	16.7	31.5	100.0	19.451
	200만원대	26.2	18.1	24.9	30.7	100.0	
	300만원대	28.6	16.1	18.0	37.3	100.0	
	400만원대	26.1	13.3	22.7	37.9	100.0	
	500만원 초과	26.0	16.6	19.9	37.5	100.0	
	무응답	27.0	17.5	20.6	34.9	100.0	
학력별	중졸이하	30.8	25.8	18.3	25.0	100.0	11.214
	고졸	25.1	17.1	20.8	37.0	100.0	
	대학이상	28.1	16.9	20.1	34.9	100.0	
	무응답	27.3	18.2	27.3	27.3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27.7	14.3	20.8	37.2	100.0	4.832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26.8	18.6	21.1	33.5	100.0	
	생산직 근로자	25.5	20.2	23.4	30.9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28.0	17.7	18.8	35.4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24.6	21.3	26.2	27.9	100.0	13.604
	보수적	26.5	19.6	20.6	33.3	100.0	
	중도적	28.2	17.7	21.0	33.1	100.0	
	진보적	28.6	14.9	17.5	39.0	100.0	
	매우 진보적	16.1	12.9	22.6	48.4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23〉 집단별 복지지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 분포 (1,2 순위 종합)

(단위: %)

구분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이용 요금인상	세출 조정	Total
전체		69.7	29.9	33.2	67.3	200.0
성별	남성	69.4	34.8	33.3	62.6	200.0
	여성	69.9	25	33.2	71.9	200.0
연령	20대	69.8	27.6	27.9	74.9	200.0
	30대	77.7	23.1	30.8	68.2	200.0
	40대	74.5	27.4	31.5	66.6	200.0
	50대	61.8	35.6	37.4	65.1	200.0
	60대 이상	63.3	36.3	38.6	61.9	200.0
지역	수도권	68.9	30.7	32.6	67.8	200.0
	비수도권	70.4	29	33.8	66.8	200.0
	서울	68.1	33.5	32.1	66.4	200.0
	경기, 인천	69.5	28.8	32.8	69	200.0
	강원, 충청	70.9	29.4	35.9	63.9	200.0
	영남	67.8	29.7	35.5	67	200.0
	호남	76.8	25.8	26	71.4	2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69.6	34.3	31.7	64.4	200.0
	중하층	70.8	30.1	32.9	66.2	200.0
	중간층	69.4	28	33.4	69.3	200.0
	중상층	67.9	28.2	35.9	68	200.0
	상위층	70.5	38.9	33.6	57.1	2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66.6	37.2	31.5	64.6	200.0
	200만원대	72.8	28.2	36.5	62.3	200.0
	300만원대	70.6	31.1	30.4	67.8	200.0
	400만원대	73.4	25	31.8	69.7	200.0
	500만원 초과	69.2	25.9	32.9	72	200.0
	무응답	58.5	25.6	43.1	72.7	200.0
학력별	중졸이하	60.9	44.6	36.6	57.8	200.0
	고졸	67.5	31	33.2	68.3	200.0
	대학이상	72.5	27.1	32.2	68.2	200.0
	무응답	49.5	29.3	66.2	55.1	2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69.3	25.1	34.0	71.7	200.0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74.6	31.2	30.7	63.4	200.0
	생산직 근로자	67.8	36.6	36.9	58.7	2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65.9	29.4	34.5	70.2	2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54.9	42.4	38	64.7	200.0
	보수적	62.5	32.2	40.2	65	200.0
	중도적	72.5	30.9	30.8	65.9	200.0
	진보적	77.5	23.9	26.1	72.5	200.0
	매우 진보적	71.4	15.5	38.4	74.7	200.0

〈부표 24〉 집단별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처방식

(단위: %)

구분		적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	타협	수용	회피	전체	$\chi^2$
전체		3.7	23.8	35.5	29.3	7.8	100.0	
성별	남성	2.8	20.5	38.3	31.8	6.7	100.0	24.901**
	여성	4.6	27.0	32.8	26.8	8.8	100.0	
연령	20대	4.5	28.9	39.9	21.1	5.6	100.0	101.835***
	30대	3.8	29.7	32.6	21.9	12.0	100.0	
	40대	3.8	23.0	31.0	29.9	12.3	100.0	
	50대	4.7	18.9	35.7	36.5	4.2	100.0	
	60대 이상	1.9	18.4	39.5	36.8	3.4	100.0	
지역	수도권	2.6	24.0	34.8	29.3	9.4	100.0	13.152*
	비수도권	4.8	23.6	36.2	29.2	6.2	100.0	
	서울	1.2	23.4	35.5	30.2	9.7	100.0	35.025**
	경기,인천	3.6	24.4	34.2	28.7	9.1	100.0	
	강원,충청	3.7	25.8	35.4	31.0	4.1	100.0	
	영남	4.4	22.5	39.4	26.9	6.8	100.0	
	호남	7.7	25.1	27.1	32.4	7.7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3.7	23.5	35.3	31.6	5.9	100.0	19.245***
	중하층	3.3	22.4	36.2	28.6	9.6	100.0	
	중간층	4.2	24.4	34.9	29.8	6.8	100.0	
	중상층	2.9	26.1	36.7	26.1	8.2	100.0	
	상위층	5.3	15.8	31.6	21.1	26.3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4.3	21.9	35.6	32.2	5.9	100.0	43.265**
	200만원대	4.1	21.5	40.1	27.5	6.8	100.0	
	300만원대	2.9	22.9	38.7	29.6	6.0	100.0	
	400만원대	4.6	20.5	37.1	26.9	11.0	100.0	
	500만원 초과	3.4	29.1	26.3	30.5	10.7	100.0	
	무응답	1.8	34.2	31.5	24.3	8.1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7	16.7	38.7	37.1	4.8	100.0	23.379*
	고졸	4.1	22.7	34.3	32.5	6.5	100.0	
	대학이상	3.6	25.3	35.6	26.6	8.9	100.0	
	무응답	5.6	33.3	38.9	16.7	5.6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5.1	18.9	33.8	31.4	10.8	100.0	25.523**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3.6	24.4	34.8	28.7	8.6	100.0	
	생산직 근로자	1.9	21.2	29.8	37.5	9.6	100.0	
	기타/무직/농림어업/ 학생/가정주부	3.5	25.3	37.4	28.0	5.8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2.6	15.8	40.8	39.5	1.3	100.0	34.918**
	보수적	3.9	24.0	35.0	30.5	6.7	100.0	
	중도적	2.8	25.1	36.4	27.1	8.6	100.0	
	진보적	4.3	23.2	35.8	28.1	8.6	100.0	
	매우 진보적	13.2	18.4	13.2	42.1	13.2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부표 25〉 집단별 갈등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분포

(단위: %)

구분		폭넓은 참여	투명한 정보	갈등법률 정비	갈등해결 문화확산	전체	$\chi^2$
전체		12.2	41.2	13.4	33.3	100.0	
성별	남성	12.1	41.5	14.3	32.1	100.0	2.055
	여성	12.2	40.9	12.5	34.4	100.0	
연령	20대	11.0	43.5	22.2	23.3	100.0	107.182***
	30대	11.6	45.1	16.5	26.9	100.0	
	40대	12.7	48.9	10.3	28.1	100.0	
	50대	12.5	35.9	9.8	41.8	100.0	
	60대 이상	12.8	31.2	9.2	46.7	100.0	
지역	수도권	11.7	42.7	13.4	32.2	100.0	2.060
	비수도권	12.6	39.7	13.4	34.3	100.0	
	서울	11.4	40.1	12.6	36.0	100.0	8.031
	경기, 인천	12.0	44.6	14.0	29.4	100.0	
	강원, 충청	12.6	39.1	15.5	32.8	100.0	
	영남	12.1	40.0	13.3	34.7	100.0	
	호남	13.5	41.1	12.1	33.3	100.0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	14.2	34.2	12.6	39.0	100.0	14.740
	중하층	11.8	41.3	14.7	32.2	100.0	
	중간층	11.6	43.1	12.6	32.8	100.0	
	중상층	11.4	44.9	14.3	29.4	100.0	
	상위층	15.8	42.1	15.8	26.3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1.6	31.3	13.0	44.1	100.0	57.163***
	200만원대	13.5	43.2	14.0	29.2	100.0	
	300만원대	10.5	41.8	12.9	34.8	100.0	
	400만원대	14.0	50.0	9.9	26.1	100.0	
	500만원 초과	11.0	45.5	17.2	26.3	100.0	
	무응답	14.4	35.1	10.8	39.6	100.0	
학력별	중졸이하	13.4	26.3	7.0	53.2	100.0	52.662***
	고졸	12.8	40.4	12.8	34.1	100.0	
	대학이상	11.7	44.0	14.9	29.5	100.0	
	무응답	5.6	33.3	5.6	55.6	100.0	
직업별	자영자(경영자)	12.2	44.9	12.2	30.7	100.0	25.523**
	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11.7	45.9	13.8	28.6	100.0	
	생산직 근로자	13.5	44.2	10.6	31.7	100.0	
	기타/무직/농업/어업/ 학생/가정주부	12.3	35.5	13.8	38.3	100.0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10.5	25.0	23.7	40.8	100.0	36.717***
	보수적	12.5	35.4	14.6	37.5	100.0	
	중도적	11.2	43.7	12.7	32.4	100.0	
	진보적	13.3	47.2	10.9	28.5	100.0	
	매우 진보적	13.2	50.0	15.8	21.1	100.0	

주: \* p&lt;0.05, \*\* p&lt;0.01, \*\*\*: p&lt;0.001

